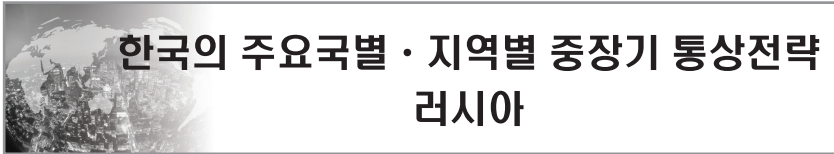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이재영 · 한종만 · 성원용 · 이광우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러시아 |

이재영 · 한종만 · 성원용 · 이광우

.....

서 언

현재 러시아는 체제전환기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정부가 출범한 2000년 이후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과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연평균 약 7%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온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국내산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약 1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무역 및 투자 협력과 더불어 TKR-TSR 연결로 실현될 ‘철의 실크로드’, 그리고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구현될 ‘에너지 실크로드’ 사업에서 한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향후 한국이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러시아는 조만간 가시화될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지만, 급변하는 러시아의 경제 및 통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 시장에서 굳혀온 한국 기업의 입지가 약화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지역별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 러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러시아 경제를 전공하는 국내 전문가로서 본원의 유럽팀에 소속된 이재영 부연구위원, 배재대학교 한종만 교수,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심의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홍중 박사, 원외의 김영진 박사, 윤성학 박사, 오영일 박사,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김연수 연구조원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포함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한·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재평가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통상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에 주요 부문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되고, 정부의 대러시아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가 추가적으로 연구되어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과 관련된 중심 연구주제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

국문요약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며,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 금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협소한 영역의 경제·통상 관계를 뛰어넘어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략이 투사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지의 하나이다. 만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의 방향을 유라시아대륙으로 확대한다면 러시아는 해양·대륙 복합화 전략 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TKR-TSR 연결로 구현될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 그리고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구현될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kroad)’ 사업에서 한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을 주요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확대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공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체제 구축 등 대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협력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에서 공격적인 수성(守成)의 시장진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대러

진출전략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태 지역 진출의 교두보이며, 러시아의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은 한국의 대륙 진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진출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로드맵을 실천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FTA가 단순한 관세철폐협정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국가간 시장통합 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한다면, 향후 한·러 FTA 체결 협상도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국간 긴밀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확대의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이익 공유라는 대원칙이 견지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이를 지지·후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TKR-TSR 연결 및 에너지 협력 분야 외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가 전도유망하다. 향후 한국 민간자본의 대러 투자 진출에서 교통인프라 개발사업도 중요한 투자시장이 될 수 있다. 기존의 TKR-TSR 연결사업 외에도 도로, 공항, 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도 투자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재자로서 러시아가 갖는 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 북한 내 경제적 이권 확보,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민간부분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상업적 타당성이 검토된 대상이라면 적극적인 해외 투자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북·러 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약 80억 달러의 북한의 대러 채무조정 문제가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러 채무탕감 문제의 해결은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협력에서 협력의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논의는 에너지 자원 그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한·러 양국 관계의 위상과 성격 규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에너지 협력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포괄적 경제협력의 성격을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간 ‘전략적 투자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금까지의 행태처럼 개별 프로젝트별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러시아측이 한국측의 투자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각종 사업(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과 하나의 통합된 package로 묶어서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너지 협력에서 기본적으로 한·러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간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리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점유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하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리 에너지 협력 구도에서 중국과 일본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송 및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다각적인 투자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TKR-TSR 연결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대화 방식 및 수준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압박·설득시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러 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장기간 러시아의 중개 역할에 의존하는 것도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이해관계의 균열지점을 찾아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한·러 양국 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자 환동해권 복합운송 활성화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환동해 항만·철도 복합운송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 항만도시와 철도거점도시 등을 연계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발전협의체 등을

주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라는 기본원칙을 공유하면서 장·단기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방향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인력교류와 공동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전략목표도 ‘차별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인력교류의 관심영역을 확산하기보다는 ‘고도화된’ 기술과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 R&D 인력을 확보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한국 기업과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축적한 러시아 인력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관이 소단위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난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단기적 전략목표와 장기적 전략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창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과학자 유치와 위탁 개발에 치중된 협력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로 핵심연구기관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기관별·지역별로 협력구조를 다면화·복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R&D 예산체계에 편성된 중앙 연구기관 외에도 목적지향적 R&D 프로그램과 국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아카데미를 필두로 한 다양한 연계조직 및 하부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외에도 대규모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극동·시베리아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민족네트워크 구축과 고려인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인’은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한국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재러 동포들과 한국 투자가와의 연대,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려인 기업가 간의 연대, 고려인들의 모국투자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러 비즈니스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현지 진출하는 기업인들에게 역량이 있는 고려인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채용 기능을 담당하거나, 고려인(기업가)과 한국 투자가와의 성공적인 연결 사례 등을 DB로 구축하는 사업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고려인 사회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러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러 경제협력이 21세기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담보하는 국가전략의 실현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푸틴 정부가 에너지, 자원 등 전략 분야에서 정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면, 양국의 민간기업 간 진행되는 투자협력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투자보장 등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장치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9
제2장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25
1. 경제체제 개혁과정 평가	27
2. 거시경제 현황	29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36
4.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성장 전망	44
제3장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51
1. 무역 현황 및 정책	53
2.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61
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61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68
3. 에너지정책	72
4. 지역경제협력정책	75
제4장 한·러 통상 현황 및 평가	81
1. 한·러 무역협력 현황	83

가. 한·러 무역 추이와 현황	83
나. 한·러 교역 품목 현황과 추이	88
2. 한·러 투자협력 추이와 현황	92
3. 한국의 주요 부문별 대러시아 통상 현황	97
가. 에너지협력	97
나. 철도협력	103
다. 과학기술협력	108
4. 평가와 전망	113

제5장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17

1. EU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19
가. EU와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19
나. EU와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122
다. EU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127
2.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30
가.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30
나.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133
다.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36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40
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40
나. 중국과 러시아 투자 현황과 전망	142
다.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144
4.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46
가.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46
나.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148

다.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50
5. 평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51
제6장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157
1. 통상목표와 추진방향	159
가. 해륙국가로의 귀환: 대륙을 향한 기회의 창	159
나. 소지역주의를 넘어 ‘열린 동북아’로	162
다. 유라시아(Eurasia)에서의 전략적 협력	164
2. 분야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	166
가. 시장확대	166
나. 투자확대	173
다. 에너지협력	178
라. 철도협력	182
마. 과학기술협력	189
바. 기타	193
제7장 결 론	201
참고문헌	209
Executive Summary	217

.....

표 차례

표 2-1. 러시아의 거시경제지표(2000~2006년)	30
표 2-2. 10대 거대 지역의 GDP 대비 GRP 비중	34
표 2-3. 경제활동 유형별 고정자본투자 구조	35
표 2-4. 러시아와 터키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 비교	38
표 2-5. 부문별 거대 해외 및 러시아 기업	39
표 2-6. 러시아 및 해외 기업들의 효율성 비교	40
표 2-7. 산업별 투자구조에 관한 국제비교(2001년 기준)	42
표 2-8. 국가 프로젝트들의 실행 지표	47
표 2-9. 공업부문의 변화	48
표 2-10. 2005년과 2020년 러시아 경제력 변화 전망	49
표 3-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63
표 3-2. 주요 투자국별 대러시아 투자	64
표 3-3.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65
표 3-4.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국가별 분포	70
표 4-1. 2006년 한국의 20대 수출입 대상국 현황	85
표 4-2.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 품목	89
표 4-3.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입 품목	90
표 4-4.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현황	95
표 4-5.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 현황(투자금액 기준)	96
표 4-6. 사할린 프로젝트 개발 현황	98
표 4-7.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 간 협력의정서 내용	100
표 4-8. 러시아의 전력수출에 필요한 시설 특징	103

표 4-9. TKR-TSR 연결사업 관련 주요 쟁점별 각국 입장	106
표 4-10. 주요국의 과학기술성과 지표	109
표 4-11. 러시아 산업기술의 세계 선도 분야	110
표 4-12. 한국 기업의 러시아 기술 접목 현황	111
표 5-1. EU-27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	119
표 5-2. 2000~2006년 EU-27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	120
표 5-3. 2007년 러시아 내 주요 EU국과 스위스의 해외투자 누계액	122
표 5-4.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EU 기업의 투자내역	123
표 5-5. 2000~2007년 미국과 러시아의 수출입 추이	131
표 5-6. 2007년 3월 말까지 러시아 내 미국의 투자와 투자 누계액	133
표 5-7.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러시아 투자 현황 및 계획	134
표 5-8.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부문에서 미국기업의 투자내역	134
표 5-9. 2000~2006년 중국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140
표 5-10. 1998~2006년 일본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146
표 5-11. 2006년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와 투자 누계액	148
표 5-12.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별 러시아 내 투자 현황 및 계획	149
표 5-13. 주요국의 대러시아 국가전략 기조와 통상전략 비교	153
표 5-14.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이 주는 시사점 비교	154
표 6-1. GTI 제9차 5개국 위원회 선정 「GTI 신규 프로젝트」	196

.....

그림 차례

그림 4-1. 한·러 무역 추이	84
그림 4-2. 한·러 무역이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86
그림 4-3. 한·러 무역이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87
그림 4-4.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추이	89
그림 4-5.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구조 추이	91
그림 4-6.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92
그림 4-7. 러시아의 대한민국 외국인투자 추이	94
그림 4-8. 한국의 대세계 및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	94
그림 4-9.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96
그림 4-10. ESPO 송유관 건설계획 및 원유 공급원	102
그림 4-11. 아시아횡단철도사업의 철로망 노선도	104
그림 4-12. 러시아의 북한철도 조사지역	105
그림 4-13. 한국의 우주개발 중기 계획	112
그림 6-1. 러시아의 경영환경 평가	166
그림 6-2. 대두만강개발사업(GTI)의 지역적 범위	197

제1장 서론



01

서론

러시아는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전환기에 발생한 혼란과 위기로 엄청난 정치·경제적 비용을 치른 후, 이제 명실상부한 시장경제의 골격을 갖추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천연가스 생산 1위, 석유 생산 2위인 러시아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2000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도래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면서, 2006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2007년 11월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약 4,500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러시아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고 에너지 부문에 집중된 국내 산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석유·천연가스 산업과 더불어 IT, 석유화학, 조선, 나노 및 자동차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낙후된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운송인프라 개발 계획 등 포괄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1억 4,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잠재력을 지

닌 시장이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구매력은 거의 서유럽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산층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으로까지 이러한 추세가 파급되고 있다. 유동성의 증가로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게르만 그레프 전 러시아 경제발전통상부장관은 2006년 세계경제의 2.6%를 차지한 러시아 경제의 비중이 2015년에는 3%, 2020년에는 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¹⁾

1990년 9월 말에 이루어진 한·러 수교 이래 한국은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쳐 러시아와 꾸준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물론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7년 말과 1998년 중반에 한국과 러시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06년 한·러 양국간 교역액은 97억 5,221만 달러를 기록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자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2006년 말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3억 7,156만 달러를 기록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제28위 해외 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이제 러시아는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 협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의 중요한 협력 대상국으로 변모하였다.

최근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만간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국의 대러 시장진출을 현저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철수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서구 및 일본 기업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러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따라서 향후 러시아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 RIA Novosti(2007. 7. 25).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은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러시아의 경제 및 통상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세부 목차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평가한다. 우선 현재 러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산업구조 및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고, 최근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을 분석한 뒤 러시아의 중장기 경제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무역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에너지정책, 지역경제협력정책 등 러시아의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지난 15년간의 한·러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부문별로 에너지개발협력, 철도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검토한 후, 한·러 통상협력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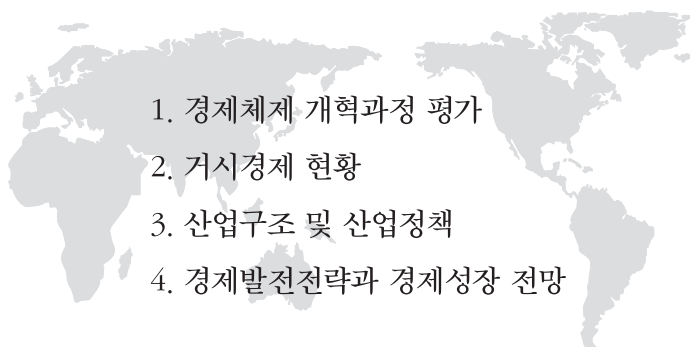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무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일단 한국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앞 장에서 살펴본 현황과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한 뒤에 주요 부문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1. 경제체제 개혁과정 평가
2. 거시경제 현황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4.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성장 전망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1. 경제체제 개혁과정 평가

러시아는 현대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단계에 걸친 심도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1990년대를 포괄하는 첫째 단계의 지향점은 경제적, 사회·정치적 파탄에 처한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는 것에 모아졌다. 따라서 그 당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국가도 그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기능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제도들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기본적인 소유관계를 포함하여 국가제도와 가장 단순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말까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었다. 즉 러시아 연방 헌법 채택과 연방관계 정비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제도들이 구축되었고, 비교적 안정된 통화와 균형예산을 가져다 준 거시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며, 사유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러시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특히 사적소유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그 다음 단계에 경제성장이 시작되는 토대를 구축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둘째 단계는 시기적으로 보면 주로 1999년에서 2003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경제 회복 및 성장의 시기였고, 전략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시경제 및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주로 현대 시장경제에 특징적인, 보다 정확히는 러시아적 특

성을 지향하는 경제제도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민법, 조세법, 예산법, 노동법 및 토지법, 새로운 연금법, 파산법 등이 채택되었거나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탈관료주의화(탈규제)가 진행되었고, 예산 간 관계(연방예산, 지역 및 지방자치), 외환관리법, 자연독점 분야 등에서 개혁 작업이 추진되었다. 안정화기금의 설립 및 그 기능을 조정하는 법규를 채택한 것이 재정안정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법률제정도 급속히 추진되었다. 최근 적극적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 분야의 안정이 달성되었고, 덕분에 연방단위에서 행정부-입법부 간 대립과 지방행정부-연방중앙 간 대립이 중단되었다.

경제활동의 법적 기반은 그것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연방과 지방 법률 간의 모순과 결함, 불일치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기술적 규제 법규가 변화되어, 현대적인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되었다. 비록 법적용 분야에서 일정한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예산 분야, 은행, 연금 및 사법제도, 교육 및 전력부문에서의 개혁이 시작되었고, ‘e-Russia(전자 러시아)’ 프로그램의 실행과 행정개혁이 시작되었다.

조세제도 개선에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조세법전 편찬이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VAT), 이윤세, 단일사회세, 개인소득세 등 기본 조세부담률이 인하되었다.²⁾ 경제에 대한 재정부담의 감소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러시아 경제의 국내투자 가능성을 확대했으며 가계소득을 높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경제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사업의 적극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투자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과 적극성이 현저히 증대하였다. 다양한 민간투자 촉진 메커니즘들이 개발되고, 자본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이 증대하고,

2) 푸틴 정부는 통합사회보장세의 기본세율을 35.6%에서 26%로 인하하고, 이윤세를 35%에서 24%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18%로, 개인소득세를 13% 단일세율로 개정함으로써 민간의 조세부담률을 낮춰 기업 활동을 촉진하였다.

법규가 개선되고 있다. 2006년에 국가투자기금이 설립되었고, 특별경제지역을 조직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제도에 특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들이 제공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혁신 프로젝트들에 대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게 될 벤처기업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활동 주체들의 대외 무역거래 지원 메커니즘, 이권계약 실현 메커니즘 등이 수립되고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의 정부 정책은 경제자유화 및 사업의 적극성을 촉진하는 조치에서 사회·경제적 과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변화되었는데, 이는 경제주체로서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와 관련된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은 상황을 안정시키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조치들이 실행되었으며, 이는 경제에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대러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거시경제 현황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를 겪고 나서, 2000년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체제전환기인 1990년대에 나타났던 지속적인 위기 상황은 1998년 이후 극복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긴 했지만, 개인소비 규모는 이미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시작되기 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990년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중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2006년 동안 러시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6.8%였다. 체제전환기 국

가들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능가하는 높은 성과라 할 수 있다.

■ 표 2-1. 러시아의 거시경제지표(2000~2006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2006 평균
실질 GDP 성장률(%)	10	5.1	4.7	7.3	7.2	6.4	6.7	6.8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7.4	10	2.8	12.5	11.7	10.7	13.5	11.2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12	8.7	11.1	15	10.4	11.1	10.2	11.2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	18.6	15.1	11.2	11.7	10.9	9.9	20.2
무역수지(십억 달러)	60.1	48.1	46.3	59.8	85.8	118.3	140.6	79.8
Urals 유가(달러/배럴)	26.6	22.9	23.6	27.3	34.4	50.6	61.1	35.2
대외부채(GDP 대비 %)	50	37	31	24	17	11	5	25
연방재정수지(GDP 대비 %)	1.4	3.0	1.4	1.7	4.3	7.5	7.5	3.8
환율(루블/달러, 연말기준)	28.2	30.1	31.8	29.5	27.7	28.8	26.3	28.9
고용(백만 명)	64.6	65.2	66.7	66.3	67.4	68.3	68.8	65.5
대출 이자율(연리, %)*	24.4	17.9	15.7	13.0	11.4	10.7	10.5	14.8
S&P 신용등급	B-	B+	BB	BB+	BBB-	BBB+	A-	-

주: * 1년 미만 비금융 기관들에 대한 루블 신용 이자율.

자료: Росстат; ИБ РФ; S&P; Fitch; Moody's.

1999년 이후 러시아의 거시경제는 상당한 정도로 안정화되었으며, 1998년 디폴트의 결과로 야기된 주요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즉 재정적자, 국가부채, 미지불, 바터거래 등과 같이 1990년대에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거시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약화되었으며, 통화 신용 부문과 경상수지 등 여러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환율변동폭이 축소되었고, 무역수지 흑자도 현저히 증가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수입 증대와 보수적인 재정정책 결과, 균형예산을 이루고 재정분야의 리스크가 감소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예산 및 통합예산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는 파리클럽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부채를 조

기에 상환하였다. 상당한 정도의 외화유입 덕분에 외환보유고도 급증하였다. 1999~2006년 동안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거의 2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11월 2일 현재 그 규모는 4,4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3위에 올라섰다.³⁾ 이 외에도 유가하락을 대비하여 에너지 수출에 의한 초과수입 가운데 일부를 공제하여 비축하는 안정화기금도 1,476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처럼 거시경제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덕분에 미시적 수준에서의 경제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이는 1999년부터 기업가들의 적극성을 회복시켜 주었다. 1990년대보다 유리한 상황이 형성된 조건하에서 기업가들은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환경하에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기업의 전략적 발전, 기업관리의 질적 제고 및 생산 효율성 증대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의 모든 생산자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200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성장을 체험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성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초기의 주요 요인 들로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의 루블화 평가절하, 가동되지 않은 유휴 생산설비의 존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세금 연체금 급감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러시아의 생산자들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련의 공업 부문들의 생산이 급증하고 기업 소득이 증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외에도 2000년대 초반에 실행된 기업들의 대정부 채무 재조정이 경제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조치는 많은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결제 시스템의 건전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 철강제품 등의 국제가격 상승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의 수출액이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기업들, 국가, 그리고 특정 부분의 국민들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FK-Novosti(2007, 11, 8).

위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의 작동에 근거한 경제성장 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되었다. 즉 수출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는 경제의 유동성을 확대시켰고, 경제주체들의 소득 증대는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유발하였다. 최근 8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하여 2006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투자 활성화도 최근 몇 년 간 나타난 긍정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도움이 된 요인들로는 소득 증대, 금융시장 호황, 러시아 정부의 신용등급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2000~2006년 동안 고정자본 투자증가율은 연평균 11.2%를 기록함으로써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였다. 러시아의 기업들은 다시 국제 자본시장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기업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본투자가 현저히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동안에 걸쳐 축적된 자본은 대외부채 상환,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 및 자본 반출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투자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부문과 지역의 발전속도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각기 다르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성장 불균등은 기업가들을 위한 사업 환경 차이, 생산요소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성 차이, 그리고 부문별 수익성 수준의 현저한 왜곡에 기인한다.

무역, 통신, 서비스 및 건설 부문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들의 수익성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이 국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성장과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1999~2006년 동안 연간 소매거래량은 8.8%, 건설은 9.9%, 유료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5.8% 증가하였다. 통신, 관광, 부동산거래, 호텔 및 요식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비교적 작은 편이며, 자본투자의 다수는 운송 및 상업통신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공업은 보다 덜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이후 공업생산 지표의 변동을 보면 일정한 주기성을 보여준다. 즉 2년 동안 8~9%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 2년 동안에는 3~4%의 증가율로 교체되는 등 주기적인 순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9~2006년 동안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율은 5.7%였다. 경제성장률보다 공업생산 증가율이 낮은 것은 러시아의 공업,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국립최고경제대학과 세계은행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위 20% 기업과 하위 20%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20~25배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업 부문 전체의 효율성에서 산업 내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⁴⁾

이와 같은 경향 때문에 GDP 생산구조에서 경제 부문들의 상이한 성장률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부문들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GDP 생산구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직 다각화는 실현되지 않은 채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석유 및 가스 수출이 무역과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대외 무역 구조에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들에서는 현저한 진전이 없다.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의 불균등이 최근의 중요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의 영향 아래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들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보다 유리한 발전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고용, 제품생산 및 자본투자의 이동이 촉진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모스크바와 주요 유럽향 항구 및 수출상품 생산지가 위치한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의 경제구조가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소연방 해체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가의 지리적 상태에 대해 꽤 잘 적응하고 있다. 과거 생산공장의 배치가 주로

4) Россий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на перепутье. Что мешает нашим фирмам ста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2007) 참고.

행정 · 지령성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에너지 및 운송 요금이 상대적으로 보다 비싸지면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보다 편리한 지역에 공장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5년 러시아의 GDP 구조에서 10대 거대 지역들이 차지한 비중은 43.3%였으나, 2004년에는 54.2%였다(표 2-2 참고). 이러한 추세는 지역간 사회경제 발전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발전지표가 낮은 지역들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발전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인프라 분야의 개선은 러시아의 중요한 발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2. 10대 거대 지역의 GDP 대비 GRP 비중

(단위: %)

1995년		2004년	
지역	GDP 대비 비중	지역	GDP 대비 비중
모스크바	10.3	모스크바	19.0
튜멘 주	7.7	튜멘 주	13.0
스베르들롭스크 주	4.1	모스크바 주	3.8
모스크바 주	3.4	상트페테르부르크	3.6
상트-페테르부르크	3.3	타타르스탄 공화국	2.8
사마라 주	3.2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2.6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3.1	스베르들롭스크 주	2.5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2.8	사마라 주	2.4
타타르스탄 공화국	2.7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2.3
페름 지방	2.6	크라스노다르 지방	2.2
합계	43.3	합계	54.2

자료: Росстат.

지난 8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투자 역시 부문별 ·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 · 에너지 및 광물자원 채굴, 교통 · 통신, 전력 · 가스 · 물의 생산 및 배분, 부동산 거래와 같은 유형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투자금액에서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2006

년에 이루어진 투자총액에서 이 4가지 부문들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였다. 상기 부문들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본투자 구조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제발전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첨단기술 부문에서 원료부문으로 투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알 수 있다. 2004년 투자구조에서 첨단기술 부문과 원료 부문의 비중이 각각 10.7%, 16.8%였으나, 2006년에는 각각 9.3%, 17.3%였다. 식료품산업과 금속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체에 대한 총투자금액의 0.2~1.5%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2004년에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대형 및 중형 기업들의 1/3 이상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지 못했고, 1/5 가량은 재생산을 하기에 불충분한 정도의 투자를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⁵⁾

표 2-3. 경제활동 유형별 고정자본투자 구조

(단위: %)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 임업	3.7	3.0	4.0	4.6	4.1	4.2	4.0	4.0
연료·에너지 광물자원 채굴	13.0	16.7	17.4	15.5	14.4	13.4	11.9	15.8
전력, 가스 및 물의 생산 및 배분	7.6	6.0	5.5	5.8	6.6	7.0	6.6	7.8
운송 및 통신	12.6	21.2	22.2	18.5	22.3	23.2	25.9	26.8
부동산 거래	25.3	15.2	14.7	18.1	17.6	17.7	16.6	10.6
식료품 생산	2.9	3.8	3.4	3.8	3.8	3.3	3.3	3.0
도소매 무역, 자동차 운송수단, 모터사이클,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수리	1.9	2.7	2.9	3.6	3.5	3.6	3.9	2.9
금속	2.6	3.1	3.3	2.7	2.9	3.6	3.5	4.3
건설	4.5	6.4	5.3	5.4	4.9	3.6	3.5	3.3
기타	25.8	21.9	21.4	21.9	19.8	20.5	20.9	21.4

자료: Росстат.

5) Особен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참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몇 년 간 러시아 경제가 거둔 성공은 아직까지 러시아 경제발전의 질적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성장은 대부분 지역과 산업이 집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아직 만들어 주지 못했다. 다수의 러시아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7년간 투자가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가 불충분한 상황이며, 특히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경제 부문들의 현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산시설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축적률(accumulation norm)이 최소한 25%까지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그것은 GDP의 17~18% 수준에 머물러 있다.⁶⁾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004년 러시아의 1인당 GDP는 세계 61위(1만 200달러)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개도국이나 일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과 비슷하고, 브라질(8,300달러), 터키(7,500달러), 인도(3,000달러), 중국(5,600달러) 등과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들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5년까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러시아의 1인당 GDP는 1만 6,800달러(기본 시나리오)에서 2만 1,000달러(목표 방안) 사이로 평가되는데, 이는 일부 유럽 선진국(포르투갈, 체코, 독일)의 2004년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러시아는 산업 및 수출 구조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 산업의 대부분은 석유 · 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과 군수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료 및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는 연구개발 잠재력을 완만한 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신기술의 상업화는 여전히 극히 제한

6) Особен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p. 16.

된 성과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개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 투자 적극성 고양 및 국내 상황의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대화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점차 러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희설비와 잉여 노동력이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공업 및 운송 부문에서 고정자산의 노후화 정도는 높은 수준에 있다.

물론 최근 7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1990년대의 체제전환 위기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적인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다각화하거나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적자원을 포함한 여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경제는 아직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고,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이 미약하며, 그 결과 수출 둔화 및 수입 급증 현상 등의 주요 문제점이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6년 글로벌 경쟁력 지표에서 125개국 가운데 62위였다. 2005년에 러시아는 동 지표상 53위였다.⁷⁾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경쟁력은 거시경제, 제도, 인프라, 보건 및 교육, 시장 효율성, 기술력, 사업 효율성, 혁신 등 8개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선진국과 많은 개도국들보다 러시아가 가장 뒤처지는 부분은 제도발전 지표, 무엇보다 기업관리 제도발전 지표와 이와 관련된 사업 효율성, 혁신 및 시장 효율성 지표에서 뒤떨어지고 있다.⁸⁾ 대체로 글로벌 경쟁력 수준이 유사한 러

7) World Economic Forum(2007) 참고.

8) 제도란 무엇보다 우선 기업제도 혹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구성 요소로서의 기업

표 2-4. 러시아와 터키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 비교

부문	러시아	터키
글로벌 경쟁력	62	59
거시경제	33	111
인프라	61	63
보건 및 교육	77	78
제도	114	51
시장 효율성	60	47
기술력	74	62
사업 효율성	77	39
혁신	59	51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7).

시아와 터키 등 유라시아 2개국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는 바로 제도발전 지표에서 터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 요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순위에서 114위를 차지하는 반면 터키는 51위이고, 사업 효율성 지표에서 러시아는 77위인 반면 터키는 39위에 랭크되어 있다(표 2-4 참고).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 지표에서 43위를 차지하면서 제도발전 지표에서는 34위, 사업 효율성 지표에서는 25위에 랭크되었다.⁹⁾

글로벌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활동과 연관된다. 1990년대 세계시장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분명히 나타났다. 예컨대 1980년대에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수가 71개, 자회사가 600개 증가했다면, 1990년대에는 각각 500개와 4,000개가 증가하였다.¹⁰⁾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대기업들은 그 성장세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자본금뿐 아니라 매출액면에서 여전히 서방의 주요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표 2-5 참고). 예컨대 전력회사에서는 5배, 석유산업에서는 14배, 기계제작 및 식품산업에서

부문과 관련된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 요인들이 부재하거나 그 효율성이 불충분한 경우, 축적된 인적자원, 자원 및 기술이 충분하더라도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9) World Economic Forum(2007) 참고.

10)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пыт США, Ориентир на глобализацию(2002), pp. 146-152.

표 2-5. 부문별 거대 해외 및 러시아 기업

부문/회사	판매액(십억 달러)	격차(배)
전력		
통일전력(러시아)	16	4.7
E.ON(독일)	75	
석유채굴		
루코일(러시아)	15	14
Exxon-Mobil(미국)	214	
금속		
세베르스탈(러시아)	1.8	19
Tissen-Group(독일)	35	
화학		
시부르(러시아)	1.5	20
BASF(독일)	30	
기계제작		
압또바즈(러시아)	4	44
General Motors(미국)	175	
식품		
빔-빌-단(러시아)	0.670	40
Pepsico(미국)	27	

자료: 기업통계에 기초하여 저자 계산.

는 40~44배나 뒤쳐지고 있다.¹¹⁾

러시아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은 노동생산력 수준 및 증가율이 뒤떨어진 데 있으며, 특히 생산 및 투자가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부문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매출액이 비슷한 러시아 및 해외 기업들을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표 2-6 참고).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매출액이 비슷한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효율성은 외국의 경쟁사들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부문들이 교체될 시기가 도래했다. 생

11) Кондратьев(2007) 참고.

표 2-6. 러시아 및 해외 기업들의 효율성 비교

부문/회사	매출액 (십억 유로)	고용자 수 (천 명)	고용자 1인당 매출액 (천 유로)
석유 및 가스			
가스프롬(러시아)	23	330	70
NorskHydro(노르웨이)	20	43	465
시브네프치(러시아)	4,5	44	102
Tupras(터키)	5,3	5	1,060
유색금속			
노릴스크 니켈(러시아)	4,3	97	44
Umicore(벨기에)	4,6	11	418
자동차공업			
압또바즈(러시아)	3,5	153	23
Porsche(독일)	5,6	11	509

자료: *Ведомости*, 24 июня 2004г.

산구조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들(연료 · 에너지집합체, 금속)이 활력을 잃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 부문들의 성장률이 5%를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품, 화학, 목재, 건설자재, 일부 기계제작 및 첨단기술 산업, 그리고 건설 및 통신 부문 등 7%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부문들이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부문들이 지배적인 비중을 점하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는 연평균 7%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에서는 정부와 경제부처에서 산업정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있고,¹²⁾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12)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최근 몇 년 간 나타난 공업성장률의 현저한 둔화, 고정자산(특히 사회간접자본)의 급속한 노후화, 시장개방하에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 및 시장경제에 대한 그들의 미약한 적응력으로 인한 수출의 둔화와 빠른 수입 증가율, 석유가스 부문 중심의 경제구조, 낮은 기술발달 수준, 지역 간 및 지역내 불균형 심화, 숙련노동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유래한다.

현대 산업정책의 특징은 산업별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 사업이 매우 다각화된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정책 분야에서 국가의 주요 역할은 기업들의 경쟁력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가장 현실적인 산업정책 방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으로의 진출, 혁신활동의 강화, 과학집약적 사업의 발전,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가속화, 제도적·법적 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및 산업소유권 보호, 노동력의 질과 숙련도 향상 등이 될 것이다.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업계 대표들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기술 및 진출 시장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강점 및 약점, 경쟁력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베르스탈사의 Arcelor사 인수 계획이 무산되고, 러시아 기업들이 일련의 외국기업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최근 러시아에서는 ‘국내 챔피언’ 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자본수출 및 해외자산 취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러시아의 산업발전정책을 수립할 때 러시아 경제의 두 가지 최대 부문인 원료산업과 첨단산업을 최적으로 결합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일련의 구조적 특성에서 러시아는 원료(채굴) 산업이 발전된 일부 선진국들과 유사하다.¹³⁾ 예를 들어, 부문별 고정자산 투자구조로 볼 때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유사한데, 러시아의 채굴산업, 가공산업 및 전력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52%, 38.3%, 9.7%이고, 노르웨이에서는 각각 54%, 37.8%, 8.1%이다. GDP 구조로 보면 러시아는 호주와 비슷하다. 즉 러시아에서 채굴산업, 가공산업 및 전력산

13) Особен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p. 16.

업의 비중은 GDP의 27.1%, 63.1%, 9.8%이고, 호주에서는 각각 25%, 62%, 13%이다. 부문별 누적된 고정자산의 구조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과 유사한데, 러시아에서는 채굴산업, 가공산업 및 전력산업의 비중이 19.8%, 55.6%, 24.5%이고, 미국에서는 각각 19.7%, 47.6%, 32.7%이다(표 2-7 참고).

■ 표 2-7. 산업별 투자구조에 관한 국제비교(2001년 기준) ■

(단위: %)

	채굴산업	가공산업	전력산업
투자구조			
러시아	52.0	38.3	9.7
노르웨이	54.0	37.8	8.1
GDP 구조			
러시아	27.1	63.1	9.8
호주	25.0	62.0	12.9
고정자산 구조			
러시아	19.8	55.6	24.5
미국	19.7	47.6	32.7

자료: Особен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혹은 산업구조의 다각화보다는 오히려 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에 더 많은 첨단기술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경제성장의 가속화 가능성은 첨단기술 및 정보경제의 급속한 발전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여전히 고용과 소득의 주된 부분이 집중될 전통적 부문의 근본적 현대화와 관련된다.

선진국 및 일련의 개도국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수준의 효율적인 대기업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상당한 정도로 새로운 첨단기술 부문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리스크는 대기업들의 전통적인 책임분야라는 사실을 세계적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R&D에 대한 투자 가운데 70%까지 대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지출의 45%가, 일본에서는 30%가 대기업들에 해당한다.¹⁴⁾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에서 대기업들의 형성 과정은 국가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러시아도 기술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전모델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항공, 국방, 자동차제조, 조선,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기업들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서 국가가 대주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한국, 중국 등이 선점한 기술집약적인 소비재의 생산이 아니라 첨단기술 투자재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선진 시장경제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경제·사회 및 정치적 상황의 현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의 산업정책 수행에서 일정한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기업구조 형성의 완성, 필요한 시장제도의 형성, 재원의 축적, 시장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의 창출로 제한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대기업의 과제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국가에 재원이 축적되고, 시장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의해 드러나는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정책 원칙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 보다 깊이 통합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발전은 향후 대내외 제약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의 적응력, 정보 인프라, 국가 및 기업 관리의 질과 효율성, 인적자원의 질 등에 대한 일정한 요구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주로 무역, 에너지, 운송, 주택건설과 같이 협소한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 화학, 목재산업,

14) Kaplan(2004), pp. 2~9.

기계제작 부문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향후 10년간 제도적 시스템의 질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유와 신뢰가 경제주체들의 동기부여와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적극성 고양 및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효율적인 기업이 없이 성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 산업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필요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세계의 주요 생산자들과 경쟁할 능력이 있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과 회사들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의 다양한 산업정책 모델들 가운데 혁신성장 모델, 즉 자국의 수출업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시장 보호를 바탕으로 강력한 수출지향 글로벌 기업들을 창설하는 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성장 전망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의 거시경제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고,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높은 국제원자재 가격 조건 속에서 형성된 러시아의 경제모델은 ‘네덜란드 병’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가격 및 품질에 관한 러시아 생산자들의 낮은 경쟁력 문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8~2011년은 러시아의 경제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경쟁력 있는 설비 및 제품의 부족과 관련된 장애들이 급격히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WTO 가입 틀 내에서 이행기

로 간주된 국내 시장 보호조치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시기까지 연료·에너지 자원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 정도 축소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경제성장이 정체될 것이다.

최근 러시아 기업은 생산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위한 조건과 인센티브 창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과제로서 새로운 성장 방향 모색, 혁신 도입, 판로 확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정책의 질과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은 경제발전에서의 질적 변화를 수행하고, 생산 현대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의 국내 경제발전 추세는 기업의 사업 환경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깊이 통합되었으며, 조만간 예정된 WTO 가입은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줄 것이다. 이는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서 러시아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들은 효율성과 기업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러시아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 현대화의 성과와 속도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세계적 경험에 입각하여 자체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모델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모델은 본연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이와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필연성과 경쟁력을 입증한 보편적인 제도들을 가미해야 할 것이다.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 증대와 현대화 문제는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해결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공동체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문제점들이 누적되었고, 그 해결은 상당 정도 국가정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는 러시아와 세계 선진국들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경제정책을 요구한다. 사실상 이는 현대 후기 공업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기 공업사회로의 도약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진 장기 경제정책은 현대 경제성장의 특징인 원칙적으로 중요한 일련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¹⁵⁾

2006년 초 러시아 연방의 중기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2006~2008년)이 확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현대화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경제 개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다수의 조치들은 2007년 3월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중기 발전전략의 목표는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경제의 창설로 정해졌다. 효율적인 경제규제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사회·경제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 단계 주요 경제정책의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사회제도의 현대화와 투자활성화 촉진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전에 공포된 교육, 보건, 국가관리 및 학술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부·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메커니즘의 개발, 은행 부문의 발전, 중소기업 지원, 조세정책의 개선, 접근 가능한 주택시장 형성, 소유권 보호 등과 같은 과제들도 제시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중기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첫째, 국가관리의 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조건이 개선되고, 둘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조건과 인센티브가 창출되며, 셋째, 국내외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제도 및 인프라가 구축되고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경제부문들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째, 전통적인 경제 부문들의 발전전략 혹은 러시아의 현재 경제성장 및 생존을 보장하는 부문들의 경쟁력을 향상

15)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참고.

시키는 전략이다. 2006~2015년 동안 GDP 증가에 대한 이 전략의 기여도는 연간 1.1~1.2%포인트 수준으로 평가된다. 둘째, 혁신 부문의 발전전략 혹은 원료 부문에서 혁신 부문의 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경제 발전전략이다. 2006~2015년 동안 이 전략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비해 GDP를 연간 0.8~1.1%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2011~2015년에 과학집약 제품과 ‘지식 경제’의 GDP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기여도는 전통적인 부문의 기여도와 비견될 수 있고,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기여도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질적 기여도는 그 양적 효과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표 2-8. 국가 프로젝트들의 실행 지표

(단위: 연간 GDP 성장률, %포인트)

부문	2006~2010	2011~2015	2006~2015
전통적인 경제부문	0.8~1.0	1.4~1.6	1.1~1.2
석유가스 산업 발전전략	0.4~0.5	0.8~0.9	0.6~0.7
정유부문	0.2~0.3	0.5~0.6	0.4
가스부문	0.15~0.2	0.3	0.2
운송전략	0.2~0.3	0.4~0.5	0.3
농공복합체	0.2	0.2	0.2
신경제 부문	0.6~0.7	1~1.45	0.8~1.1
과학발전 및 혁신 부문 전략	0.15~0.2	0.3~0.55	0.3~0.4
정보화 및 통신	0.2~0.25	0.4~0.5	0.3~0.4
군산복합체 및 항공산업	0.2~0.25	0.3~0.4	0.25~0.3
인적자본 개발	0.1	0.15~0.2	0.15
담보 및 주택 건설	0.1	0.15	0.15
전략 기여도	1.6~1.7	2.75~3.0	2.2~2.35
경제성장률	6.1~6.2	7~7.25	6.6~6.8

자료: Прогноз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6).

이러한 전략의 실행 효과 및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고려하면, 부문별 공업생산구조 변화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부문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시나리오 I에서는

이 부문의 비중이 2005년의 35.4%에서 2015년에 43.3%로 증가하고, 혁신적인 시나리오 II에서는 45~46%까지 증가할 것이다.¹⁶⁾

표 2-9. 공업부문의 변화

(단위: 연평균 성장률, %)

시나리오	2003	2004	2005~2007		2008~2011		2012~2015		2004년 대비 2015년(배수)	
			I	II	I	II	I	II	I	II
공업	7.0	6.1	4.3	5.3	3.9	5.7	3.6	5.6	1.52	1.81
연료 · 에너지산업	7.0	5.5	1.9	2.4	0.8	1	0.5	1.3	1.11	1.17
원자재 생산부문	5.9	4.8	3.6	4.4	3.6	4.9	3.2	4.5	1.45	1.64
최종재 생산부문	7.2	7.9	5.8	7.3	6.1	8.5	5.2	7.9	1.84	2.32

자료: Прогноз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6).

원자재를 생산하는 부문의 비중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5년의 31.6%에서 2015년에는 30.5~31%로 줄어들고, 혁신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9~30%까지 줄어든 것이다. 2005~2010년 기간에 경제성장에 대한 석유산업 기여도의 약화는 철강, 화학, 목재펄프 산업 등 원료 부문의 발전에 의해 상당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료 부문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위해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7~2008년 이후 국내 투자 및 외국인투자의 증대와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반하여 자동차제조 및 첨단기술 산업의 역할이 현저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러시아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러시아의 GDP는 세계 GDP의 3.2%를 점유하게 되어, GDP 규모면에서 세계 5위에 이를 것이며,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만 6,8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6)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b)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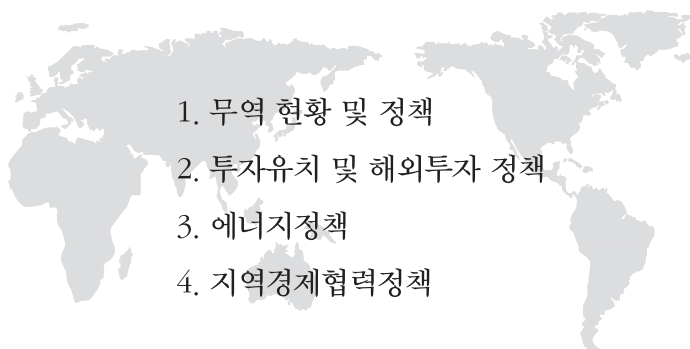
■ 표 2-10. 2005년과 2020년 러시아 경제력 변화 전망 ■

지 표	2005년	2020년
대세계 인구 비중(%)	2.2	1.9
대세계 GDP 비중(%)	2.1	3.2
GDP 규모 세계 순위	10	5
1인당 GDP (달러, PPP 기준 2005년 가격)	11,000	26,800
1인당 GDP 세계 순위	53	40

자료: ИМЭМО(2007).

제3장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1. 무역 현황 및 정책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결과 러시아 경제에서 대외 경제관계의 의미가 현저히 증대하였다. 러시아에서 채굴되는 석유의 절반 가량과 천연가스의 약 1/3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 수입 비중은 1% 정도로 아직 미미한 편이다.¹⁷⁾ 러시아는 세계경제로의 완전한 통합을 러시아의 수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무역의 지리적 다각화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유럽연합(EU)으로, 확대된 EU 국가들이 러시아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과의 교역액은 러시아 총교역액의 16%에 불과하고, 북미와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7%에 그치고 있다. 이때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의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를 넘지 않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는 그 수치가 0.4%에 불과하다.¹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의 대외경제 분야에 새로운 가

17) Смирнов(2006), p. 125.

18)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07) 참고.

능성을 열어주고 세계 경제발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증대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의 대외경제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러시아는 CIS 국가, 중국, 인도 등 급속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통적인 판매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운송 및 농업기계 제작, 화학, 통신, 건설 등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시장들이 발전하고 있다. 둘째, 정보기술, 통신, 운송, 에너지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러시아의 수출업자들에게 유망한 틈새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는 국가들로부터 러시아의 원료 및 연료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넷째, 협력관계 강화에 기초하여 CIS 국가들과 유럽에서의 통합과정을 심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 다섯째,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품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여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러시아의 운송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 여섯째, 러시아는 세계 경제 및 인구에서 차지하는 명목상 비중을 훨씬 능가하는 대외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경제 문제에 관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2008~2010년에 중요한 상품시장에서 가격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연료·에너지 상품이 수출액의 거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러시아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러시아 수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및 금속 가격이 보다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CIS 국가들의 경우, CIS 역외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비해 러시아 상품의 품질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그동안 주로 러시아에 의존해오던 무역을 CIS 역외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요인들, 예컨대 CIS 국가들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의 인상과 같은 요인은 방향이 다른 두 가지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러시아의 수출액을 증대시켜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천연가스 수출을 재분배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러시아를 통과하여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유럽 쪽 CIS 국가들로 공급되고, 러시아산(産) 가스는 CIS 역외국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러시아의 석유수출은 2억 5,400만~2억 6,9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2008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에 추가적으로 석유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정유공장들의 구조조정 사업, 고품질의 석유제품 생산 증대, 새로운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공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예정되어 있는 조치들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시장의 수요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2006년에 1억 350만 톤이었던 석유제품 수출량을 2010년에는 1억 1,200만 톤까지 증대하는 조건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수출은 유럽 시장의 가스 수요와 연간 천연액화가스 생산량이 960만 톤으로 추정되는 ‘사할린-2’ 프로젝트의 수출 개시에 근거할 경우, 2006년의 2,028억 입방미터에서 2010년에는 2,230만 입방미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⁹⁾

러시아 경제발전통상부의 전망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2010년까지 기계, 장비 및 운송수단 수출(1.3배 이상)과 식료품 및 농업원료 수출(1.4배)이 가장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구조에서 기계, 장비 및 운송수단의 비중은 2006년의 5.8%에서 2010년에는 7.9%로 증가하고, 화학공업 제품은 5.5%에서 6.3%, 식품 및 농업 원료는 1.8%에서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금속 및 금속제품의 수출은 2006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고, 목재 및 셀룰로오스·종이 제품은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²⁰⁾

수입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증가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루블화 절상률의 둔화로 인해 국산품의 경쟁력이 증

19) 가스프롬사의 전망치임.

20)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참고.

대되고,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근본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시장의 일부가 수입에 의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국산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러시아의 상품수입 증가율은 2006년의 24%에서 2010년에는 9.9%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 CIS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 기간 동안 러시아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3.7%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²¹⁾

최근 러시아 금속산업이 새로운 생산설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료·에너지 및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요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국산품으로 충족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2010년에 러시아의 금속 수입규모는 2006년 수준에 비해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업 발전이 포함된 소위 ‘국가 농공복합체 발전’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 국내 생산자들이 육류 공급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가 다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산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밀수품 및 위조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통관제도를 강화하는 조치가 실현되면서 경공업 제품의 수입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에 설비에 대한 수요의 약 3/4를 보장해 주었던 투자재 수입은 대체로 2010년에도 실제 그 정도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재 수입증가율은 2006년의 38.7%에서 2010년에는 13.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재 상품은 점차 국내 시장에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수입증가율은 2006년의 20.7%에서 2010년에는 9.4%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제작 제품의 수입은 2010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산품의 품질 향상과 관련된 국내생산이 회복되면서 2009~2010년 동안 수입

2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참고.

이 급속히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현존 기업의 발전, 그리고 조립생산의 발전은 러시아의 일상 가전제품, 자동차제조 제품,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줄 것이다. 또한 농기계 및 항공기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활발한 현대화 사업은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억제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외무역의 대상국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여전히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EU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들이 될 것이다.

특히 EU가 러시아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남게 될 것인데, 현재 그 비중은 러시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교역 당사국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대EU 수입구조에서 기계가 36%, 화학제품이 14%, 완제품이 11%, 운송장비가 10%, 산동물과 식료품은 각각 7%씩 차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대EU 수출에서는 연료·에너지 상품이 계속해서 지배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완제품은 9%, 다른 원료상품은 6%, 화학제품은 3%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EU에 대한 최대 철강제품 공급국이며, 최대 유색금속 공급국 가운데 하나이다.

러시아의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기에 EU와의 교역량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North Stream)의 건설은 러시아의 수출량을 증대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수입관세 인하, 그리고 서비스 시장 접근 자유화 의무 조항의 효력 발생 등이 러시아와 EU 간 무역 증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U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공동경제공간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경제공간의 목표는 EU와 러시아 간에 개방된 통합시장을 창설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EU와 특정 부문의 산업정책에 관한 대화를 포함, 경제개혁 및 기업정책에 관한 대화를 심화하여 기업 활동의 전반적

인 조건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아시아 지역의 가치가 부단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에 에너지 자원과 군수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식품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를 아시아 국가에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이다. 루블화 가치의 실질적인 인상,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로화에 비해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의 더 높은 강세는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증대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동북아를 비롯한 아태지역의 주요 다자간 지역협력체(APEC, ASEAN, SCO)에서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활동은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의 무역 및 경제적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켜 줄 것이다.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일련의 ASEAN 국가들이 러시아의 거대 협력대상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 경제정책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25~30년 동안에 걸쳐 나타나는 러시아의 고유한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수출은 국제 가격변동에 민감한 원료상품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다각화 정도가 미약하다. 둘째, 러시아 기업들이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메커니즘과 조직 형태는 생산요소 분배와 관련된 최신 수단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무역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분야, 특히 세관행정 분야에서 투명성이 낮고, 거래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러시아의 기업이 세계경제관계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즉 러시아 기업의 국제분업 및 협력체제 참여 형태의 다각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활성화 및 국제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러시아의 해외투자 확대, 러시아의 상품·서비스·자본의 접근 조건을 자유화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의 주요 대외 경제정책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상품 및 부문별 무역구조 다각화와 러시아 기업들의 국제무역 시스템 참여를 위한 현대적 참여 메커니즘의 개발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외 경제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세계 원료 및 연료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외무역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수출의 확대가 수출 다각화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운송서비스, 특히 육상 및 항공 운송을 포함한 통관서비스 부문에서 운송서비스의 발전이 중요하다. 이 분야의 주요 작업 방향은 관세제도의 적용 범위 내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과운송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있다.

수출 다각화 수준이 근본적으로 증대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광물원료 및 금속제품,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료수출도 상품 및 지리적 측면의 다각화 수준을 제고하고, 새로운 판매시장의 개척, 무역 및 시장 접근 메커니즘의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품의 가공 수준을 높이는 일은 수출자유화, 비전통적 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한 수출 인프라(예컨대 액화가스 수출)의 발달,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기초한 자체적인 해외 판매망과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러시아 기업들이 세계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생산요소, 특히 국제 자본교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외국 파트너들과의 무역 및 생산관계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해외 국가들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글로벌경제하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때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러시아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하는 조치와 특히 항공산업에서 합작기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의 WTO 가입은 러시아 기업들이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는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통해 첫째, 시장경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적 · 제도적인 장치들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고, 둘째, 타국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각종 무역장벽들을 제거하여 국제시장에 보다 확실히 접근할 수 있으며, 셋째, 생산협력을 포함한 선진적인 국제협력체제로 편입할 수 있는 유리한 전제조건을 창출할 수 있으며, 넷째, 현대적인 생산 및 관리기술의 수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직접투자 형태로의 외자유치를 증대할 수 있으며, 다섯째, WTO의 무역분쟁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여 국내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는 보다 확실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WTO 가입을 대외 경제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정치 · 경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2004년 5월 러시아는 최대 협상국의 하나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 WTO 가입을 위한 양자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006년 11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는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그루지야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자협상을 완료하였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빠르면 2008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자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자간 무역규범 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증진과 투자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러시아는 이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기업들이 국제무역에 통합되기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생산요소 이동이 무역 및 투자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경쟁력 향상의 요인임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대외무역 활동과 관련된 방향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운송, 통신 및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인프라 요소의 개발, 컨설팅 및 법률적 지원과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에서 이익 대변, 광고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수출협회(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협력 메커니즘 개발, 그리고 수출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시장의 발달 등이 그것이다.

교역 파트너들의 확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시장의 모색은 양자관계 발전과 지역적 무역·정치적 블록에 러시아 연방의 참여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지역연합의 틀에서 통합과정과 무역자유화 및 생산요소 이동에 대한 참여는 세계시장 내에서 대외 경제관계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양자관계의 틀 내에서 수출의 지역적 구조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판매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 무역대표부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수출업자들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무역정책 및 법적 지원 보장, 러시아의 수출업자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를 밝혀내는 조치의 실행,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지원, 무역 파트너들이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통제 등이 그것이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프로젝트, 공동생산 형태를 포함하여 제3국에서 이들 국가의 기업과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오늘날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시장경제체제전환국들은 이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물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치국에

자본 공급을 통한 해당산업의 생산증대와 고용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경영기법, 노하우 이전 등 무형의 생산요소를 통한 경영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대상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초기에 국내자본의 부족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재원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에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외국인의 대러시아 투자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약하였다. 이는 체제전환의 초기에 발생한 혼란으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2~1993년 동안 러시아로 유입된 외국인투자는 연간 약 7~8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²²⁾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4년에는 10억 5,000만 달러, 1995년에는 29억 8,000만 달러에 그쳤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과 이듬해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푸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01~2005년 동안 연평균 약 37.5%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6년 대러 외국인투자는 551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2006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 경제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누적총액은 1,429억 2,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직접투자는 47.5%인 678억 8,700만 달러, 포트폴리오투자는 3.4%인 49억 200만 달러, 기타 투자는 49.1%인 701억 3,7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말 누적액 기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들은 키프로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미국, 버진군도,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으로 이들 10개국이 러시아에 누적된 외국인투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

22) 박상남 외(2007), pp. 450~451.

표 3-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연도	총투자액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1994	1,053	(100.0)	549	(52.1)	0.5	(0.05)	504	(47.8)
1995	2,983	(100.0)	2,020	(67.7)	39	(1.3)	924	(31.0)
1996	6,970	(100.0)	2,440	(35.0)	128	(1.8)	4,402	(63.2)
1997	12,295	(100.0)	5,333	(43.4)	681	(5.5)	6,281	(51.1)
1998	11,773	(100.0)	3,361	(28.5)	191	(1.6)	8,221	(69.8)
1999	9,560	(100.0)	4,260	(44.6)	31	(0.3)	5,269	(55.1)
2000	10,958	(100.0)	4,429	(40.4)	145	(1.3)	6,384	(58.3)
2001	14,258	(100.0)	3,980	(27.9)	451	(3.2)	9,827	(68.9)
2002	19,780	(100.0)	4,002	(20.2)	472	(2.4)	15,306	(77.4)
2003	29,699	(100.0)	6,781	(22.8)	401	(1.4)	22,517	(75.8)
2004	40,509	(100.0)	9,420	(23.3)	333	(0.8)	30,756	(75.9)
2005	53,651	(100.0)	13,072	(24.4)	453	(0.8)	40,126	(74.8)
2006	55,109	(100.0)	13,678	(24.8)	3,182	(5.8)	38,249	(69.4)
누적 잔액 (2006년 말)	142,926	(100.0)	67,887	(47.5)	4,902	(3.4)	70,137	(49.1)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청.

자국 가운데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영국령 버진군도, 스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중 상당 부분은 러시아인의 자본이 회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에서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에 이루어진 주요국의 대러시아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키프로스의 경우 총투자의 39.1%를 제조업(38.5억 달러), 26.4%를 부동산(26억 달러), 23.3%를 코크스 및 석유제품 생산(22.9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네덜란드는 55.2%를 광물자원 개발(36.4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25%를 통신(16.5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룩셈부르크는 50.7%를 도소매업(30억 달러), 20.5%를 통신(12.1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영국은 총투자의 52.1%를 도소매업(36.6억 달러), 22.2%를 제조업(15.6억 달러)에

표 3-2. 주요 투자국별 대러시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년 말		투자유형			2006년 투자액
	누적 총액	비중(%)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총투자액	142,926	(100.0)	67,887	4,902	70,137	55,109
주요 10개국	123,871	(86.7)	58,502	4,245	61,124	43,853
키프로스	32,276	(22.6)	22,796	1,358	8,122	9,851
네덜란드	23,451	(16.4)	19,234	62	4,155	6,595
룩셈부르크	22,870	(16.0)	587	203	22,080	5,908
독일	12,260	(8.6)	3,320	1,692	7,248	5,002
영국	11,801	(8.2)	2,907	169	8,725	7,022
미국	7,698	(5.4)	4,588	507	2,603	1,640
버진군도	4,259	(3.0)	2,410	102	1,747	2,054
프랑스	3,699	(2.6)	1,058	0.0	2,641	3,039
스위스	2,832	(2.0)	1,353	151	1,328	2,047
일본	2,725	(1.9)	249	1	2,475	695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

투자하였고, 독일은 37.6%를 도소매(18.8억 달러), 34.8%를 금융(17.4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프랑스는 55.8%를 광물자원 개발(17억 달러)에 집중하였고, 24.4%를 금속(7.4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스위스는 총투자의 69%를 제조업(14.1억 달러)에, 일본은 75%를 광물자원 개발(5.2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특히 식료품(2.5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15.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다수 연구자들에 의하면, 2006년 러시아의 기록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는 몇 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²³⁾ 무엇보다 우선 외국은행에 계좌 개설 조건의 완화, 외환수입 강제매각 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외환법의 자유화와 루블화 강세이다.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 철폐는 그동안 러시아 기업가들이 해외에 유출한 자본을 본국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루블화의 급속한 평가절

23) Кузяев(2007), pp. 38~44 참고.

표 3-3.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항 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말 누적투자 잔액	
	비중	비중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금액/비중	100.0	100.0	100.0	13678	100.0	67887	100.0
농업, 임업, 수렵	1.5	0.9	0.9	190	1.4	703	1.0
광물자원 채굴	28.9	43.3	30.7	4521	33.1	16064	23.7
- 연료, 에너지 자원	28.5	42.3	29.9	4313	31.5	15536	22.9
제조업	20.5	30.9	46.1	2602	19.0	26189	38.6
- 코크스, 석유제품생산	0.0	0.1	27.2	7	0.05	4108	6.1
- 식료품, 음료, 연초제조	5.3	3.6	4.2	629	4.6	4156	6.1
- 목재 가공	4.2	3.5	2.5	296	2.2	1262	1.9
- 비금속 광물	1.9	4.8	3.0	481	3.5	1658	2.4
- 철강, 금속제품	4.1	12.1	1.3	221	1.6	10504	15.5
전력, 가스, 상수도 생산 및 공급	0.04	0.001	1.1	50	0.4	261	0.4
건설	1.1	0.9	0.9	271	2.0	759	0.1
도소매, 운송수단/전기전자제품 수리	22.7	10.2	5.9	840	6.1	4490	6.6
호텔, 레스토랑	0.2	0.2	0.2	21	0.2	243	0.4
운송, 통신	4.1	2.1	1.9	379	2.8	4154	6.1
금융	3.2	3.8	4.5	1502	11.0	5493	8.1
부동산, 임대, 중개	16.9	6.9	7.1	3210	23.5	8871	13.1
기타 공공, 사회, 개인 서비스	0.7	0.7	0.6	88	0.6	577	0.85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

상은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저렴한 해외 차입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세계적인 원료 및 에너지 시장 붐도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증대시킨 요인의 하나였다.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투자는 주로 강력한 원료기지를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의 자산 매입을 목표로 하였다.

2006년 4월 러시아 경제발전통상부와 외국인투자자문회(FIAC)를 대신하여 러시아 투자환경을 조사한 PBN사가 155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3년 내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

답한 외국인투자자가 무려 91%에 달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과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8%와 1%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시장이 지니는 가장 큰 투자매력으로 시장규모(90%)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82%)을 들었다. 이 외에 값싸고 우수한 인적자원(57%), 정치적 안정(48%), 거시경제 안정(46%)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설문 응답자들은 주된 투자 장애 요인으로 관료주의와 부처의 형식주의(red tape)로 대변되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84%), 부정부패(78%) 등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불완전한 법률체계(71%),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67%)을 들었다. 또한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기업가들은 아직까지 러시아는 국제 윤리 및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나라로 평가하였다.²⁴⁾ 또다른 설문조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007년 2~3월 동안 Ernst & Young사가 전세계 809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들 가운데 5위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를 중국(응답자의 48%)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33%), 인도(26%), 독일(18%), 러시아(12%) 순이었다.²⁵⁾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고도 경제성장 덕분에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특히 정치 및 거시경제 지표는 과거와 같이 장애요인이 아니라 투자 촉진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취약한 법률적 · 행정적 · 제도적 장치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대러시아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남아 있다.

최근 러시아는 전략적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석유·가스를 비롯한 전략산업에 대한 지분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전력, 다이아몬드, 석탄 부문과 기타 자연독점기

24) 박상남 외(2007), pp. 469~470.

25) FK-Novosti(2007. 7. 9).

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지분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²⁶⁾ 이러한 정책은 투자의 다각화를 촉진하여,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NCTAD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러시아의 화학, 서비스 및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부문들은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최근까지 채굴 부문에 유치된 정도의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활성화되기 시작된 소비 부문에 대한 투자증대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 분야, 무역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이 은행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을 포함, 금융 부문과 현재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전력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²⁷⁾ 물론, 이러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러시아 정부가 연구개발(R&D) 촉진, 기술의 상업화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신용제도 구축 등 경제구조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할 경우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러시아 정부는 반대로 경제구조의 다각화 노선에 인위적인 장벽을 구축하였다. 예컨대 러시아에 없는 원료가공 첨단기술설비를 수입할 때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제거하는 국가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대외경기 변동이 심한 원료 및 연료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에서는 2007년 7월 현재 1,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화 기금을 발전예산으로 이전시켜 러시아 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²⁸⁾

26) 예컨대 외국인 지분취득은 국영가스기업인 가즈프롬 및 자회사인 경우 20%, 독점 국영전력회사인 통합 전력(UES)은 25%, 은행은 12%, 보험은 15%, 언론 및 방송사는 50% 미만으로 제한된다(*Kommersant*, 2006. 3. 1).

27) Кузяев(2007), pp. 38~44.

28) Глазьев(2007), pp. 30~51 참고.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최근 러시아는 합법적인 자본수출 규모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2005년 러시아는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 세계 15위, 그리고 2006년 초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에서 17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2005년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45억 달러였다.²⁹⁾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그보다 훨씬 많은 1,388억 달러였다. 이러한 수치 차이는 주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자 간주하지 않은 러시아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외국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구입한 포트폴리오 투자도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 외국의 다른 기관들의 공식 자료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자산 규모를 분석한 쿠즈네초프 박사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을 400~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³⁰⁾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러시아는 막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관련법령을 통해 러시아의 해외투자자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고,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들과 상호투자 촉진 및 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외국 국가들과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주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CIS 국가에서 러시아 투자자들이 실행하는 직접투자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의 또 다른 형식은 러시아 투자자

29) UNCTAD(2006), p. 302.

30) Кузнецов(2007), p. 69.

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인데, 이는 러시아 연방 대사관 산하의 무역대표부와 무역 및 경제 관련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업무에는 러시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확대 촉진, 러시아 조직 및 기업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외국인 파트너들과의 사업관계 구축, 해외에서 러시아 기업의 이해관계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유럽과 CIS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러시아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카자흐스탄,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키프로스로 카자흐스탄과 영국에 대해 러시아는 각각 20억 달러 이상,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10억 달러 이상 직접 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몽골, 이란, 베트남, 앙골라 등과 같은 일련의 개도국들에서도 러시아 투자자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999~2004년 동안 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에서 36.7%로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 투자자들의 유럽국가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바뀌었고, 조그마한 발트해 연안국가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비중이 같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본에 대해 영국이 보다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리투아니아가 폴란드보다 러시아의 대기업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CIS 국가들의 비중이 유럽연합에 비해 여전히 낮긴 하지만,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CIS 국가들의 역할이 현저히 증대했음을 볼 수 있다.

31) [표 3-4]에 나타난 수치는 꾸즈네초프 박사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4.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국가별 분포

(단위: 십억 달러, %)

	1999년 말		2004년 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세계	약 10.0	100.0	약 30.0	100.0
EU=15개국	약 3.0	30.0	약 7.0	23.3
영국	1.13	2.8	2.3	7.7
독일	0.82	8.2	1.0	3.3
오스트리아	0.00	0.0	0.7	2.3
네덜란드	0.02	0.2	0.6	2.0
프랑스	0.44	4.0	0.4	1.3
핀란드	0.24	2.4	0.4	1.3
벨기에	0.04	0.4	0.2	0.7
신규 EU 회원국	약 2.2	22.0	약 3.5	11.7
키프로스	약 0.5	5.0	약 1	3.3
폴란드	1.11	11.1	0.5	1.7
리투아니아	0.04	0.4	0.5	1.7
라트비아	0.12	1.2	0.3	1.0
말타	약 0.2	2.0	0.3	1.0
체코	0.02	0.2	0.2	0.7
EU 후보국	0.15	1.5	0.5	1.7
루마니아	0.01	0.1	0.3	1.0
불가리아	0.14	1.4	0.2	0.7
CIS국가	1.35	13.5	약 6	20.0
카자흐스탄	0.15	1.5	약 2.5	8.3
우크라이나	0.29	2.9	약 1	3.3
벨로루시	0.49	4.9	0.7	2.3
우즈베키스탄	0.01	0.1	0.5	1.7
아제르바이잔	0.30	3.0	0.4	1.3
아르메니아	0.09	0.9	0.3	1.0
몰도바	0.00	0.0	0.2	0.7
기타 국가	약 3.3	33.0	약 13	43.3

자료: Кузнецов(2006), p. 97.

앞으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CIS 국가들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CIS 국가들과는 언어 및 문화적인 장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운송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중소기업들의 대CIS 직접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기업들이 CIS 국가들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주로 소련 시기에 설립된 생산설비들을 복구하거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진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컨대 최근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의 정유공장들을 인수한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이 동유럽 국가들의 송유관, 주유소 및 정유공장을 구매하는 것은 서유럽 국가들로 유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가공 및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석유제품의 판매수익을 증대시키려는 러시아 기업가들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들 국가들의 시장 가격이 러시아 연방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국,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해외자산 구매는 수익성이 높은 투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려는 염원이기도 하다.

중동·유럽의 거대 비금융 기업들 목록에는 ‘루코일’, 노보러시아 선박회사인 ‘노보십’, 프리모르스키 선박회사 및 극동선박회사 등 4개의 러시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루코일’은 사실상 구소련 국가들에서 최대의 다국적기업으로 간주되는데, 2005년 그 해외자산 규모는 5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나머지 3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자산 역시 합쳐서 10억 달러를 상회한다.

러시아 기업들은 세계 기업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면서 자국의 WTO 가입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확대된 EU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은 러시아 및 EU 국가들을 위한 공동의 유럽경제공간과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경제공간을 창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에너지정책

러시아 정부는 2003년 8월 러시아의 에너지산업, 국제 에너지 시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 에너지 협력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는 상당 부분 세계의 에너지 및 에너지 정책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독특한 위상에 의해 결정되었다. 러시아는 대부분이 에너지 자원의 순수입국인 G8의 적극적인 참여국이다.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지구적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 에너지 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지역적 우선순위는 본질적으로 러시아 석유 및 가스의 주요 판매시장인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지역적 우선순위는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러시아의 수출물량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들로 보완된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은 러시아의 연료 · 에너지 균형에 카스피해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CIS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탄화수소 자원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선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전략적 송유관들의 건설을 포함하여 일련의 대규모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대해 중요한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판매시장의 유지와 확대, 석유가스 사업의 판매부분 진출, 투자 유치, 통과(transit) 문제 해결 등으로 귀결된다. 반면, 일련의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산업에 대한 거대 장비 공급국이며, 러시아의 연료 · 에너지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주요 자본수출국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2000년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에 에너지 대화를 가동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이제 이 에너지 대화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러시아 · EU 정상회담의 불가분한 의제로 탈바꿈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정치적 상호협력은 상설기구로 가동될 러시아 · EU 비즈니스 에너

지 포럼 창설이 발의됨에 따라 이제 상업적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러시아의 연료·에너지산업의 ‘메이저’들과 유럽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에너지 부문의 효율적인 협력 구축 역시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CIS 국가들, 벨로루시와의 연합국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그리고 현재 형성되고 있는 단일경제공간(SES)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다자외교에서 에너지 요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이해관계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운송 및 기타 경제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와 카스피해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카스피해의 석유가스 자원을 판매시장까지 통과·운송하는 분야의 협력 증진과 카스피해 영유권의 법적 지위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 참여하여 설립될 유라시아 가스동맹이 향후 가스 분야의 협력 전망을 다소 밝게 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정책에서 아태지역이 매우 유망한 협력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내에서 에너지 분야가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 간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부 아태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국이다. 연료·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이 지역의 침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의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일련의 사할린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고 또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산지들을 개발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태지역 에너지 수입국 가운데 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견고한 정치적 ·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일종의 에너지 대화가 한국과 러시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시작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간의 협력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은 러시아의 종합적인 대외 에너지 정책 개념 없이, 또 러시아 연료 · 에너지산업의 국제 활동에 대해 부처 간의 상호협력 조정 메커니즘 없이 러시아의 연료에너지산업의 막대한 잠재력을 국제무대에서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에너지 요인이 갖는 의미가 현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연방 및 지역의 이해관계와 러시아 기업가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문건으로서의 공식적인 대외 에너지정책의 개념은 없다.³²⁾

향후 2015년까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전략적인 문제 해결 방향은 유망한 송유관 프로젝트들의 실현, 산지 채굴 및 운송 인프라 발달을 위한 투자 촉진, 동시베리아 등 러시아 동부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석유가스 채굴산지의 개발, 에너지 가격 · 조세 · 관세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 메커니즘의 개발, 현행 정유공장들의 현대화, 응축가스 생산의 발전 및 수출 증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발전 등이다.

티만-페초라 지역과 동시베리아, 사하공화국(야쿠치야)의 자원 산지를 포함한 지역의 지질학적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지출 증대를 통해 앞으로 석유채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8,000만 톤의 수송능력을 가진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1단계 건설공사(2006~2008년)와 더불어 극동지역의 페레보즈나야 만에 석유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2년까지 아태지역 국가에 5,000만 톤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만간 서시베리아에서 바렌츠 해(무르만스크 지역 혹은 인디가 항) 연안까지 송유관 건설이 시작될 것이며, 그 수송량은 연간

32) Жизнин(2006) 참고.

5,000~8,00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으로 새로운 수출 통로를 만들어 주고, 현재 터키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석유수출의 위험성을 낮출 것이다. 이 송유관 건설사업이 완공될 경우, 2010년 이후 수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³³⁾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연료·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천연가스를 장기적, 그리고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 산지들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집중적인 자본투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러시아 자체가 전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서방국가들의 중앙아시아 시장 선점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가스 판매시장들은 러시아의 가스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유럽 및 중부유럽으로 남게 될 것이다.³⁴⁾ 이와 더불어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시장이 유망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천연액화가스의 장기적인 판매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경제협력정책

러시아 연방 지역들의 직접적인 대외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는 러시아가 세계 경제관계에 편입하는 내용과 형식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단일한 시장 공간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유럽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대외 경제관계 구축에서 러시아의 서북지역과 극동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3)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34) EU 15개 국가의 천연가스 소비량 20%와 중부유럽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3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주, 무르만스크 주, 볼로고드스크 주, 아르한겔스크 주 및 가렐리야 공화국을 포함하는 북서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지역적 노동분업구조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복잡한 기계제작 제품에 특화되어 있으며 전력, 기구제조, 전자,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최신 기술설비를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특히 북서지역은 항만시설이 발달돼 있어, 전 러시아의 중요한 수출입 기능을 발트해에서 수행하고 있다. 발트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를 통해 레닌그라드 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제품이 많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입 화물들도 처리되고 있다. 컨테이너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런던 노선과 상트페테르부르크-함부르크-로테르담 노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서지역을 통해 폴란드,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 유럽 연합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주로 석유, 석유제품, 다이아몬드, 금속, 금속합금, 화학제품, 비료, 목재를 수출하고 있다. 이 때 러시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기계제품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며 자동차, 전동기, 베어링, 컨테이너, 냉장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EU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러시아의 수입 부문에서는 식료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가죽, 봉제제품과 진공압축기, 냉장장비, 전기설비, 전화 통신장비 등 다양한 공업부문의 기계 및 설비들이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개요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유럽과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회의, 유럽지역 및 지역정부들과의 지역적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³⁵⁾ 이를 위해 접경 국가들과의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접경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접한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관계

35)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07) 참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사하공화국과 하바로프스크지방, 연해지방, 아무르 주, 사할린 주, 캄차트카 주 및 마가단 주 등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지경학적 상태, 천연자원 보유 규모 및 개발조건, 특화 부문 등 일련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북부지역(사하공화국과 마가단 주)과 남부지역(하바로프스크 및 연해 지방, 아무르 주, 사할린 주 및 캄차트카 주) 등 두 가지 하위 지역으로 구분된다. 극동지역의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보다 경제활동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체 지역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남부지역에 극동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다. 반대로 북부지방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매우 낮은 인구밀도를 특징으로 한다. 극동지역의 주요 특화 부문은 유용 광물자원 개발이며, 이 지역의 산업중심지는 주로 광물자원 채굴과 관련된 곳으로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러시아 지역 시스템에서 극동지역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의 특별한 경제·지리적 상태로, 이는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주요 지역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유일한 인접 지역인 동시베리아지역과의 접촉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원보유 잠재력면에서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할 정도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극동지역은 러시아 다이아몬드의 98%, 주석의 80%, 붕소원료의 90%, 금의 50%, 텅스텐의 15%, 어류 및 해산물의 40% 이상, 목재의 13%, 셀룰로오스의 7%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어업제품 생산량 증대(주로 수출용), 광물, 목재, 석유 및 석유가공 산업의 수출지향성 강화 등이 상당한 정도로 이를 촉진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수출에서 연해지방이 안정적인 1위를, 하바로프스크 지방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극동지역을 포함하여 최근 러시아의 수출에서 연료·에너지 및 원료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80%에 이르고 있는 반면, 기계 및 설비 수출은 10%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극동지역과 중국과의 대외 경제관계가 여러 방향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국

경무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거래와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해지방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60%에 이르고 있다. 연해지방은 중국으로 광물비료, 어제품, 목재 등을 수출하고, 그 대신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경제협력 당사국이다.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목재자원 개발, 목재가공생산 발전, 셀룰로오스 및 종이 생산, 석탄공업 발전, 운송 건설, 항만 사업 확대 등에 관한 일련의 장기 보상계획 협정들을 체결하여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³⁶⁾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이 점차 국제적인 거래에 편입되고 새로운 수출기지들이 건설되며 운송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협력 이외의 유망한 협력 분야로는 우주항공, 조선업, 통신, 해양자원 개발, 신기술 및 신소재, 새로운 유형의 운송수단 개발 협력, 전력 · 전자, 군사기술 협력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활동은 재원을 확충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극동지역은 바로 대외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의 주요 공업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상황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한 정도로 상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제품 판매시장을 확대하며, 시장에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태평양 경제권과 접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통합 과정이 초기 국면에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이 지역의 경제에 통합되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 대한 심사숙고된 대외경제 전략은 러시아가 유럽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36) Росстат(200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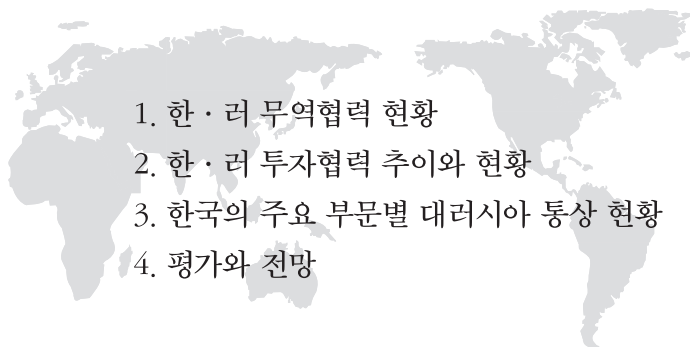
이 외에도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확대는 러시아 지역들의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균등하게 해주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의 원심력 경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2010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새로운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³⁷⁾ 2007년 8월 2일 러시아 각료회의에서 심의된 이 계획에 따르면,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에 투입될 총 재원은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5,660억 루블(약 223억 달러)이다. 여기에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을 위한 5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 재원의 대부분은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인바, 송유관 등 연료 및 에너지 기간시설 건설에 약 55억 달러, 6,500km의 도로 건설을 포함한 교통망 건설에 88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처럼 새로 부설될 도로, 파이프라인, 전력망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유전 및 가스전과 연결될 것이다. 이 외에도 22개 공항, 13개 항만 개보수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계획이 실행되면, 극동지역의 지역총생산은 현재의 2.6배, 고정자본투자는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인구가 복귀함에 따라 총인구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반도와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와 이르쿠츠크가 극동의 광역지역 혹은 광역도시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7)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Ведомости(2007. 8. 2) 참고.

제4장

한·러 통상 현황 및 평가



1. 한·러 무역협력 현황
2. 한·러 투자협력 추이와 현황
3. 한국의 주요 부문별 대러시아 통상 현황
4. 평가와 전망

한 · 러 통상 현황 및 평가

1. 한 · 러 무역협력 현황

가. 한 · 러 무역 추이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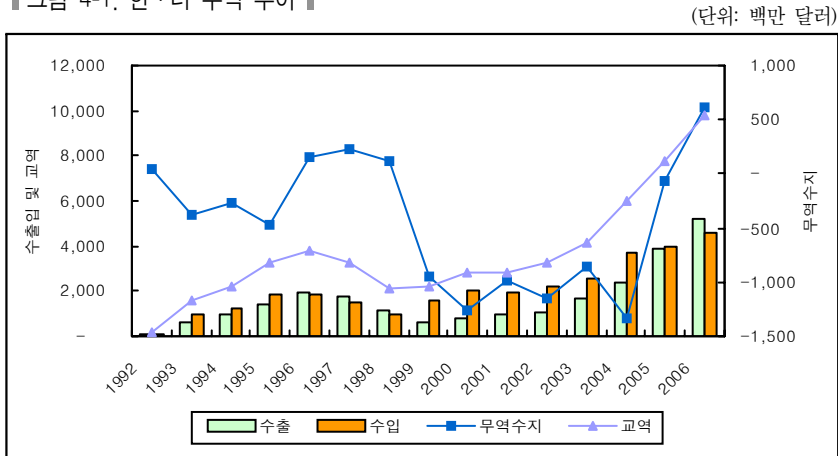
1970년대부터 한국과 러시아 간에 무역이 소규모로 이뤄졌으나, 한 · 러 간 공식무역은 1990년에 맺은 한 · 러 수교와 1991년 소련연방의 붕괴를 계기로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³⁸⁾ 공식무역 첫 해에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이 1억 1,808만 달러, 대러시아 수입액이 7,48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325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한국 전체 무역수지의 0.06%)를 기록하였다.³⁹⁾ 이후 양국간 교역은 1996년에 37억 7,78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교역액이 약 20배 증가하였다. 1997년 말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와 1998년에 일어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양국간의 교역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33억 271만 달러, 21억 1,242만 달러로 전년대비 13%와 3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1997년부터 2년간 위축되었던 양국의 교역은 1999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 41억 8,08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6년 이후 7년 만에

38) 한국과 소련 간의 무역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1974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980년대 한국의 대소련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39) 1992년에 한국은 대세계 총수출액 약 766억 3,000만 달러, 총수입액 약 81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는 1992년에 한국의 제50대 수출대상국(한국 전체 수출액의 0.15%), 제55대 수입대상국(한국 전체 수입액의 0.09%)을 기록하였다.

최대 교역액을 갱신하였다. 2003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은 해마다 꾸준히 최대 교역액을 갱신하고 있다.

■ 그림 4-1. 한·러 무역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1992년 첫 해에 4,325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199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여파로 1999년에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5년까지 7년간 한국은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자동차, 철구조물, 자동차 부품 등에서 대러시아 수출이 증가하여, 8년 만에 6억 628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시작된 이후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자 제16대 수입대상국이다. 2006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97억 5,221만 달러로 양국간의 교역이 시작된 이후 15년간 약 51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51억 7,924만 달러로 지난 15년간 약 44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5억 7,296만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약 61배 증가하였다. 2000년에 러시아가 한국의 제31대

수출대상국이자 제18대 수입대상국임을 감안한다면, 7년간 한국의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2006년 한국의 20대 수출입 대상국 현황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1	중국	69,459	1	일본	51,926
2	미국	43,183	2	중국	48,556
3	일본	26,534	3	미국	33,654
4	홍콩	18,978	4	사우디아라비아	20,552
5	대만	12,995	5	UAE	12,930
6	독일	10,056	6	독일	11,364
7	싱가포르	9,489	7	호주	11,309
8	멕시코	6,284	8	대만	9,287
9	영국	5,635	9	인도네시아	8,848
10	인도	5,532	10	쿠웨이트	8,133
11	말레이시아	5,227	11	말레이시아	7,242
12	러시아	5,179	12	카타르	6,985
13	인도네시아	4,873	13	싱가포르	5,886
14	호주	4,692	14	오만	5,128
15	이탈리아	4,286	15	이란	5,049
16	태국	4,246	16	러시아	4,572
17	필리핀	3,930	17	칠레	3,812
18	베트남	3,927	18	인도	3,640
19	캐나다	3,620	19	태국	3,328
20	네덜란드	3,609	20	프랑스	3,219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한편 한국과 러시아의 총무역에 차지하는 양국간 무역 비중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 무역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수출비중이 0.15%,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0.09%, 그리고 한국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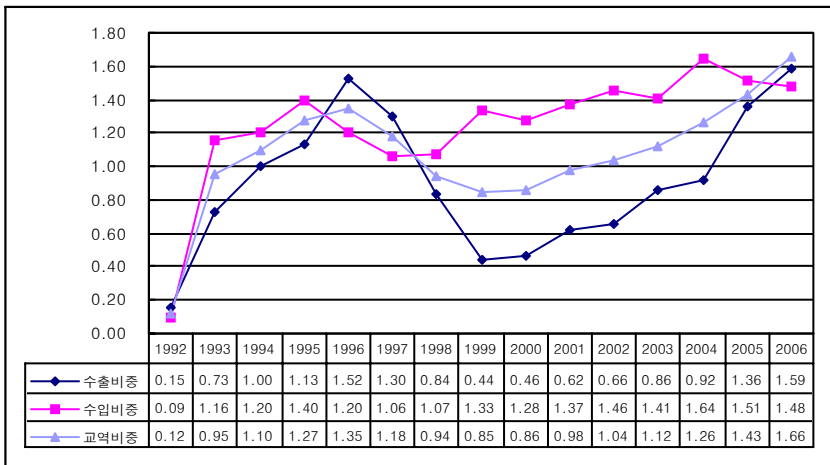
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교역비중이 0.12%로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위상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점차 한·러 간에 수출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대러시아 교역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996년까지 꾸준히 증대하던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비중은 한국의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악영향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⁴⁰⁾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러시아의 국내 소비수요 증가, 러시아산 원자재와 원유의 꾸준한 수입 증가 등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교역비중은 차츰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비중은 1999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비중이 1.59%,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1.48%, 그리고 한국의 대러 무역 비중이 1.66%로 수입비중을 제외하고는 199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그림 4-2. 한·러 무역이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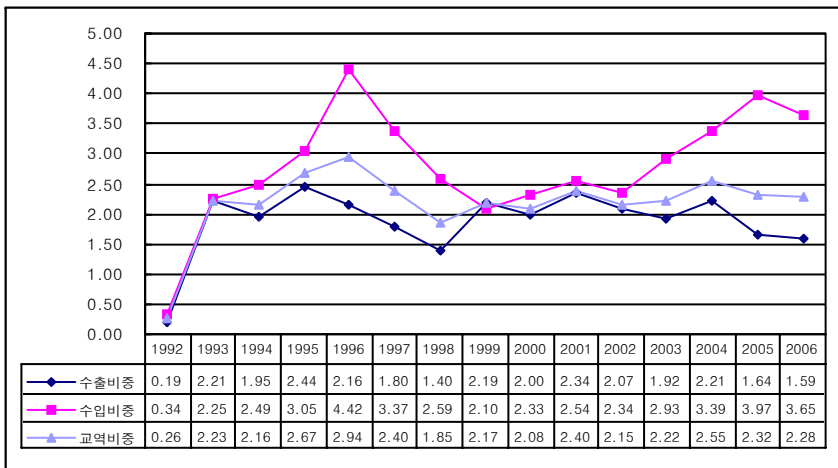
40)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수출비중은 1.08 %포인트 감소, 수입비중은 0.27%포인트 감소, 교역비중은 0.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비중은 한국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1992년에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대한민국 수출 비중은 0.19%를, 러시아의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0.34%를, 러시아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러 교역 비중은 0.26%를 기록하였다.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 수출입 교역 비중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무역이 시작된 이래 1996년까지 급속히 높아졌다가 한국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인해 대폭 낮아졌다. 특히 러시아의 대한민국 수출비중이 1996년 2.16%에서 1999년 2.19%로 0.03%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러시아의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1996년 4.42%에서 1999년 2.10%로 2.32%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것은 양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¹⁾

■ 그림 4-3. 한·러 무역이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41) 1997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상품은 영상기기, 자동차, 의류 등 자본재와 소비재가 주류인 반면, 러시아의 대한민국 주요 수출상품은 알루미늄, 철강제품, 석유화학합성원료 등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대한민국 수출입 교역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수출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수입비중과 교역비중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대한민국 수출비중은 1.59%로 1996년에 기록한 2.16%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대한민국 수입비중은 3.65%로 수출비중 추이와 마찬가지로 1996년에 기록한 4.42%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 교역비중은 2.28%로 1996년의 2.94%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4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 수출입 비중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줄곧 러시아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러시아 교역은 여전히 전체 교역의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⁴²⁾ 또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도 러시아 전체 무역의 3% 미만으로 한국의 경우보다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⁴³⁾

나. 한·러 교역 품목 현황과 추이

2006년은 한국의 대러시아 자동차 및 관련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998년 이후 8년만에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해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전체의 32.7%), 합성수지(10.8%), 레일 및 철구조물(7.9%), 자동차 부품(7.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7.0%) 등이 있다. 1990년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이던 백색가전과 식품류들은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활동을 시작한 이후 주력

42) 2006년 한국은 대세계 교역액 6,348억 4,748만 달러(교역규모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하였다.

43) 2006년 러시아의 전체 교역(4,286억 6,700만 달러, 교역규모 기준 세계 16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제 30대 수출대상국, 제 6대 수입대상국을 기록하였다.

표 4-2.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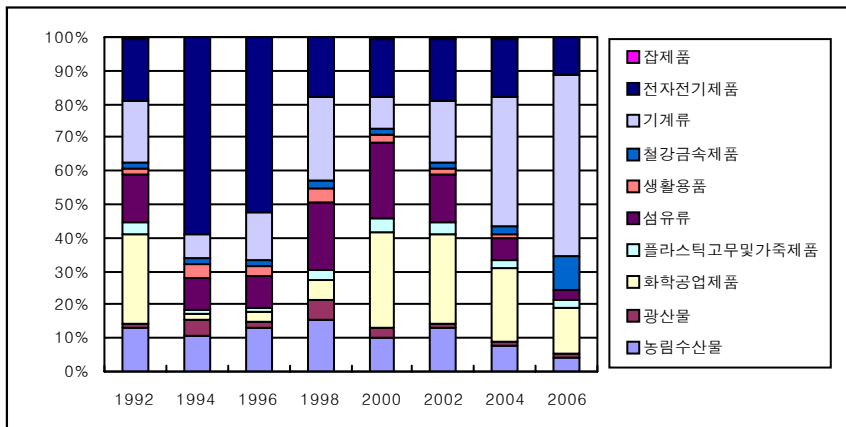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2006년		
			금액 (천 달러)	전체 수출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5,179,248	100	34
1	741	자동차	1,694,310	32.7	58.2
2	214	합성수지	559,377	10.8	0.4
3	615	레일 및 철구조물	407,672	7.9	81.4
4	742	자동차부품	375,534	7.3	167
5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61,958	7.0	19.6
6	812	무선통신기기	184,222	3.6	-14.1
7	15	기호식품	104,167	2.0	39.8
8	821	영상기기	90,948	1.8	211.1
9	310	플라스틱 제품	86,813	1.7	38
10	725	건설광산기계	70,353	1.4	46.5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수출품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추이는 [그림 4-4]에서 MTI 1단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화학공

그림 4-4.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추이



주: MTI 1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업제품(전체 수출의 27%), 전자전기제품(18.9%), 기계류(18.4%), 섬유류(14.3%), 농림수산물(12.8%) 등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주로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주로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농림수산물과 섬유류는 주요 수출품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주로 기계류(전체 수출의 54%), 화학공업제품(13.5%), 전자전기제품(11.3%), 철강금속제품(9.9%) 등에서 이루어졌다. 1994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의 52.1%를 차지하던 전자전기제품은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06년에 11.3%의 수출비중을 기록한 반면, 1990년대에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던 기계류 수출은 2006년에 54%라는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는 특정 상품군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1990년대에 전자전기제품 등 중간재에서 2000년대에 기계류 등의 투자재로 특정 상품군 집중이 전환되었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은 알루미늄(전체의 19.9%), 원유(18.6%), 합금철선철 및 고철(11%), 석유제품(9.1%), 니켈제품(7.7%) 등의 원

표 4-3.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입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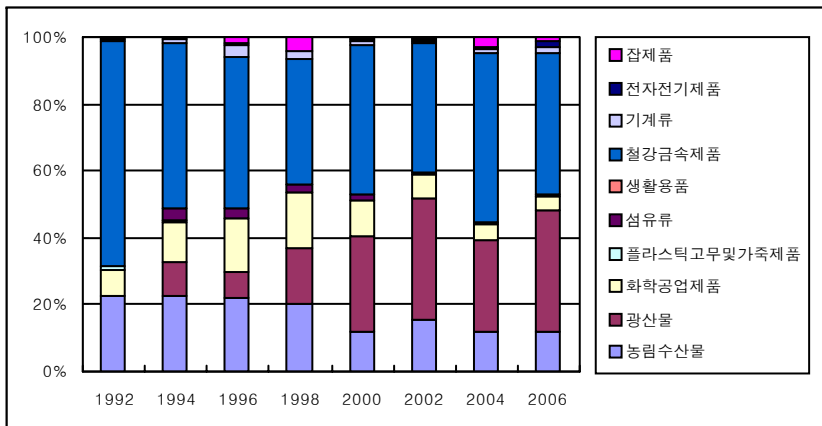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2006년		
			금액 (천 달러)	전체수출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4,572,967	100	16.2
1	621	알루미늄	908,854	19.9	49
2	131	원유	849,598	18.6	100.4
3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504,812	11.0	-33
4	133	석유제품	417,660	9.1	45.6
5	623	니켈제품	351,293	7.7	48.8
6	132	석탄	307,620	6.7	29.9
7	41	어류	186,763	4.1	7.9
8	31	목재류	183,333	4.0	10.7
9	42	갑각류	90,977	2.0	48.5
10	136	우라늄	83,335	1.8	-15.9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자재와 어류(4.1%), 갑각류(2%) 등의 수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은 주로 알루미늄, 원유, 합금철선철 및 고철, 석유제품, 석탄 등으로 구성되어 왔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 구성은 199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광산물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MTI 1단위 기준 수입품 구성 추이는 [그림 4-5]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 구성은 철강금속제품(전체 수입의 67%), 농림수산물(22.6%), 화학공업제품(7.7%), 기계류(0.6%)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이끌던 철강금속제품과 농림수산물은 교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1998년에 전체 수입의 16.7%를 차지하던 광산물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으로 부상하면서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전체 수입의 36.5%를 차지하게 된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 구성은 철강금속제품(전체 수입의 42.2%), 광산물(36.5%), 농림수산물(11.8%), 화학공업제품(4.2%) 등으로 이뤄지며, 나머지 6개 품목들은 모두 1%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 그림 4-5.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구조 추이 ■



주: MTI 1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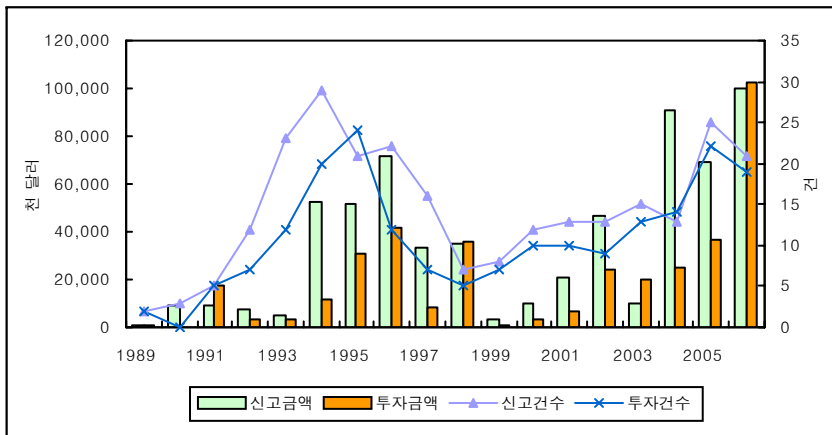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 구조 변화는 수출 구조에서 보여주던 시간에 따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철강금속제품과 화학공업제품 등 소재적 성격이 강한 중간재가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산물과 같은 원자재와 농수산물과 같은 소비재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 주요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2. 한 · 러 투자협력 추이와 현황

2006년 말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투자 대상국이며,⁴⁴⁾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제29대 외국인투자 대상국이다.⁴⁵⁾ 한국

■ 그림 4-6.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4) 2006년 말 한국의 외국인투자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4억 2,660만 달러(한국 전체 누적 투자금액의 0.61%)로 25위, 우즈베키스탄은 4억 2,477만 달러(0.61%)로 26위, 러시아는 3억 7,156만 달러(0.53%)로 28위, 우크라이나는 2억 3,882만 달러(0.34%)로 33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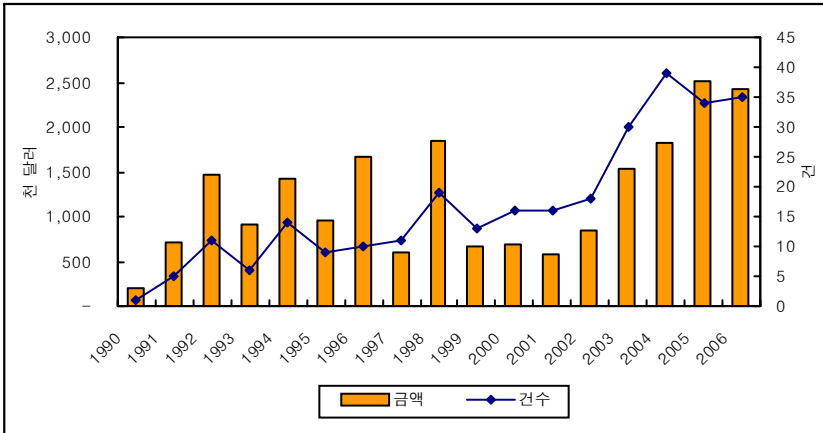
45) 2006년말 한국의 외국인투자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6억 9,094만 달러(한국 전체 누적 신고금액의 0.65%)로 25위, 우즈베키스탄은 6억 4,531만 달러(0.61%)로 28위, 러시아는 6억 2,692만 달러(0.59%)로 29위, 우크라이나는 2억 6,136만 달러(0.25%)로 46위를 기록하였다.

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1989년 씨앤티진도의 모피관련 도소매업에 대한 48만 달러 투자를 시초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는 앞서 살펴본 양국간 교역추이와 마찬가지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기점으로 투자 위축과 활성화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던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1999년에 전년대비 98% 감소하면서 가장 위축되었는데, 이 한 해 동안 발생한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신고건수 8건, 신고금액 337만 달러, 투자건수 7건, 투자금액 83만 달러로 극심한 투자위축을 기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국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19건 투자에 투자금액 1억 25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6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최대 투자액을 갱신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2006년 말 누적 기준으로 295건에 2,145만 달러이다.⁴⁶⁾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도 1990년대에 점차 증가하다가 1999년에 전년대비 투자금액이 약 64% 감소하면서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34건 투자에 투자금액 2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2006년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35건에 242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 낮은 투자금액을 기록하였다.

46) 2006년 말 누적기준으로 세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1,267억 7,699만 달러이다. 이 중에서 러시아는 2,145만 달러(전체 대한국 외국인투자액의 0.02%)로 51위, 우즈베키스탄은 617만 달러(0.005%)로 69위, 카자흐스탄은 182만 달러(0.001%)로 79위, 우크라이나는 95만 달러(0.001%)로 90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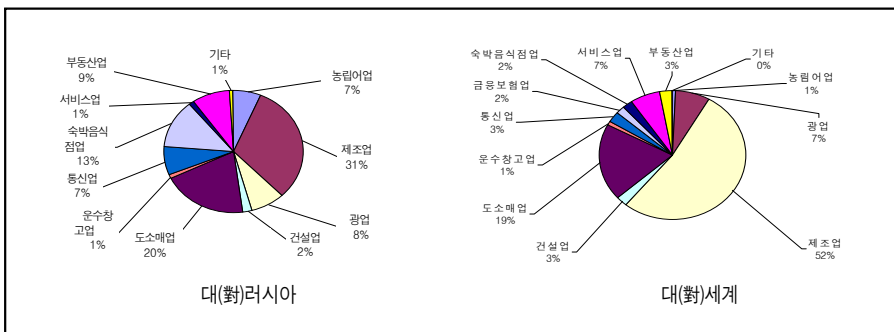
■ 그림 4-7. 러시아의 대한민국 외국인투자 추이 ■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구성은 [그림 4-8]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대세계 외국인투자는 2006년 말 누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주로 제조업(한국의 대세계 외국인투자의 52%), 도소매업(19%), 광업(7%)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3%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의 31%), 도소매업

■ 그림 4-8. 한국의 대세계 및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 ■



주: 누적 투자금액 2006년 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 숙박음식점업(13%), 부동산업(9%), 광업(8%), 통신업 및 농림어업(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대세계 외국인투자와 업종별 비중 구성이 유사하며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농림어업 등에서는 한국의 대세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과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대러시아 투자에 국별 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에서 투자금액 기준으로 수출촉진(전체 투자금액의 25.3%), 자원개발(18.1%) 등이 주요 투자목적으로, 원자재 확보(3.5%), 보호무역 타개(3.8%) 등이 다음 투자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목적별 현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처이자 수출개척 신흥시장임을 알 수 있다.

표 4-4.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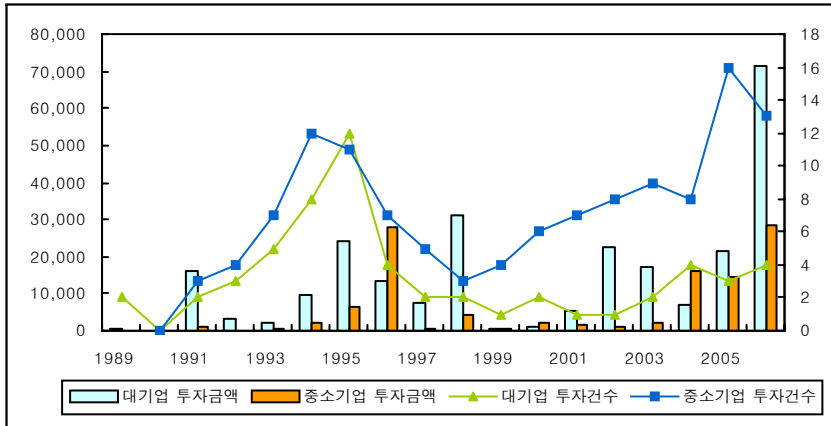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천 달러)	비중(%)
자원개발	34	15.6	72,277	18.1
수출촉진	66	30.3	100,855	25.3
원자재 확보	21	9.6	13,816	3.5
보호무역 타개	5	2.3	15,212	3.8
저임활용	16	7.3	2,843	0.7
선진기술 도입	4	1.8	2,340	0.6
제3국 진출	12	5.5	3,277	0.8
기타	60	27.5	187,699	47.1
총계	218	100	398,319	100

주: 2007년 3월 말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를 [그림 4-9]에서 살펴보면 투자추이가 2000년 전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이후 1998년까지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 그림 4-9.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표 4-5.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 현황(투자금액 기준) ■

순서	상호	현지법인명	업종	주요취급품목	신고일자	투자 비율(%)	투자금액 (천 달러)
1	삼성전자(주)	Samsung Electronics Rus Co., Ltd.	도소매업	휴대전화기, 모니터, 프린터	2006.09.05	100	50,000
2	(주)이에이지씨	Russia Petroleum Co.	광업	가스, 석유 및 컨테이너	1996.08.31	7.5	29,065
3	(주)오리온	Orion Food Rus Co., Ltd.	제조업	초코렛류	2003.09.17	100	21,360
4	(주)한국야쿠르트	KOYA	제조업	라면	2001.09.14	100	13,500
5	현대중공업(주)	Vladivostok Business Center	숙박 음식점업	숙박업 (호텔업)	1994.04.11	70	13,360
6	LG전자(주)	LG Electronics Rus, LLC	제조업	가전제품	2004.12.16	100	12,901
7	호텔롯데	L&L Limited	숙박 음식점업	숙박, 도소매, 부동산임대업	1997.05.07	30	12,500
8	롯데쇼핑(주)	L&L Limited	숙박 음식점업	숙박, 도소매, 부동산임대업	1997.05.07	30	11,500
9	롯데리아	CJSC L&L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2002.12.23	13.85	9,000
10	대우	Krasnoyarsk Aluminium Smelter	제조업	1차 알루미늄	1995.08.29	5	8,000

주: 2006년 말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대기업이 1998년에 발생한 삼성전자의 투자를 앞세워 3,129만 달러로 최고 투자액을 기록하였고, 중소기업은 1996년에 이뤄진 주식회사 이에이지씨의 광업 부문 투자를 앞세워 2,803만 달러로 최고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1999년 한국 대기업의 대러시아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99%의 투자 감소를 기록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91%의 투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모두 급격한 투자위축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특히 2006년에는 한국 대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7,11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34% 증가하였고 중소기업도 전년대비 99.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액을 기록하였다.

[표 4-5]에서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을 살펴볼 수 있다. 2006년 9월에 100% 지분 투자한 삼성전자의 Samsung Electronics Rus Co., Ltd.는 투자금액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 최대 규모의 러시아 진출회사가 되었다.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 중 업종이 도소매업인 회사는 Samsung Electronics Rus Co., Ltd.만 있으며, 제조업에서 4개 회사, 숙박음식업에서 3개 회사, 광업에서 1개 회사, 부동산업에서 1개 회사가 순위에 들어있다. 재정부에 등록된 한국의 러시아 현지법인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267개가 있다.

3. 한국의 주요 부문별 대러시아 통상 현황

가. 에너지협력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 직전부터 극동에 위치한 사할린의 석유 · 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를 시도하였다. 이들 개발사업 참여 초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 생산물분배협정이 허용되던 사할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국제 입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가 미국, 일본 등 강대국과의 경합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1990년 삼성과 파코가 합작으로 사할린-1, 2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1992년 현대가 사할린 해상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권 국제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미 · 일 컨소시엄에 밀려 무산된 적이 있다. 1996년에는 고합 · LG · 대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할린-1 프로젝트에 지분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일본 SODECO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개발협력이 가시화된 시기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부터이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로스네프트는 유망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할린-3

표 4-6. 사할린 프로젝트 개발 현황

프로젝트	광구	매장량	수송방법	비고
S-1	Odoptu Chaivo Arkutun-Dagi	석유 3.07억 톤 가스 3.6억 톤	PNG/LNG	1995년 PSC 체결 2004년 송유관 건설
S-2	Lunskoye, Piltun-Astokh	석유 1.47억 톤 가스 3.6억 톤	LNG	1994년 PSC 체결 2007년 말 LNG 생산
S-3	Kirinsky East Odoptu, Ayashsky, Veninsky	석유 9.17억 톤 가스 9.3억 톤	LNG	개발권 무효화로 재경매 추진 중
S-4	Astrakhannovskaya	석유 1.2억 톤 가스 4.0억 톤	PNG	-
S-5	Kaigansko-Vasyukansky, East Shmidtovsky	석유 8.89억 톤 가스 6.6억 톤	PNG	2003~04년 탐사 및 탐사정 시추
S-6	Central Pogranichiny	석유 0.6억 톤 가스 1.04억 톤	LNG	2004년 한국 철도청 · 현대 컨소시엄이 Petrosakh 지분매입 계약체결

자료: 한국석유공사.

Veninsky 광구 공동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기술평가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Veninsky 광구 대신, 2007년에 예정 중인 사할린-3 Kirinsky 광구 입찰에 러시아 TISE, 자루베즈네프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2005년 2월 TISE와 사할린-3 신규 광구 참여,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추진, 석유 제품 교역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입찰문제를 협의할 실무그룹 구성 및 현지법인 설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로스네프트 소유의 사할린-1, 3, 4, 5 사업 가운데 지분 매입을 검토·계획하고 있다.

사할린 프로젝트 참여 이외에 한국은 사할린으로부터 원유·천연가스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1999년부터 사할린-2 광구에서 원유생산이 시작된 이래 한국의 주요 정유회사들이 사할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 러시아로부터 도입되는 물량은 없지만 지난 2005년 7월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에너지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20년간 사할린-2에서 생산되는 LNG를 공급받기로 했다. 사할린 프로젝트 중 현재 생산단계에 접어든 사업은 사할린-1, 2 두 개뿐이다.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사할린-2에서 생산된 LNG를 연 150만 톤(연간 50만 톤 추가공급 가능)씩 공급받을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자인 Sakhalin Energy Company를 LNG 공급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한·러 총리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안정적인 가스공급 및 도입을 약속하는 천연가스협정을 체결하였고,⁴⁷⁾ 이어서 양국의 사업 주체인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가 구체적인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 가스산업 협력 합의의정서를 체결했다. 가스프롬은 사할린지역에서 나호트카 부근까지 가스관이 건설되면 이후에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동해 해저 가스관 또는 LNG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스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1~13년간 연간 약 700만 톤(10bcm)의 가스 도입을 희망하

47) 연합뉴스(2006년 10월 17일).

표 4-7.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 간 협력의정서 내용

-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상업적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
 - 특히 2012~2013년에 PNG 공급 가능성 검토
 - PNG 공급 이전이라도 Spot 거래 등을 통해 LNG를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 논의
- 한국가스공사의 제안 내용
 - 극동 LNG 액화기지 공동 건설 및 운영, 공동 마케팅
 - 공동 LNG 상업화 및 제3국에 LNG 저장설비 공동건설
 - 가스전 공동 탐사 및 개발, DME 등 신에너지 개발 협력
 - R&D 협력 및 인력 교육 프로그램 교환
- 가스프롬의 제안 내용
 - 러 동부지역 가스인프라 공동 투자 및 부산물 판매, 아태지역 마케팅
 - 천연가스, 헬륨, 가스 부산물의 한국 및 아태지역 마케팅
 - 석유 및 가스산업 관련 러시아 기업과의 공동기업체(JV) 설립

자료: 이성규 외(2006), p. 43에서 저자 재구성.

고 있다.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2007년에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⁴⁸⁾

이르쿠츠크에 위치한 코빅타 가스전⁴⁹⁾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은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 시 한·중·러 간 공동개발 추진에 합의한 바 있으며, 당시 러시아는 한국으로 30년간 매년 약 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보장하였다. 한국은 한국가스공사, LG 등 9개사가 모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중국에서는 중국국영석유회사가, 러시아에서는 Russia Petroleum이 참여하였다. 한편, 2003년 11월 한·중·러 간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2006년 10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가스협정 체결시 러시아가 동부지역 통합가스공급시스템 구축계획(UGSS)의 발표시기를 2007년 중반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 이르쿠츠크의 천연가스 도입이 불투명해졌다.⁵⁰⁾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러시아 동부지역 통합

48) 가스도입 계약은 이르면 2007년 중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체결 시 가스도입 가격, 규모, 공급원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국정브리핑, 2006년 10월 20일).

49) 코빅타 가스전은 가스 확인매장량 2tcm으로 러시아 동부지역의 최대 가스전이다.

가스공급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코빅타 가스전의 내수용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프롬은 일단 사할린 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에 천천히 개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코빅타 가스전에서 먼저 헬륨을 채굴·가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코빅타 가스의 대 중국·한국 공급은 단기간 내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프롬이 코빅타 가스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에게 지분매각을 검토·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말에 이르러 코빅타 가스전 개발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TNK-BP로부터 개발권이 가스프롬에게 이양되면, 이후에 UGSS 구축 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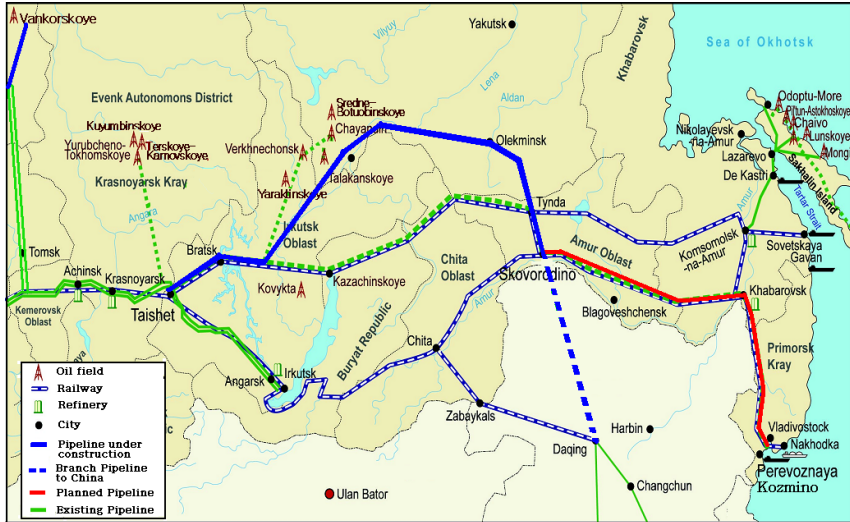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시 한·러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컨소시엄과 러시아 로스네프트 간에 추정 매장량 37억 배럴의 서캄차카 지역 해상광구 탐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⁵¹⁾ 2004년 10월부터 한국석유공사가 기술평가와 경제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서캄차카 지역 해상광구 탐사사업에 러시아의 로스네프트는 전체 지분의 60%, 한국의 컨소시엄은 전체 지분의 40%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컨소시엄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가장 큰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가스공사, SK,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이 각각 10% 지분을, 현대중합상사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서캄차카 지역의 해상광구 탐사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해상광구의 경제성이 확인된다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2006년 2월 암스테르담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의 컨소시엄과 로스네프트는 서캄차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측 컨소시엄사간 협의진행에 따라 2007년 시추 1공, 2008년 시추 2공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가스공

50) 이성규 외(2006), p. 42.

51) 한국의 서캄차카 탐사사업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한 최초의 유전개발사업이다.

■ 그림 4-10. ESPO 송유관 건설계획 및 원유 공급원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사는 캄차카의 육상 광구인 Tigil 광구와 Ichar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2008년에 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⁵²⁾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에도 SK, LG상사 등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는 종착지인 연해지방 페레보즈나야 만에 정유공장 설립을 연해지방측과 논의 중에 있으며,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효성은 파이프 코팅재료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강판에서 각각 1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기간 중 한국의 참여의사 전달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2013년 착공 예정인 2단계 건설사업의 진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Taishet-Skovorodino 간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1단계 건설사업은 자체 자금조달과 국내 기업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는 어렵게 되었다.

52) 이성규 외(2006), p. 51.

표 4-8. 러시아의 전력수출에 필요한 시설 특징

지상노선	블라디보스토크 - 북한 - 서울	· 전압 +/-800kV 직류 전력공급 · 총 길이 1,260km
해저노선	블라디보스토크 - 동해	· 전압 +/-800kV 직류 전력공급 · 총 길이 1,15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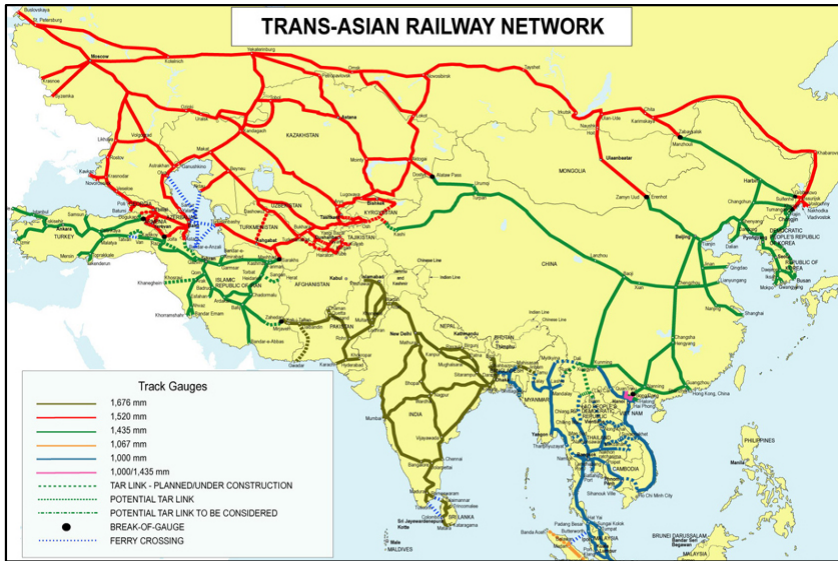
자료: 카로프코(2006), p. 147.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전력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극동지역 개발을 원하고 있고, 중국에 이어 향후 북한에 전력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500kV 송전선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발전소들의 전력손실을 막기 위한 현대화 및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전력부문에서의 한·러 협력은 ‘북·러 연합 프로젝트’와 ‘한·러 연합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러 연합 프로젝트’에서는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지상 전력운송노선이 기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북한은 2001년에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 건설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러시아 측에 요청한 바 있다. 2005년 11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러 연합 프로젝트’가 논의된 바 있으며, 이 때 양국은 ‘한·러 교역 및 경제협력의 상호계획’에 서명하였다. 이 계획안 2조 5항에는 러시아-북한-한국의 전력공급선 건설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한국, 북한은 송전 노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한국, 북한 등 3국은 협력을 위한 조직, 금융, 기술, 법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철도협력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철도협력은 양국간 통상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초석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두

■ 그림 4-11. 아시아횡단철도사업의 철로망 노선도 ■



자료: UNESCAP(http://www.unescap.org/ttdw/common/TIS/TAR/tar_home.asp).

국가에게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국가들도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철도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UNESCAP)은 한국-유럽 간 운임은 철도가 해상운송 요금보다 1TEU⁵³⁾당 최대 260달러 저렴하고 운송시간은 14~15일 단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철도협력은 UN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사업(TAR: Trans Asian Railway) 추진⁵⁴⁾을 계기로 등장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남·북·러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 Railway, 이하 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 이하 TSR)를 연결하는 철도협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적극적

53) 1TEU = 20피트 컨테이너 1개.

54) 1992년 4월 UNESCAP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아시아고속도로망, 아시아횡단철도망, 아시아육상교통 이용촉진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시아육상교통망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림 4-12. 러시아의 북한철도 조사지역



자료: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http://www.rzd.ru>).

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과의 철도협력을 통해 자국의 철도산업 부흥과 극동·동시베리아지역의 개발을 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친 철도산업 개혁 및 구조조정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TKR의 북한측 예상구간을 대상으로 세 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12월 말에 개최된 한·러 교통협력 회담에서는 북한의 철도현대화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추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정상들은 TKR-TSR 연결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면서 철도협력 추진을 위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러 교통협력 위원회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에 러시아 철도 대표부를 설립하고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간 철도당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9. TKR-TSR 연결사업 관련 주요 쟁점별 각국 입장

구분		한국	러시아	북한
북한 철도 현대화	주체	이해당사국 및 국제협력	이해당사국 및 국제협력	북·러 협정에 근거
	재원조달 방식	모든 방안 검토 (상업자본 적극 활용)	국제컨소시엄 ¹⁾	러시아 정부 단독 부담
TKR-TSR 연결 선호노선		수도권 통과노선(동해선 조기 실현 곤란, 경원선 선호)	경제성을 우선 고려한 노선(대안 노선 검토, 경원선 연결 동의)	동해선 (경원선 연결 불가)
북·러간 북한철도 실태 공동조사자료 공개		공개 요구	북한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	공개 불가
남·북·러 3국의 북한철도 공공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상업자본 유치를 위해 필요(실태자료 공개 시 일부시설물로 제한 가능)	시간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원칙적 반대 (북한 동의 시 가능)	불필요
컨테이너 시범운송		조기 실현 희망	찬성	원론적 반대 (추후 검토)
한국의 OSJD 가입 (국제철도협력기구)		조기 가입 요청	지지	반대 (철도연계 후 검토)

주: 1) 2007년부터 러시아는 나진-하산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의 일정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성원용(2005b), p. 380.

이후, 한국과 북한, 한국과 러시아,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 간 형태로 지속되어 오던 협력방식은 2004년에 남·북·러 3자 철도당국 회담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TKR-TSR 연결과 관련된 남·북·러 삼각협력은 당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한 채 공전을 거듭해왔다. 제2차 3자 철도전문가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2004년 7월 초 북·러 국경철도협력회의를 통해 나진-하산 간 철도개량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 북, 러 3국 사이에는 TKR-TSR 연결노선의 선정 문제를 비롯해 한국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컨테이너 시범운송, 북한철도 현대화 재원조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으며(표 4-9 참고), 그로 인

해 TKR-TSR 연결사업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 러시아철도공사(RZD)의 주관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는 TKR-TSR 연결사업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한 회의였다. 2년간의 단절 끝에 남·북·러 3국간 철도협력회의가 재개되었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지만 TKR-TSR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3국의 철도운영 주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던 최초의 회의였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 종료 후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은 의장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TKR-TSR 연결과 관련하여 총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선언문에서 러시아는 TKR을 구성하는 나진-하산 간 철도 개량 사업에 착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북한은 TKR 사업에 필요한 투자 유치 문제는 전적으로 러시아측의 재량에 맡긴다는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그동안 담보상태를 지속했던 TKR-TSR 연결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북한 철도상과 러시아철도공사(RZD)의 사장은 TKR과 TSR을 2006년 7월에 경의선-청년이천선-경원선을 통해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4월에는 나진-하산 간 55km 철도구간 현대화를 위한 합영기업 창설을 합의하고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철도공사(KORAIL)와 러시아철도공사(RZD)는 2007년 6월 18일 모스크바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동시에 사업 실행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할 한국측 컨소시엄 주체인 루코(RUCO Logistics Co., Ltd)⁵⁵⁾와 러시아철도공사(RZD) 간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부산-나진-하산-TSR로 연결되는 물류사업(일명 ‘나진-하산 프로젝트’)이 TKR-TSR 연결을 위한 pilot project임을 천명하였으며, TSR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을 위

55) 루코(RUCO)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KORAIL LOGIS)와 글로비스(GLOVIS), 범한판토스,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장금상선, 한루 등 6개사가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회사임.

해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의 조속한 개최와 나진을 경영하는 TSR 컨테이너시범운송의 조속한 시행에 합의했다.⁵⁶⁾ 그리고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⁵⁷⁾에서 양국은 부산-나진-하산-TSR로 연결되는 물류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전제로 러시아철도공사와 RUCO Logistics Co., Ltd 간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에 합의하고, 이 합작물류회사가 주체가 되어 당 프로젝트의 실행에 필요한 ① 나진-하산 철도구간의 개보수(54km) ② 운송의 현실화를 위한 화차 증대 ③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 기초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분에 따라 투자하고 한·러 합작물류회사 지분은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 중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루코(RUCO)와 러시아철도공사(RZD)가 합의한 총 9개항 중 4번째 항의 합의내용이다. 여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설립되는 Joint Venture는 나진-하산 철도구간, 나진항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러·북 합영회사의 러시아 측 설립자가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한국의 자본이 러시아를 우회하여 북한의 교통인프라에 투자하고, 러·북 물류회사의 경영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 과학기술협력

한국의 눈에 비친 러시아의 과학기술은 군수 기술개발 중심, 신기술 개발 지연,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원리 부족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러시아가 가진 기술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의 미흡한 분야인 기초 및 이론과학과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첨단군사무기 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블라디미르

56)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проекте соединения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с Трансибом」(2007. 6. 18).

57) 「Меморандум о создании совместной логис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2007. 6. 18).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2년 3월 「2010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러시아의 과학기술체계를 개편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러시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지원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컨설팅 기관인 Thomson Scientific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를 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 중 5위로 선정하였고, 러시아의 강점분야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에서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⁵⁸⁾

표 4-10. 주요국의 과학기술성과 지표

	러시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과학기술논문 수 (2005년)	15,846편 (세계 9위)	11,037편 (세계 14위)	200,870편 (세계 1위)	20,978편 (세계 8위)	57,420편 (세계 2위)
내국인 특허등록 (2005년)	14,454건 (세계 6위)	24,984건 (세계 4위)	86,551건 (세계 2위)	5,913건 (세계 9위)	110,053건 (세계 1위)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005년)	12명	0명	220명	2명	8명

자료: IMD(2006).

미국과 일본 중심의 기술협력을 추구하던 기술후발국 한국은 원천기술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를 기술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은 1990년 한·러 수교시 맺은 과학기술협력협정 이후부터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 도입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과학기술협력 초기에는 기술조사단 파견과 연구인력 유치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러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여 러시아 전문가 유치, 한·러 공동연구, 기술 정보 수집 및 기술이전을 주도하였다.

1990년 중반 이후 한·러 간 민간협력네트워크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

58) Guin and Faer(2007), p. 26.

표 4-11. 러시아 산업기술의 세계 선도 분야

분야	중 분 류	소 분 류
항공우주	우주개발	군사용 신소재 분야, 광레이저 분야(인공위성 발사기술) 우주개발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항공역학, 항공관련 재료금속분야, 부품제조 및 소프트웨어 설계분야
		민수용 항공기
기계	공작기계	특수장비 설계 및 제조기술
	로봇	조정밀 원격조정로봇 첨단 기술
	계측·제어기기	제어계측기술과 상태진단기술, 센서계측기술 및 응용기술, 생명공학 관련 기술계측·제어기기
화학	화생	화생방전 관련 주요장비 및 탐지장비
	무기·유기	촉매연구
	일반	일반 및 폴리머 화학 분야의 연구개발 일반
통신기기	레이다기술	레이다 제작기술
	광통신	광섬유 통신기술 및 광학기술
레이저	기초기술	녹색 및 청색 레이저 기술기초기술
	응용기술	일반레이저 및 광레이저관련 응용 공작기계기술, 첨단 고능력 장비 개발기술
신소재	전자광학	광전자, 초전도체, 반도체, 크리스탈 합성 연구
	특수	합금, 복합재료, 특수자성체, 특수소재 기술특수
일반기초과학	일반	수학, 물리, 화학의 이론 및 실험 과학일반
	기초기술	과학기초기반기술
	기초과학	유수한 과학아카데미, 공과대학 및 과학연구기관들의 상호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 과학자(세계 1/10) 보유
※ 러시아의 산업기술 1위 분야		핵발전기술, 합성인식 영상기술, 핵연료 및 핵쓰레기 활용 기술, 환경기후 응용기술, 천연자원 활용기술 등

자료: Guin and Facer(2007), p. 30.

다. 러시아의 연구개발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천기술 습득을 위해 1994년과 1997년 사이에 한·러 에너지연구센터 등 7개의 공동연구센터가 러시아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말에는 러시아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에 한국이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⁵⁹⁾ 1999년 5월에는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한·러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우주, 신소재, 기계분야를 우선 협력분야로 선정하였다.

표 4-12. 한국 기업의 러시아 기술 접목 현황

기업	기술협력 내용
삼성	삼성전자 모스크바연구소(위성통신 디지털TV 등 연구원 2백여 명 근무) 삼성종합기술연구원은 광전송용 핵심기술 등 50여 건 러시아서 아웃소싱
LG	LG 전자 등 계열사 모스크바·니즈니노보고로드 연구소 (통신·냉장고 관련 핵심 부품 제작)
다림비전	노보시비르스크·톰스크에 연구소 (영상압축기술·보안 등 관련 1백명 근무)
햇빛정보통신	광학관련 연구
원다레이저	레이저 관련 연구
게이트전자	소프트웨어 등 연구
살루스바이오텍	러시아의 자생물 수축제 생산
유성글로벌	3차원 형상각인기술 연구
웨이텍	홀로그램 관련 광학기술 연구
에셀텍	레이저 취성재료 절단기술 연구
케이지바이오	AK-9 숙취해소 음료 아웃소싱

자료: 『중앙일보』(2001. 6. 22); 『머니투데이』(2004. 4. 8); 『한국경제신문』(2004. 9. 13).

2000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늘어나면서 러시아의 우수 기술자 활용이 본격화되었고, 특히 2000년 초반 벤처기업 열풍에 따라 러시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2006년 9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을 한국의 중소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러시아의 과학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⁶⁰⁾에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2007년 3월에는 과학기술부가 한·러 간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실질적인 성과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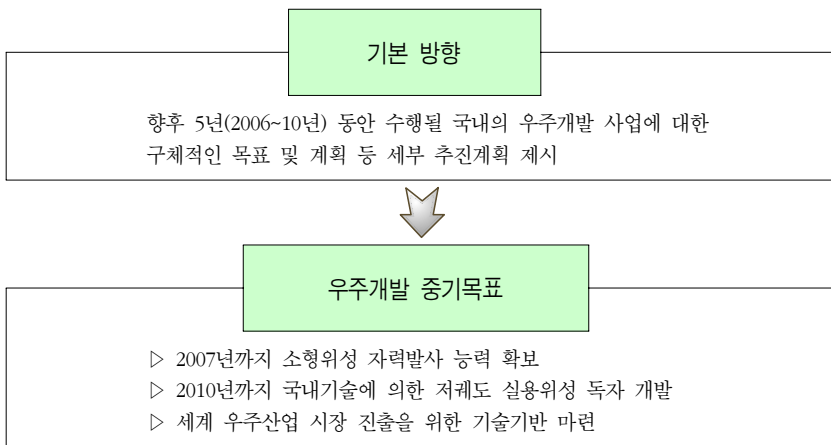
59) 『디지털타임스』(2006. 6. 19).

60) 노보시비르스크를 비롯해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은 러시아 과학기술의 허브로서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

출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였다.⁶¹⁾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는 한·러 과학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2000년에 러시아 항공우주청과 우주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01년 5월에 양국간 기술협력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로켓 발사체 및 우주수송시스템 개발, 우주비행체 및 지상장비 개발, 인공위성의 항법 및 인공위성 관련 기술협력, 우주인 배출협력 등 관련 기술협력에 관한 한·러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전달하고 2004년 9월에 체결하였다. 특히 2006년 10월에 체결한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을 양국이 2007년 6월에 최종 승인하면서 한·러 간 우주 기술협력이 본격도에 오르게 되었다.⁶²⁾ 이번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승인으로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2008년에 한국의 과학기술위성 2호의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4-13. 한국의 우주개발 중기 계획 ■



자료: 과학기술부 외(2005), p. 18.

61)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총괄하는 공식창구로서 재료기술, 에너지, 시베리아 협력센터 등 기존의 기술협력센터의 공동연구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2) 『디지털타임스』(2007년 7월 4일).

4. 평가와 전망

한·러 수교 이후 지난 17년 동안 양국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무역 및 투자협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에너지 및 철도협력 등에 이어 우주항공 협력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러 경제협력은 2005년 11월에 체결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실행계획」이 체결된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 양국 지역간 협력 및 지역발전, 인적교류 증진, 통상확대, 투자협력 등이며, 이를 위해 교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에너지 및 천연자원 협력,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협력, 우주 분야 협력, 정보통신기술 협력, TKR-TSR 연결사업 협력, 어업·해운·해양과학기술 분야 협력, 중소기업 지원,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한·러 경제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³⁾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며,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금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으로부터 2008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150만 톤의 LNG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철도협력 분야의 경우 TKR-TSR 연결사업을 위한 협력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4개의 한·러 기술협력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 협력사업,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 한국인 우주양성협력 등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적지 않은 최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과 더불어 한국에서 러시아 라이선스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등 많은 상업적 협력 방안들이 검토 중에 있다.

63) 고재남(2007), p. 15.

그러나 양국간 경제 및 통상협력 수준은 수교 당시 양국이 기대했던 수준뿐만 아니라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투자협력의 경우 교역에 비해 훨씬 뒤쳐진 상황이며, 극동지역에서는 한국의 대러 투자 및 교역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의 대러 투자부진에는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소홀했던 러시아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대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진출을 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인식은 투자 대상보다는 수출노선의 다변화를 위한 신흥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수출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러 경제관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교역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호혜적인 투자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고유가를 기반으로 거대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러시아의 시장 공간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⁶⁴⁾ 러시아에서 시장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각종 제도와 법령 및 관행이 점차 투명해질 경우 불완전한 미개척 시장이라는 특징이 사라질 것이고, 한국 기업이 선진 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러시아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위험 요인이 병존하는 현 시점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대러 투자 진출의 호기이며,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보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러시아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하에서, 앞으로 한·러 경제 및 통상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07년 6월 말 현재 4,000억 달러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의 경우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를

64) 성원용(2007), pp. 81~82 참고.

위해 조성하고 있는 안정화기금도 2007년 7월 기준으로 1,200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채굴산업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긴축재정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급격한 환율절상을 방어하고, 산업다각화를 위해 안정화기금을 재투자할 경우 러시아 경제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연간 5~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유통 및 가전제품 현지공장 등의 투자가 점차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새로운 투자사업 중에는 롯데가 모스크바 시에 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LG건설 & 엔지니어링, 기아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이 일련의 제조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LG전자가 현지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2007년 9월 초에 칼루가 주 보르지노 공업지대에 전자공장 착공식을 거행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우리은행도 현지법인을 개설하였다.

한·러 경제 및 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한국 기업의 대러 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글로벌기업이 진출하여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대상 지역을 기존의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 도시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러시아가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된 블라디보스토크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한국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에너지,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투자협력을 현저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과 투자촉진책으로는 러시아 내 한국 민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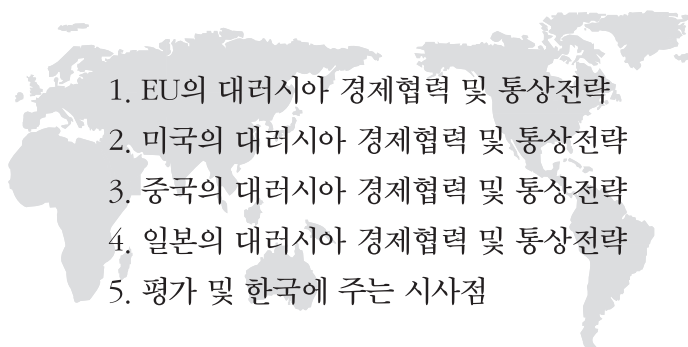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러시아 은행산업의 신뢰성 부족 및 금융거래상의 불편이 한국 기업의 대러 무역 · 투자 및 현지법인 운영시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출, 신용장 거래, 송금 · 환전, 예금 등 우리 금융기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며, 은행이 진출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기업의 투자도 촉진되어 한 · 러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대러시아 수출 및 투자 애로사항으로 시장정보 및 바이어 발굴 부족, 신용조사의 어려움 외에도 러시아어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지사정에 관한 정보의 확충과 전문기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정보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의 해외투자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5년 11월 양국간 실행계획(Action Plan)에 서명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체결 당사국 간 무역증진과 경쟁제고 효과 외에도 대외협상력 제고, 외국인투자유입,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동반함은 물론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기반으로 FTA 체결까지 진전될 경우 한 · 러 경제 및 통상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EU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2.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4.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5. 평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EU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EU와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이후 주춤했던 EU와 러시아의 무역은 1999년부터 시작된 국제 연료 및 원료가격 상승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EU-27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2.5배 증가하였다. 2006년 EU-27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2,129억 4,600만

표 5-1. EU-27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연 도	무역규모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99년*	50,917	16,645	34,272	-17,627
2000년	86,515	22,738	63,777	-41,039
2001년	97,477	31,602	65,875	-34,272
2002년	98,913	34,420	64,493	-30,073
2003년	107,869	37,206	70,663	-33,457
2004년	129,999	46,039	83,954	-37,924
2005년	169,493	56,880	112,613	-55,733
2006년	212,946	72,360	140,586	-68,226

주: * EU-25의 수출입 수치. 무역규모는 필자가 계산한 수치임.

자료: Eurostat(2007a), p. 1; Allen(2006), p. 2.

표 5-2. 2000~2006년 EU-27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

(단위: 백만 유로)

EU 회원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0년	2006년	2000년	2006년	2000년	2006년
EU-27	22,738	72,360	63,777	140,586	-41,039	-69,226
독일	6,660	23,132	14,263	29,023	-7,603	-5,890
이탈리아	2,521	7,639	8,336	13,592	-5,815	-5,953
프랑스	1,838	4,701	4,501	9,423	-2,662	-4,722
네덜란드	1,796	5,576	3,901	17,018	-2,105	-11,441
벨기에	944	2,752	1,614	4,670	-670	-1,918
룩셈부르크	21	118	18	123	3	-5
영국	1,066	2,988	3,256	8,041	-2,190	-5,054
아일랜드	179	284	11	69	168	215
덴마크	542	1,275	419	829	123	446
그리스	269	441	1,185	3,536	-916	-3,094
스페인	578	1,452	2,412	7,157	-1,834	-5,705
포르투갈	17	108	248	649	-231	-541
오스트리아	711	2,467	1,132	2,076	-421	391
스웨덴	601	1,929	958	3,789	-357	-1,860
핀란드	2,174	6,200	3,471	7,663	-1,296	-1,463
체코	420	1,504	2,260	4,224	-1,840	-2,721
슬로바키아	115	547	2,346	4,027	-2,231	-3,479
폴란드	943	3,768	5,019	9,656	-4,077	-5,888
헝가리	496	1,617	2,809	5,118	-2,313	-3,501
슬로베니아	210	779	251	367	-41	412
에스토니아	82	605	391	1,387	-310	-782
라트비아	85	561	402	733	-317	-172
리투아니아	238	1,435	1,544	3,578	-1,306	-2,322
키프로스	7	17	160	43	-153	-26
말타	0	2	12	2	-12	0
불가리아	129	164	1,641	400	-1,512	-235
루마니아	97	299	1,218	3,213	-1,121	-2,914
EU-27 총교역량*	859,416	1,168,422	1,009,723	1,409,208	-150,307	-240,786
러시아 비중(%)	2.6%	6.2%	6.3%	10.0%		

주: * EU-27 역내교역은 배제한 수치임.

자료: Eurostat(2007a), p. 2.

유로로, 수출은 773억 6,000만 유로, 수입은 1,405억 8,6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표 5-1 참고).

2006년 EU-27의 총교역액에서 대러시아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6%와 10%를 차지하여,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27의 3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독일은 러시아에 231억 유로(EU-27의 32%)를 수출하여 최대 수출국 지위를 고수하였으며, 76억 유로(11%)를 수출한 이탈리아가 2위, 62억 유로(9%)를 수출한 핀란드가 3위를 차지하였다.⁶⁵⁾ 반면 러시아로부터의 최대 수입국은 170억 유로(EU-27의 12%)를 수입한 네덜란드였으며, 136억 유로(10%)를 수입한 이탈리아가 2위를 차지하였다(표 5-2 참고).

2000~2006년 동안 EU-27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대러시아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무역적자 누계액은 무려 3,007억 2,400만 유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로 국제시장에서 연료, 특히 유가 급등에 기인하였다. 2000년부터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로 EU로부터 생산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증대되면서 무역적자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EU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36%), 화학제품(14%), 다양한 소재로 분류되는 제조품(11%), 교통장비(10%), 식료품과 육류(7%) 등 다양한 편이다. 반면 러시아의 대EU 수출은 에너지연료(65%)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제조품(9%), 1차 산품(6%), 연료를 제외한 기타 원자재(4%), 화학제품(3%)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6년 EU-27의 대러시아 수출의 절반은 기계 및 자동차류이며, 대러시아 수입의 2/3는 에너지 및 기타 광물이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EU는 러시아에 연간 17억 유로 상당의 육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연간 7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화훼류를 수출하고 있다.⁶⁶⁾

EU와 러시아의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1995~ 2006년 동안 연간 6~7%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은 운송 및 여행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품교역과 달리 EU

65)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2006), p. 431.

66) 러시아의 화훼류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RIA Novosti, 2007. 2. 16).

가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U와 러시아 간 비자 문제가 간소화될 경우 관광산업의 촉진으로 서비스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러시아의 WTO 가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EU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EU와 러시아의 무역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EU와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EU는 전통적으로 대러시아 해외투자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대러시아 투자 역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전후에 약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6년 EU의 대러시아 투자는 2000년 대비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551억 900만 달러였다. 1990년대 대러시아 ‘Top-10’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중간 이하로 떨어지고 EU 회원국이 약진하고 있다.

■ 표 5-3. 2007년 러시아 내 주요 EU국과 스위스의 해외투자 누계액 ■

(단위: 백만 달러)

해외투자국	2007년 3월까지 누계액	백분율	해외투자 누계액 형태			2007년 1~3월 해외투자 규모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총 투자액	151,469	100	73,026	2,768	75,675	24,624
키프로스	31,835	21.0	21,582	1,193	9,060	2,820
네덜란드	30,690	20.3	27,389	63	3,238	7,760
룩셈부르크	26,780	17.7	651	204	25,925	4,048
영국	11,610	7.7	2,616	161	8,833	3,124
독일	10,000	6.6	3,141	43	6,816	666
미국	6,754	4.4	3,576	502	2,676	364
아일랜드	3,670	2.4	360	0.3	3,310	1,656
프랑스	3,651	2.4	761	0.4	2,890	466
버진아일랜드 (영)	3,589	2.4	1,958	88	1,543	579
스위스	3,107	2.0	1,437	151	1,519	504
10개국 총액	131,686	86.9	63,471	2,405	65,810	21,987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청.

2007년 1분기까지 EU 주요국 중에서 대러 직접투자 1위는 네덜란드(273억 8,900만 달러)가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키프로스(215억 8,200만 달러), 독일(31억 4,100만 달러), 영국(26억 1,600만 달러), 프랑스(7억 6,100만 달러), 룩셈부르크(6억 5,100만 달러), 아일랜드(3억 6,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들 EU 7개국의 대러 FDI 누적 총액은 565억 달러로 러시아 내 FDI 누적 총액(730억 2,600만 달러)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주로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표 5-4 참고). EU 기업들 가운데 영국의 석유메이저 BP사가 러시아의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최대 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BP사는 1997년에 시단코(Sidanko)의 지분 10% 인수를 위해 5억 7,1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03년에는 TNK-BP의 지분 인수를 위해 6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또한 영국은 네덜란드와 합작으로 설립한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을 통해 사할린-2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있다. 독일의 가스기업 루르가스(Ruhrigas)사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Gazprom)의 6.5% 지분 인수를 위해 총 12억 1,000만

■ 표 5-4.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EU 기업의 투자내역 ■

연도	해외투자기업	투자내용	투자금액	기타사항
1995	TotalElfFina(프랑스) + Norsk Hydro(노르웨이)	Charjaga PSA	25억 달러 (33년간)	
1996	Marathon Oil(미국) + McDermott (캐나다) + Mitsui(일본) + Mitsubishi(일본) + Royal Dutch Shell(영국/네덜란드)	사할린-2 PSA	100억 달러 (25년간)	1997년 McDermott + 2000년 Marathon Oil 철수
1997	BP(영국)	Sidanko 지분 10%	5.71억 달러	
1998	Ruhrigas(독일)	가스프롬 지분 2.3%	6억 달러	
1999	Ruhrigas(독일)	가스프롬 지분 1.5%	2.7억 달러	
2000	Ruhrigas(독일)	가스프롬 지분 1.0%	1.0억 달러	
2003	Ruhrigas(독일)	가스프롬 지분 1.7%	2.4억 달러	
2003	BP(영국)	TNK-BP 지분 50%	67.5억 달러	

자료: Kuznir *et al.*(2005), p. 54.

달러를 투자하였다. 프랑스 Total사는 노르웨이 석유회사(NorskHydro)와 함께 하라가(Kharaga) 광구 개발에 생산물분배협정(PSA)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⁶⁷⁾ 이 외에도 BP사와 Shell사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1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사할린 주에 세계 최대의 LNG 공장을 건설하여 미국과 아태지역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할린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영국의 북해 원유와 천연가스가 조만간 고갈될 것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U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으로 ‘블루 스트림(Blue Stream)’이라 불리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총 연장 1,213km의 이 파이프라인 건설비용은 32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0년에 연간 160억m³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⁶⁸⁾ 2005년 9월 독일과 러시아는 총 건설비용이 10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북유럽가스파이프라인(North-European Gas Pipeline)을 건설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분은 가스프롬이 51%, 독일계 기업 바스프(BASF)와 E.ON이 각각 24.5%씩 보유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2005년 12월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25%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향후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소비량의 3분의 1까지 높일 계획이다.⁶⁹⁾ 2007년 6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이탈리아의 ENI사는 러시아 흑해항구에서 불가리아로 이어지는 900km의 새로운 가스파이프라인(South Stream)을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양측이 동등한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⁷⁰⁾

이 외에도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프랑스의 토탈(Total)사는 바렌트해 슈토크만 가스전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가스프롬이 75%, 토탈사가 25%의 지

67) RIA Novosti(2007, 7, 12).

68) http://en.wikipedia.org/wiki/Blue_Stream

69) Vahtra *et al.*(2006), p. 16.

70) RIA Novosti(2007, 6, 21).

분을 보유하고, 향후 가스프롬은 51%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를 외국회사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⁷¹⁾ 슈토크만 가스전에는 2조 7,000억³의 천연가스와 3,100만 톤의 가스콘덴서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생산이 개시되어 발트해 연안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될 계획이며, 2014년부터 LNG 형태로 미국 등에 수출될 예정이다.⁷²⁾ 또한 독일과 러시아의 합작회사 윙가스(Wingas)사는 2007년 가을에 서시베리아에 위치한 유즈노루스크oye(Yuzhno-Russkoye)가스전 개발을 착수한다고 하였으며,⁷³⁾ 영국과 러시아의 합작회사인 TNK-BP는 2012년까지 부수(동반) 석유가스 가공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⁷⁴⁾

EU와 러시아는 가스관 외에도 송유관 건설에 공동투자를 늘리고 있다. 2005년 4월 러시아, 불가리아, 그리스 3국은 불가리아의 흑해항구 부르가스(Burgas)에서 그리스 알렉산드로우폴리스(Alexandroupolis)로 연결되는 총연장 280km의 발칸송유관을 건설하여 러시아의 석유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말 혹은 2011년 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송유관의 건설비용은 10억 달러로, 연간 운송량은 3,500만 톤(2억 5,725만 배럴)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5,000만 톤(3억 6,750만 배럴)으로 증산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내 외국자동차의 진출은 미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나, 최근 일본, 중국과 더불어 EU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자동차 메이저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독일의 폴크스바겐(Volkswagen)사는 2006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칼루가 지역에 연간 11만 5,000대의 조립생산을 목표로 자동차 조립공장(1만

71) RIA Novosti(2007. 7. 11).

72) RIA Novosti(2007. 7. 13).

73) RIA Novosti(2007. 6. 14).

74) RIA Novosti(2007. 6. 19).

2,000m³)을 착공하였다. 2007년 말에 스코다(Skoda)와 파사트(Passat)를 출시하고, 2009년에 폴로(Polo)를 생산할 계획이다.⁷⁵⁾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eugeot-Citroen)사도 2007년 6월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러시아 내에 연산 7만 5,000대의 자동차공장 설립을 위해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⁷⁶⁾ 프랑스와 러시아의 합작회사인 Avtoframos사도 2005년 4월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스크바 근처에서 연간 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12만 대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⁷⁷⁾

러시아 ‘교통전략 2020’에 따라 러시아가 교통부문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이 부문에서도 EU와 러시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Siemens)사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간의 고속전철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3억 유로)에 참여하기로 하였다.⁷⁸⁾ 또한 프랑스의 알스툼(Alstom)사도 러시아철도공사가 주관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헬싱키 노선의 고속전철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⁷⁹⁾

현재 EU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러시아 내 전체 직접투자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EU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경우 EU와 러시아의 투자협력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EU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 보험, 증권, 법률 및 투자자문, 통신, 운송, 호텔,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의 대러시아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5) RIA Novosti(2007, 5, 10).

76) RIA Novosti(2007, 6, 7).

77) RIA Novosti(2007, 7, 5).

78) RIA Novosti(2007, 4, 19).

79) RIA Novosti(2007, 5, 24).

다. EU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EU(과거 EC)의 회원국은 50년이 지난 2007년에 동유럽과 남동유럽을 포함한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 핀란드가 EU 회원국이 되면서 EU와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발트 3국과 폴란드의 EU 가입으로 러시아는 EU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부터 EU와 러시아는 정치적 대립 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에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생필품을 비롯한 소비재와 자본재 등을 수입하였다. 물론 구소련 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EU의 대러시아 무역 및 투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EU와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생산요소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유럽의 역사·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EU의 대부분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역시 최대 교역 및 투자 파트너인 EU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EU와 러시아는 1994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및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EU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에서 중요한 부문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협력 협정 체결, 에너지현장 비준 및 지속적이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 농수산물 검역, 에너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현격한 차이, 농업보조금과 수출관세, 지식재산권, 칼리닌그라드 통과 및 비자 간소화, 러시아 내 EU 기업의 투자보장,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의 상이성, 러시아의 국제기구 및 EU 가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EU와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협력 협정은 1994년 6월 24일에 그리스의 코르푸(Corfu)에서 서명되었으며, 1997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다. 유효기간은 10년이며 2007년 12월 말에 종료된다. 종료되었다고 과거의 협력 협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과거의 협정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러시아와 EU는 새 협정의 체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수차례에 걸쳐 협상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⁸⁰⁾

2003년 5월 EU ·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협력 협정의 기초하에 4개의 공동공간의 창설을 위한 협력 강화에 동의하였다. 공동경제공간(Common Economic Space)은 경제주체의 기회 강화, 보다 공개적이고 통합된 시장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경제공간의 핵심은 비관세장벽과 무역 및 투자 장벽의 해결이다. 공동경제공간 외에도 양측은 자유 · 안전 · 정의의 공동공간, 국제안보 공동공간, 연구 · 교육 · 문화의 공동공간을 창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4개 공동공간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이 2005년 5월 1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EU ·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다. 이 문서는 로드맵의 원칙과 우선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법적 틀 내에서 투자조건, 기업환경, 시장개방 조건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 OPEC’ 창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EU는 가스의 생산 및 운송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프롬의 독점체계가 천연가스 가격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스프롬의 독점체계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가스프롬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U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다. EU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1/3과 석유 수입의 1/4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EU는 러시아와 ‘에너지 대화’의 창설을 모색하였고, 이 대화는 2000년 10월 3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제도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절약, 생산 및 수송 인프라의 합리화, EU의 러시아 내 에너지투자의 접근 용이성, 에너지효율과

80) RIA Novosti(2007. 4. 25).

절약에 대한 실무와 기술 교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정립 등이다.⁸¹⁾

EU는 러시아의 농수산물 검역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반러시아 정서를 보이고 있는 폴란드에 대해 2005년 11월 10일 러시아의 식품 검역조건의 위반과 제3국 육류 재수출 등을 이유로 폴란드의 육류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와 육류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유럽집행부는 러시아의 폴란드 산 수입금지령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EU 산 농수산물 검역 검사는 정당하지 못하며, 차별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검역 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농수산물 검역 검사를 위생 강화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종종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제품뿐만 아니라 기타 원자재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원목 수출관세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비판이 높다. 예컨대 러시아는 원목의 수출에 대해 2008년부터 1m³당 최소 15유로, 2009년부터는 1m³당 50유로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목의 8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핀란드는 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⁸²⁾

EU는 특히 러시아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EU 기업의 러시아 진입 허용과 러시아내 EU 기업의 투자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엑손모빌(ExxonMobil)이 주관하는 사할린-1 및 사할린-2 프로젝트와 프랑스 토탈(Total)이 관리하는 하랴가(Kharyaga) 컨소시엄, TNK-BP가 주도하는 이르쿠츠크 주 코빅타(Kovykta) 가스전 사업과 관련된다. 2006년 12월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사할린-2 프로젝트의 해외기업의 지분을 낮추고, 2007년 코빅타 가스전의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에너지 프로젝트들도 재국유화하거나 러시아 국영기업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

81) Romanova(2007), pp. 12~13.

82) RIA Novosti(2007. 3. 3).

러한 문제는 EU와 러시아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및 협력 협정의 체결과 또 공동경제공간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EU 가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도 당분간 EU의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U와 러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도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의 비토권으로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EU·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 및 협력 협정」의 내용과 4개의 공동공간의 창설 및 실행을 위한 로드맵, 특히 공동경제공간(CES)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양측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향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견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⁸³⁾ EU와 러시아의 새 조약 체결과 CES의 로드맵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FTA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는 소련방 해체 시기⁸⁴⁾부터 1998년 모라토리엄 발생 시기까지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9억 8,050만 달러를 기록한 양국 교역량은 2006년 245억 5,294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6년간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순위는 33위, 미국의 대러시아 수입 순위는 19위, 무역적

83) 새 조약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공통분모와 상이점은 다음의 글을 참고. Romanova(2007), pp. 9~26. EU와 러시아의 공동경제공간(Common Economic Space)의 목표가 FTA 혹은 관세동맹 혹은 경제공동체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

84)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 양국 교역량은 9억 3,010만 달러였다.

자 순위는 13위였다. 2000년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러시아 수입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증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표 5-5. 2000~2007년 미국과 러시아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교역량	9,751.1	8,980.5	9,267.2	11,065.1	14,852.3	19,269.1	24,529.4	9,919.4
수 출 (순위)	2,092.4 (40위)	2,716.1 (35위)	2,397.0 (39위)	2,447.2 (39위)	2,961.0 (38위)	3,962.4 (33위)	4,701.1 (33위)	1,938.4 (32위)
수 입 (순위)	7,658.7 (28위)	6,264.4 (29위)	6,870.2 (27위)	8,617.9 (28위)	11,891.3 (24위)	15,306.7 (20위)	19,828.3 (19위)	7,981.0 (19위)
무역수지 (순위)	-5,566.4 (19위)	-3,548.3 (22위)	-4,473.2 (21위)	-6,170.7 (21위)	-8,930.3 (19위)	-11,344.3 (17위)	-15,127.2 (13위)	-6,042.6 (13위)

주: * 1-5월까지 누계액.

자료: US. Census Bureau(2007).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은 탈냉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보유 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2년에 미국의 러시아제품 수입규모는 약 5억 달러에서 2006년에 약 200억 달러로 40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1992년 21억 달러에서 2006년에 47억 달러로 2.2배밖에 증가하지 못한 상황이다. 2000년부터 미국의 대러시아 무역적자는 증가하여 2000~2007년 5월까지 적자 누계액은 총 612억 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러시아 수입품의 70%는 희귀금속(팔라듐, 다이아몬드 등), 무기화학, 연료, 알루미늄 등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 외에도 철강, 섬유제품, 수산물(게 등), 합판, 보드카 등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미국 원유 수입규모 면에서 볼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가금류, 석유가스장비와 부품, 담배제품, 육류제품(쇠고기, 돼지고기 등), 통신장비, 자동차와 부품, 항공기, 기타 기계, 컴퓨터와 텔레콤 장비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 러시아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자 신용 확대 등으로 2007년 상반기 러시아시장에서 해외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72만 143대가 판매되었다. 그 중 미국산 시보레(GM-AvtoVaz 포함)가 총 8만 4,467대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포드차가 8만 1,782대, 토요타가 7만 2,331대 판매되었다.⁸⁵⁾ 상품교역 이외에도 서비스교역도 연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서비스 무역규모는 EU에 이어 제2위를 달리고 있다.

EU나 중국의 대러 무역에 비해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품목 중 제조품과 기계류는 일본과 EU와의 경쟁으로 점차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경쟁력 있는 농업 부문도 EU와의 경쟁 혹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상품도 EU와 일본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러시아 항공기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로 수입하는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운송망과 수출망의 부족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20’(2006년에 2030으로 수정)에 따라 에너지통합연계망이 완성되면 천연가스와 석유가 에너지 수출터미널에서 LNG선박과 유조선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어 양국간 교역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인하되거나 철폐되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특히 항공기와 중고차 및 신차 등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⁸⁶⁾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방은 미국의 농업 부문에서 대러시아 교역규모의 증가는

85) RIA Novosti(2007. 7. 9).

86) RIA Novosti(2007. 4. 2).

물론 지식재산권, IT 등의 통신부문과 법률부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보험사의 진출을 통한 서비스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1990년대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러시아 내 전체 해외투자국 순위에서 1998년(독일 1위)을 제외하고는 1위를 고수하였다. 1990년대 러시아 내 전체 해외투자 중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 비중은 19.0~30.6%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감소(약간의 진전 혹은 정체)하면서 러시아 내 해외투자국 순위에서 6~10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2000~2006년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규모는 연간 약 11억~18.5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까지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누계액은 76억 9,800만 달러로서 러시아 전체 해외투자 누계액의 5.4%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7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누계액은 67억 5,400만 달러로 러시아 전체 해외투자 누계액의 4.4%로 감소하였다.

표 5-6. 2007년 3월 말까지 러시아 내 미국의 투자와 투자 누계액

(단위: 백만 달러)

해외투자국	2007년 3월까지 누계액	백분율	해외투자 누계액 형태			2007년(1~3월) 해외투자 규모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총 투자액	151,469	100	73,026	2,768	75,675	24,624
미국	6,754	4.4	3,576	502	2,676	364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2000년부터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양호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은 향후 투자를 증액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표 5-7 참고).

표 5-7.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러시아 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 달러)

제조업체	투자금액	연간 생산능력	공장입지	생산 시작연도	비고
GM-AvtoVaz(미 · 러)	340	75,000대	Togliatti	2002년	
GM(미국)	300	70,000대	St. Petersburg	2008년	향후 20억 달러투자
Ford(미국)	150	25,000대	Vsevolozhsk	2002년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Autos Forecast, 심현정(2007), p. 60에서 재인용; RIA Novosti (2007. 4. 2).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에너지 부문이다. 미국의 에너지기업 중, 특히 ExxonMobil사와 ConocoPhillips사가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석유 메이저 ExxonMobil사는 1999년부터 카자흐스탄 텡기즈(Tengiz)에서부터 러시아 흑해 항구 노보로시스크까지 이어지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ExxonMobil사는 생산물분 배협정(PSA)에 의거한 사할린-1 프로젝트의 주운영사로, 30%의 지분을 보유

표 5-8.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부문에서 미국기업의 투자내역

연 도	해외투자자	투자내용	투자금액	기타 사항
1995	ARCO(미국)	Lukoil 8% 지분	2억 5,000만 달러	2001년 BP가 ARCO의 인수를 통해 Lukoil 지분 구입
1996	Sodeco(일본) + Exxon(미국)	사할린-1 PSA	128억 달러 (33년간)	170억 달러로 상승
1996	Marathon Oil(미국) + McDermott (캐나다) + Mitsui(일본) + Mitsubishi (일본) + Royal Dutch/Shell (네덜란드/영국)	사할린-2 PSA	100억 달러 (25년간)	1997년 McDermott + 2000년 Marathon Oil 철수
2004	ConocoPhillips(미국)	Lukoil 7.6% 지분	19억 8,000만 달러	
2005	ConocoPhillips(미국)	Naryanmarneftegaz (JV, 30%)	5억 1,200만 달러	
2007	ConocoPhillips(미국)	Lukoil 20.1%지분	-	2006년에 16.1%지분

자료: Kuszniir et al.(2005), p. 54; RIA Novosti(2007. 4. 25).

하고 있다.⁸⁷⁾ ConocoPhillips사는 러시아 민간석유사 루코일(Lukoil)사의 지분 20%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협력은 일방적인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에서 최근 러시아의 미국 투자 활성화로 쌍방향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 투자, 예를 들면 미국의 광산, 철강업과 석유소매업 등에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소매업 유통에서부터 에너지 부문과 교통 부문(자동차, 우주항공 등), 고급기술 분야까지 다양하다.

미국 보잉사는 러시아 통합비행기회사(OAK) 및 수호이민간항공사(Sukhoi Civi Aircraft Company: 수호이 전투기제작사의 자회사, 2000년 설립)⁸⁸⁾와 더불어 중거리 여객용비행기 수호이 슈퍼제트-100을 제조하는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보잉-787 여객기의 주요 부품은 보잉 모스크바 사무소(300여 명의 엔지니어 근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필요한 티타늄은 러시아 금속회사(Vsmpo-Avisma)로부터 공급받고 있다.⁸⁹⁾ 보잉사는 향후 30년간 러시아에 270억 달러를 투자할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티타늄 생산에 180억 달러, 과학 및 엔지니어, 서비스 프로젝트에 50억 달러, 기타 보잉사 부문과의 계약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⁹⁰⁾

87) 사할린-1의 투자비용은 최초 128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2004년 말까지 33억 달러, 2005년에 18억 달러, 2006년 8월 말 기준으로 56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사할린-1의 확인매장량은 3억700만 톤 원유 + 4,850억㎥ 가스이다. 2005년 10월 채굴이 시작되었으며, 연간 채굴 용량은 1,200만 톤이다. 이 광구의 지분은 Exxon Mobil(30% 자회사 Exxon Neftegaz Ltd), 러시아 Rosneft(20%), 인도 ONGC(20%), 일본 Sodeco(30%)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수행자는 ExxonMobil사이며 생산 물분배협정에 의해 1996년 체결됐다(RIA Novosti, 2007, 2, 27).

88) 이 포럼에서 EBRD는 1억 유로의 신용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중거리 여객기(Superjet-100)는 2023년까지 최소 5,400대의 시장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그 시장가치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호이사는 이 기종을 700대 생산하여 35%는 북미지역, 25%는 유럽지역, 라틴아메리카지역에 10%, 7%는 러시아와 중국에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RIA Novosti, 2007, 6, 7).

89) RIA Novosti(2007, 7, 9). Vsmpo-Avisma사는 2005년 6월에 Vsmpo사가 Avisma사를 인수해 설립됐다. 이 회사는 세계 티타늄 시장의 1/3을 장악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 파트너로는 보잉, 에어버스, SNECMA(프랑스 비행기 제작사), GE(General Electric), 롤스 로이스, Pratt & Whitney(미국항공엔진제작사) 등이며, 이 회사 지분의 66%는 국영무기수출업체(Rosoboronexport)가 갖고 있다.

90) Reuters(2006, 5, 31). 보잉사는 향후 몇 년간 B-787 생산을 위해 Vsmpo-Avisma사로부터 연간 15억\$에 상당하는 티타늄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드사는 향후 3년간 7개의 새로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여 2010년부터 연간 100만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⁹¹⁾ GM사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생산규모를 4만 대에서 10만 대로 증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⁹²⁾

미국의 다국적 에너지 메이저들은 기존의 투자 외에도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운송 및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지분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여 러시아의 시장이 보다 개선되고 투명해질 경우 미국의 석유메이저와 기타 제조업체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은행과 보험회사는 물론 IT를 포함한 통신과 부동산 투자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투자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과 투자는 소연방 해체 이후 기타 주요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엘친 정부의 친미 성향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체제전환 정책 지원은 1990년대 양국간 교역의 발전은 물론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제적 테러 방지를 위해 더욱더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반테러 정책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으며, 2002년 5월에 부시와 푸틴은 ‘새로운 전략적 관계’의 선언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푸틴의 제2기 재임기간부터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의 부활을 내재적 목표로 정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 정책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잭슨-베닉

91) RIA Novosti(2007. 4. 4).

92) RIA Novosti(2007. 4. 2).

(Jackson-Vanik) 개정에 대한 의지 부재, 일방적인 ABM 조약 탈퇴, NATO의 확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중앙아시아의 군사기지 철수 지연과 개입 등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였다.⁹³⁾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적 지원, 그리고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이견과 폴란드와 체코의 MD기지 및 레이더 시설 설치 문제 등으로 더욱더 미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러시아는 이란에 무기 판매와 핵발전소 건설 추진, 베네수엘라에 신형무기와 최신 잠수함 판매 등으로 응수하기 시작했다.⁹⁴⁾ 또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가스 OPEC’의 창설 추진을 구상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우회하여 중앙아시아의 가스관을 독자적으로 건설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을 수포로 만들었다.

미국 컬럼비아대 러시아 전문가 로버트 레그볼드(Legbold)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르바초프는 ‘양보’, 엘친은 ‘항복’하면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했다. 하지만 푸틴은 ‘제한적 경쟁’을 하면서 공존을 꾀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⁹⁵⁾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경제적 실리 이외에도 러시아의 CIS와 유럽으로의 팽창과 유럽과의 공조관계⁹⁶⁾ 혹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팽창 등을 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실리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조 그리고 경쟁과 갈등이 교차되면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미국기업의 대러 무역 확대와 투자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통상관계의 특징은 정치적 사고가 경제관계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양국 간 무역 분쟁 현상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이란과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

93) Ševcova(2007), pp. 48~49.

94) 권경복(2007), A16.

95) 김기훈(2007), p. A19.

96)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후에는 스페인)와 공동보조를 취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정권 교체 이후 이 공조관계는 퇴색하고 있다.

무기수출독점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Rosoboronexport)사와 기타 방위업체들에 대해 강한 비판과 더불어 경제제재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산 육류와 가금류의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러시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상 조치와 러시아의 전략적 산업 부문에 참여하는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재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⁹⁷⁾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은 WTO 협상과정의 주요의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주요 의제는 농업과 서비스 부문, 특히 은행과 보험, 법률서비스 부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정부보조금, 수출관세의 인하와 철폐, 에너지 국내외 가격차이 문제, 독과점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 등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에서 특히 농업 부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련방 붕괴 이후 1990년대 러시아는 부족한 육류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으로 보충하였으나, 푸틴 정부가 자국 육류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육류 수입제한 정책을 추구하면서 2003년 4월 초 미국산 육류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미국측은 러시아의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검역위생으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유발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시 수입산 육류에 대한 러시아 검역 규정의 투명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지원액을 연간 92억 달러까지 요구하고 있어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⁹⁸⁾ 농업보조금 문제는 러시아와 WTO 다자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WTO 협상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중국 다음으로 ‘해적판’이 난무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위조품은 주로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등의 브랜드 제품, 식료, 향수, 주류 및 담배제품, 불법 CD와 DVD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WTO의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97) RIA Novosti(2007. 4. 2).

98) RIA Novosti(2007. 9. 5).

미국은 WTO 협상과정에서 러시아의 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경제개발통상부는 금융 및 보험시장의 완전개방은 러시아의 WTO 가입 후 7~1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EU는 유예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통신 부문에 대해 해외서비스 공급자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업체의 지분 소유는 최대 49% 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미국은 EU와 함께 그러한 상한선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⁹⁹⁾

미국은 러시아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전략부문으로 규정하여 해외기업의 진입과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편, 가스프롬이 유럽 가스 인프라의 인수에 관심을 갖고 유럽 시장으로 팽창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¹⁰⁰⁾ 또한 미국은 EU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내 에너지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내 에너지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천연가스는 1/6, 전력은 1/5, 석유는 1/4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정부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점진적으로 국내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러시아가 추진하려는 ‘가스 OPEC’ 창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 등이 지지하고 있는 가스 카르텔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만일 카르텔이 형성될 경우 미 법원은 가스 카르텔 회원국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¹⁾

미국은 몇몇 대형 프로젝트(사할린 1, 2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세무조사의 강화 등을 비판하면서, 이는 명확한 법률과 제도의 투명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의 협조가 이루어지면 2007년 5월에 가입 협상이 시작된 러시아의 OECD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99) *RIA Novosti*(2007, 3, 26).

100) *RIA Novosti*(2007, 4, 19).

101) *RIA Novosti*(2007, 4, 27).

와 OECD 가입이 이루어지면 러시아의 국제화는 물론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부족했던 회계와 재무제표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 및 투자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은 거의 5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소연방 해체 및 체제전환 초기에 물품 부족난을 겪었던 러시아가 중국산 저가 생필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중국에 원자재 수출을 급속히 증대시킨 데 기인한다. 그 이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1998년까지 양국간 교역량은 약간의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199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2006년에 양국 교역량은 연평균 27% 증가하였다. 2006년 양국의 교역량은 334억 달러로, 러시아는 중국의 8번째, 중국은 러시아의 4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 상반기 동안 양국 교역량이 204억 7,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표 5-9. 2000~2006년 중국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단위: 만 달러)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교역량	800,324	1,067,054	1,192,743	1,575,800	2,122,553	2,910,122	334
수 출	223,335	271,116	352,074	602,993	909,812	1,321,128	158
수 입	576,989	795,938	840,669	972,807	1,212,741	1,588,994	176
무역수지	-353,654	-524,822	-488,595	-369,814	-302,929	-267,866	-18

주: 세관 기준, 무역수지는 필자가 계산한 수치임.

* 1억 달러.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07a).

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에는 400억 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⁰²⁾

중국의 대러시아 수입 상품은 연료, 원자재, 비료, 목재, 수산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 상품은 섬유 및 의류, 전자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조 모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¹⁰³⁾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석유, 목재, 수산물, 석탄을 반입하는 대신 생필품 등을 반출하는 국경무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양국간 국경무역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7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상품교역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인적교류는 1995년 49만여 명에서 2005년 무려 222만여 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러시아인의 중국 여행자 수는 한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보따리 무역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기업인과 관광객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이 확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 및 재계에서는 양국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미중 교역량의 1/6, 한중 교역량의 1/4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양국간 대규모 프로젝트가 부재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⁵⁾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이 실현될 경우 수입관세 인하와 더불어 통관절차 등이 완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모든 분야에 걸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원자재 및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

102) *RIA Novosti*(2007, 8, 10).

103)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6년에 중국은 4억 6,000만 달러에 이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61.8% 증가한 수치이다(*Xinhua News Agency*, 2007, 6, 18).

104) *RIA Novosti*(2007, 2, 14).

105) *Xinhua News Agency*(2007, 6, 11).

원과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말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이 송유관을 통해 중국의 대러시아 원유수입량은 연간 2억 1,9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은 경제대국을 넘어 군사대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국은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에 수출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10년경에 중·러 양국간 교역규모를 600억~800억 달러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한 후진타오(Hu Jintao) 중국 국가주석의 전망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나. 중국과 러시아 투자 현황과 전망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온 반면, 1990년대 말까지 양국간 투자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0년부터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러시아에 700개 이상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실행하였으며, 주로 에너지 및 자원채굴, 목재가공, 가전제품, 건설자재, 통신부문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⁶⁾ 2006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6억 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2006년을 ‘러시아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 러시아에서는 2007년을 ‘중국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중·러 양국간 투자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79건으로 4억 1,000만 달러였으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1.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

106) *China Daily*(2007. 3. 17).

광물자원, 경공업, 섬유산업, 농업, 건설, 서비스 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를 하였다. 2006년 러시아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26건으로 2억 3,000만 달러였으며, 주로 제조업, 건설업, 교통부문, 그리고 핵에너지와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최근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부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불가연방관구에 위치한 석유회사인 우드무르트네프트(Udmurtneft)의 지분 인수 외에도 사할린-3 프로젝트의 베닌스키(Veninsky) 광구의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5~2006년에 중국 국영석유화학공사(Sinopec)는 러시아 우드무르트네프트(Udmurtneft)사의 지분 96.9%를 인수하기 위해 3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¹⁰⁷⁾ 또한 중국 국영석유화학공사(Sinopec)는 러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와 사할린-3 프로젝트의 베닌스키(Veninsky) 광구의 유전을 탐사·채굴하기 위해 베닌 홀딩(Venin Holding)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지분은 로스네프트와 Sinopec이 각각 74.9%, 25.1%씩 갖기로 하였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1단계 건설 구간의 종착지인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 국경까지 연결하는 송유관 지선을 건설하는 사업(건설비용 4억 3,600만 달러)에 트란스네프트(Transneft)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6년 3월 CNPC와 가스프롬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알타이가스관 건설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동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시베리아의 북부지역에서 신장-위구르 지역까지 2,700km에 달하는 이 가스관의 건설비용은 110억 달러로 추정된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투자협력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최근에는 전력협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통합전력회사(UES)는 중국 국영송전회사

107) Fischer(2007), p. 9.

(State Electric Grid Corporation of China)에 600억 kW/h의 전력을 송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초기 단계인 2008~2010년에는 연간 43억 kW/h의 전력을 중국에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러 국경지역에 러시아산 석탄을 사용하게 될 화력발전소를 건설(10GW 용량)하여 중국에 전력공급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⁸⁾

이 외에도 최근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 중에서 자동차 부문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영자동차회사인 체리(Chery Automobile Co. Ltd.)는 2006년 2월 칼리닌그라드에 소재한 러시아 압토토르(Avtotor)사와 5년 계약으로 체리 자동차를 조립하여 생산하고 있다.

2007년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중국 전시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20건에 총 43억 달러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7월 제11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농업에서 자동차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19건에 총 20억 달러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향후 양국간 투자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기업들이 자국의 지방에 투자진출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이 2020년까지 120억 달러를 러시아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¹⁰⁹⁾

중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동부지역 개발이 중국은 서부 및 동북부지역 개발이 시급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투자협력 전망은 밝다고 판단된다. 특히 양국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의 틀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민간 차원의 투자협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108) *RIA Novosti*(2006. 11. 10).

109) *China Daily*(2007. 3. 17).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극단적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냉전시기 사회주의 동맹국에서 1960년대의 사회주의 이념분쟁과 1969년 영토분쟁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1989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관계는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996년부터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교류협력이 더욱 증진되고 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푸틴 집권 2기인 2004년부터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2004년 9월 중국은 제일 먼저 러시아의 WTO 가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은 2004년 10월 국경협정에 서명하여 4,300km에 이르는 국경선의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국경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러 양국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경에 양국간 교역량은 700억 달러에 이르고, 2020년까지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즉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공히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인 반면,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위급 정치가와 기업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기구나 제도의 확립이라 판단된다. 양국은 정례적인 정상회의, 총리회의, 부문별 각료회의,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 경제투자 박람회 및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교역 및 투자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러시아·중국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유익한 무역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당국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기도 한다. 이 센터는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중국 시장에서 러시아의 제품 및 서비스 촉진, 러시아와 중국에서 언론홍보, 사업 파트너 모색, 러시아 정부당국과의 계약 체결, 회사 및 대표부 등록, 부동산 구매,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기타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

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국경지대,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역과의 국경지대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07년 3월 중·러 양국이 향후 10년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간의 협력과 발전이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중국은 중·러 국경지대 협력을 자국의 동북지역에 낙후된 산업기반을 재건하는 전략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러시아에 기계와 전자제품, 생필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로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 목재를 주로 수입하는 현재의 일방적인 무역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은 1992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996년에 사상 최대치인 약 44억 달러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1998년에는 약 2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다시 양국 교역량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9~2006년 기간 동안 일·러 양국의 교역규모는 3.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1조 5,658억 700만 엔(132억 687만 달러)이었으며,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과 수입은 각각 8,213만 6,100만 엔(69억 2,781만 달러)과 7,444만 4,600만 엔(62억 7,907만 달러)으로 일본은 769억 1,500만 엔(6억 4,874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¹¹⁰⁾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구조도 기타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러시아로

부터 주로 알루미늄, 어류와 수산물, 석탄, 원유, 목재 등 1차 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의 대부분은 자동차, 기계 및 설비, 가전제품, 강관 등 제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999~2006년 기간 동안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은 무려 15배나 증가하였다. 반면 이 기간에 일본의 대러시아 수입은 불과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러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철수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일본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러시아 통상정책을 강화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일본의 대러시아 수입이 EU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에너지원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향후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러시아 경제의 성장에 따라 생산재와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생산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6위인 러시아의 승용차시장 규모가 조만간 세계 4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에서도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¹⁾ 둘째,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 표 5-10. 1998~2006년 일본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

(단위: 백만 엔)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교역량	505,249	483,234	555,195	555,439	527,977	694,211	954,570	1,178,028	1,565,807
수출	127,569	54,691	61,404	87,020	118,162	203,995	337,268	495,313	821,361
수입	377,680	428,543	493,791	468,419	409,815	490,216	617,302	682,715	744,446
수지	-250,111	-373,852	-432,387	-381,399	-291,653	-286,221	-280,034	-187,402	76,915

자료: Statistics Bureau & Statistic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2007).

110) 2007년 7월 27일 기준으로 달러당 118.56엔을 환산한 수치이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했음.

111) 2006년 러시아에서 판매된 외국산 브랜드는 100만 대였으며, 2015년경에는 250만~350만 대가 판매 될 것으로 추정된다(외교통상부(2007b) 참고).

대러시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러시아 수입에서 단기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할린-1,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2단계 건설이 완공될 경우 에너지 수입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사할린-1과 사할린-2 프로젝트의 참여로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는 1995~2000년까지 대러시아 외국인투자국 순위에서 8~10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는 해외투자국 ‘Top-10’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본은 2006년에 전년대비 5배 증가한 6억 9,5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이는 러시아 내 전체 해외투자 비중에서 1.3%에 불과한 수치였다.¹¹²⁾ 2006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누계액은 27억 2,500만 달러로, 러시아 내 전체 해외투자액의 1.9%를 점유하고 있다.

■ 표 5-11. 2006년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와 투자 누계액 ■

(단위: 백만 달러)

해외투자국	2006년까지 누계액	백분율	해외투자 누계액 형태			2006년 해외투자 규모	2000년 해외투자 규모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총 투자액	142,926	100	67,887	4,902	70,137	55,109	10,598
일본	2,725	1.9	249	1	2,475	695	117(1.1%) 9위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2001), p. 579; Росстат(2007).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에너지, 소매업, 가전제품, 자동차조립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대러시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

112) RIA Novosti(2007, 2, 26).

다.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 지역에 각각 1억 4,000만 달러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5만 대씩 자동차를 생산하는 조립공장 설립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표 5-12.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별 러시아 내 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 달러)

제조업체	투자금액	연간 생산능력	공장입지	생산 시작연도	비고
Toyota(일본)	140	50,000대	St. Petersburg	2007년 12월	
Nissan(일본)	200	50,000대	St. Petersburg	2009년	향후 10만대 증산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Autos Forecast, 심현정(2007), p. 60에서 재인용.

구미국가와 중국과는 달리,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사할린-1과 사할린-2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면 특히 더 그렇다.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가 미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쿠릴열도 4개 섬에 관한 영토문제, 러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 등에 기인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협력 정책은 실리를 위주로 하는 정경분리(영토문제와는 별도로 일본 국익의 극대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 전환은 일본 경제의 내부적 문제 이외에도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 그리고 일본의 경쟁국인 중국과 구미국가들의 투자 증진 등의 영향에도 기인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평가사(JCR)는 2007년 3월에 러시아의 투자신용등급을 세계 3대 투자신용평가사보다 높은 A-를 부여하고 있다.¹¹³⁾ JCR의 높은 투자적격성 부여는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향후 일본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협력은 에너지와 교통 부문 이

113) RIA Novosti(2007, 3, 19).

외에도 관광, 금융, 통신, 원전, 우주항공, 기계 등의 하이테크 부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기타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WTO 가입 시 일본도 IT, 교통, 은행, 보험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대러시아 교류협력에서 ‘정경일치’ 정책, 즉 영토 문제(쿠릴열도)의 해결 없이는 경제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일본과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협력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성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의 풍부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2003년 1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정치, 경제 등 6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러·일 실행계획’에 합의함으로써 대러시아 교류와 협력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정경분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때부터 일본과 러시아의 통상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협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미국과는 달리 WTO 가입협상 초기 단계부터 러시아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제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러시아 교역 및 투자를 정부 산하 기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 산하의 로토보(ROTOVO)가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여 자국 기업들에 제공하면서, 이들의 대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¹¹⁴⁾ 또한 일본 정부는 2005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양국간 비자 간소화 문제를 제안하였다. 일본은 비자 간소화가 양국의 통상협력 증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정보통신 등 12개 협정문서에 조인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홋카이도)과 서부연안지역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 특히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기업들은 러시아의 석유·가스, 전력 등 에너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교통(고속전철사업) 부문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대형 사업은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협정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은 국가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평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은 공통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가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서비스 부문(은행, 보험, 투자, 법률, 통신, 교통 등)의 개방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과 EU는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의 시장 개방수준을 보다 높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는 항공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과 서비스 부문 및 농업 부문에서 기타 국가들보다 경쟁력과 노하우 등을 갖고 있어 러시아 시장의 빠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114) 1967년 1월 16일 경제단체연합회(Federation of Economics Organization)가 설립한 SOTOVO(Japanese Association for Trade with Soviet Union and Socialist Countries of Europe)가 1970년 8월 12일부로 일본 통상성에 편입되어 활동해 왔으나, 1992년에 ROTOVO(Japanese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and Eastern Europ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본재와 기계류 등의 대러시아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금까지 대러시아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 수출이나 국경지역에서의 인력 협력 등이 주요 협력 형태였다. 최근 중국은 점차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자원개발, 자동차산업 분야 등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과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과 EU는 부가가치가 높은 에너지 자원개발과 첨단기술 및 서비스 부문의 대러시아 진출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WTO 협상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력의 수위는 미국, EU, 일본, 중국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러시아 에너지 협력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EU, 미국, 일본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상호경쟁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한편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가 가장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의 핵심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독일과 중국은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른 주요국들보다 전 부문에서 대러시아 통상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매결연도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인 교류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간 상품 및 투자 박람회 혹은 전시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5-13. 주요국의 대러시아 국가전략 기조와 통상전략 비교

주요국가	국가전략 기조	통상전략
EU	·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협력 협정 · 4개의 공동공간(경제, 자유 · 안전 · 정의, 국제안보, 연구 · 교육 · 문화)의 창설과 로드맵의 실현 · 에너지현장 비준 체결 · 에너지의 정치 수단화 견제 (가스 OPEC 창설 등) · 테러리즘, 마약, 범죄 공조협력 · G8과 EU-러시아 정상회담 (연간 2회) 정례화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전략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개방 · 법규와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EU기업의 진입 허용과 투자보장 · 가스, 석유운송의 독점권 해체 · 에너지 절약 및 환경협력 강화 · 에너지 국내의 가격편차 해소 · 우주, 항공 등 하이테크협력 강화 · 중소기업 협력 강화 · 농수산물 검역 및 통관, 회계의 투명성 · 농업보조금과 수출 관세 문제 해결 ·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 칼리닌그라드 통과문제와 비자간소화
미국	·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 테러리즘, 마약, 범죄 공조협력 · 에너지의 정치 수단화 견제 · 러시아의 강대국 부활 견제 · 러시아와 EU의 동맹 견제 · 중국 견제 · G8과 APEC 정상회담	· 전략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개방 · 법규와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미국기업의 진입 허용과 투자보장 · 에너지원의 수입 다변화 · 에너지 국내의 가격 편차 해소 · 자동차, 항공기 관세 인하 ·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 농수산물 검역 및 통관, 회계의 투명성 · 농업보조금과 수출 관세 문제 해결
중국	·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 공고화 · 미국의 일극체제 지양에 대한 공조협력 · 미일 동맹 견제 · 국경협력과 서부개발과 동북부지역 개발 · SCO 및 APEC 정상회담 및 개별 정상회담과 총리 및 정부관료 회담의 정례화	· 전 부문에서 협력 강화 · 에너지(석유, 가스, 전력) 협력과 수입 확대 · 시베리아 · 극동개발 협력 · 방위산업과 하이테크 부문 협력 · 중소기업 협력 · 시베리아 · 극동개발 협력 · 국경무역 협력 · 인적자원 교류협력 · 농업 · 수산업 · 어업 협력
일본	· 영토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 정경분리 정책에 입각한 대러시아 관계 개선 · 중국 견제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및 북부 지역 개발 · G8과 APEC 정상회담	· 에너지원의 수입 다변화와 자원개발 참여 · 시베리아 · 극동개발 협력 · 생산재와 소비재의 시장 확대 · 연안무역협력 · 수산업 협력

자료: 저자의 본문내용을 토대로 작성.

표 5-14.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이 주는 시사점 비교

주요국가	시사점
EU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2), 서비스 부문(금융, 보험, 유통, 물류, IT, 증권, 법률 등)(1), 물류(네덜란드), IT(핀란드), 금융(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조세피난처(키프로스), 유통(독일, 스웨덴), 동포지원 및 활용(독일, 폴란드, 핀란드), 증권(영국), 에너지 협력(영국, 독일, 프랑스)(1), 하이테크기술협력(1), 국경무역(2)
미국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3), 서비스 부문(2), 에너지 협력(3), 하이테크기술협력(2), 국경무역(4)
중국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1), 소비재 및 생필품(1), 에너지 협력(2), 인적협력(1), 국경무역(1)
일본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4) 제조업의 국제경쟁력(1), 국경무역(3)

주: () 안은 각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우선순위를 의미함.

자료: 저자의 본문내용을 토대로 작성.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세제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업 정보와 투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한국과 러시아 지역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 ‘한·러 극동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EU,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러시아 동부지역의 자원개발 참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국력과 자본력,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한국은 에너지 자원 및 물류 협력에서 러시아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중소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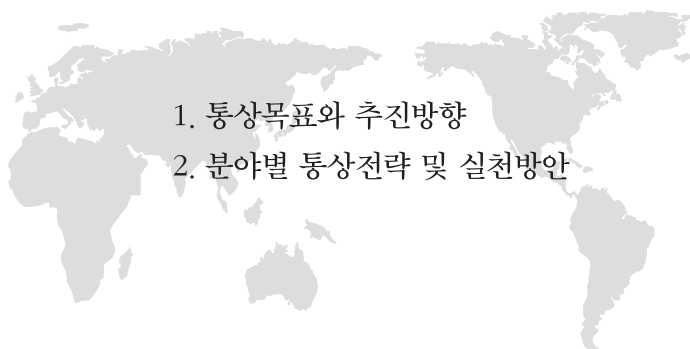
미국의 Citibank나 유럽의 주요은행들이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은행도 러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민간은행의 대러시아 진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 은행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상의 불편 때문에 한국 기업의 대러 무역 및 투자, 혹은 현지법인 운영시 금융 문제가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계 은행이 현지에 진출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 기업의 투자도 촉진되어 한·러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근 우리은행이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는데, 가능하다면 극동지역까지 한국계 은행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러시아는 EU에 이어 한국과 FTA 체결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품의 대부분은 일방적인 수출 특화품인 반면에 러시아로부터 수입품의 대부분은 일방적 수입 특화품으로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FTA 체결시 한국의 제조업 수출과 서비스 부문의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 FTA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6장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목표와 추진방향

가. 해륙국가로의 귀환: 대륙을 향한 기회의 창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은 이중적이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양면성을 가지며, 이것은 정체성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패권을 경쟁하는 각축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과 해양으로 나가는 관문,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한반도의 경영능력에 달려있다.¹¹⁵⁾

그렇다면 21세기 한반도는 대륙-해양 세력 충돌에서 어떻게 생존과 활로를 모색할 것인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운명철에 따르면, 한반도와 대륙의 일부를 차지했던 우리의 역사적 영토는 동해, 남해, 황해, 동중국해로 이어진 동아시아중해(East Asian Mediterranean Sea)의 중핵에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중핵조정역할을 실현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이다. 그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전통적으로 견지돼온 육지 위주의 질서

115) 임혁백(2007), pp. 6~15.

를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해양질서를 수용하면서 복합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즉 동아시아중해의 중핵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각국을 연결함으로써 자국 중심의 거대한 망중핵(網中核, core)을 구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¹¹⁶⁾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동아시아의 핵심인 동아시아중해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북방대륙, 한반도, 일본열도를 하나의 유기체에서 사고하는 해륙복합사관이 필요하다. 20세기 후반 냉전시기 분단체제에서 한반도는 중국-소련-북한으로 구성된 대륙의 북방삼각동맹과 미국-일본-한국으로 구성된 해양의 남방삼각동맹이 대치함에 따라 해륙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일종의 ‘섬’으로 전락했고, 동아시아중해는 ‘절름발이 지중해’가 되어 버렸다.¹¹⁷⁾ 따라서 새롭게 열리는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분단의 역사와 단절하고 통일한반도가 동아시아중해 문명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정체성을 동아시아중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대륙과 해양을 함께 경략하는 ‘해륙(海陸)국가’¹¹⁸⁾로 귀환(歸還)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의 국가전략이 과거 분단과 냉전에 의해 초래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를 이들 양 세력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흡수하고 소통시키는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러시아는 해양-대륙 복합화 전략¹¹⁹⁾ 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 않는다면 새롭게 열리는 유라시아대륙의 지평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해륙(海陸)국가’로서의 정체성을

116) 윤명철(2005), p. 53.

117) 윤명철(2005), pp. 150~151.

118) 아직도 국내에는 ‘해륙국가’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선택에서 여전히 ‘해양세력화’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은 강고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사의 변동을 ‘해양화의 세계화’로 보는 김진현은 “대륙과 해양을 ‘완전히’ 소화하는 반도 문명의 새도전”으로 표현했다(김진현(2007), pp. 77~78).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온건한 입장과는 달리 ‘해륙국가’에 대한 담론을 마치 “몰지각한 좌경적 민족주의 세력”이 해양지향의 역사발전 경로에서 이탈하여 대륙으로의 회귀(回歸)를 도모하는 것으로 비판하기도 한다(이대근(2007), p. 67).

119) 신범식(2005).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온전한 의미에서의 ‘한반도경제권’¹²⁰⁾을 복원하고, 동시에 그간 해양에 치우친 국가발전전략의 벡터를 대륙으로 전환하여 대륙으로 열린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TSR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연계하는 단순한 대륙철도가 아니라 유라시아를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하고 있는 교통로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나 성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일견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유라시아 공간을 향해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을 투사하고, 이 공간에서 상이한 문명·민족간 공존과 호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TSR 등 유라시아대륙철도망과 연결하여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또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사업(East-siberian pacific Ocean Oil Pipeline), 동부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 통합가스 공급시스템(Unified Gas Supply System), 단일전력송전시스템(Unified Power Transmission System) 등은 단순히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물류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 동북아에너지 협력체로 나아가는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road)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북핵위기의 해소가 에너지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에너지 실크로드는 미·중·일·러·남·북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이익의 공유를 담보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유지에 모든 나라들이 이익을 같이하는 ‘평화이익’을 창출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건설하는 사업이 된다.¹²¹⁾ 그런 의미에서 ‘해륙(海陸)국가’로 귀환(歸還)하는 도상에서 러시아와의 이익 공유는 과거처럼 해양세력과 대륙

120) 양문수와 이남주는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비전으로 ‘한반도경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개방적 한반도경제권을 형성하여 남한경제, 북한경제, 동북아경제의 연관성을 높이는 제안이다. 이 개념은 북한의 체제전환, 남북 경제통합, 개방적 한반도경제 형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적이며 동태적인 통합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문수·이남주(2007, pp. 150~168) 참고.

121) 임혁백(2007), p. 13.

세력의 갈등이 한반도에 의해 진화(鎭火)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소지역주의를 넘어 ‘열린 동북아’로

현재 동북아에서 논의되는 지역주의 및 다자주의 경제협력구도에서 실리 추구 차원에서 사안별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러시아에 접근하는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장기지속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장기적인 호혜성의 원칙에서 한·러 경제협력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러시아를 ‘동북아’의 주요 행위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면서 한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지역주의와 관련된 대다수의 논의에서 동북아의 지리적 범주는 교통·물류, 에너지, 환경협력 등 사안별로 접근할 경우에만 러시아의 극동, 혹은 광의의 지리적 범주로 러시아 전체를 ‘동북아’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흔히 한·중·일 3국체제로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북아가 ‘상상의 지리(imaginative geography)’¹²²⁾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북아’ 개념을 새로운 공간적 상상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동북아’ 구상에 경제적 이해관심과 안보적 이해관심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복합화된 형태로 추진되는 공간적 상상력이 자리하고 있다면, 자기중심적 편익에 따라 러시아를 편입 또는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¹²³⁾ ‘개방성’과 ‘다층성’을 기초로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며 유연하게 다자적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동북아를 재설정해야 한다.¹²⁴⁾

그동안 한국은 ‘동북아중심’ 구상을 실천하면서 한·중·일 3국체제만을 염

122) 상상의 지리란 자신이 속한 공간의 외부에 있는 생경한 공간을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상이나 연상, 허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움으로써 인식한 지리이다. 에드워드 사이드(1999), pp. 107~108.

123) “한국은 지금까지 러시아를 주로 에너지 자원의 공급자로 간주하고, 바로 이 분야에서만 동북아 지역 협력이라는 다자 메커니즘의 동반자 내지 참가자로만 받아들여 왔다. 이렇게 해서는 동북아 지역 통합의 가치 있는 참여를 원하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렉산드르 제빈(2004).

124) 성원용(2004a), pp. 138~139.

두에 둔 전략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한국의 경쟁상대이며 협력의 동반자인 중국이나 일본이 자신의 국가전략을 투사하는 공간적 범위를 동북아라는 소지역(sub-region)을 초월하여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장해온 반면, 한국은 동북아라는 소지역적 공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심적’ 위치라는 주관적인 지정학적·지경학적 범주에 갇혀 왔다는 데 있다.¹²⁵⁾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그간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이론적 담론과 전략적 실천은 실제로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 중심적 소지역주의에 갇혀 중국과 일본의 대국주의적 패권 경쟁에 대한 조정에 급급한 소모적 세력균형을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¹²⁶⁾

따라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동북아 역내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상상의 지리’로서 동북아 구상은 ‘열린 동북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공간적 외연은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러시아를 ‘열린 동북아’의 정당한 일원으로 적극 포용하고, 그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열린 동북아’에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가 공히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협력의 공간인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러·중·일 3자 관계가 중·일의 상호 견제로 난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 또는 일본 중의 한 나라를 선택할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은 중·일 간 경쟁 구조에서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¹²⁷⁾ 한국은 바로 이러한 유리한 역학관계를 적극적으로

125) 원동욱 외(2006), p. 186.

126) Park(2006), pp. 1~28 참고.

127) 정여천·김석환(2004), pp. 218~220.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반도가 과도하게 이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고,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로서 더더욱 러시아와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 유라시아(Eurasia)에서의 전략적 협력

향후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등과의 경제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복합적 구도를 형성해갈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다자간 경제관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는 지점을 공간적으로 집약해서 표현하면, 동부에서는 시베리아·극동의 접경지역, 서남부지역에서는 카프카스와 카스피해 연안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접경지역이 될 것이다. 이 두 축을 광역화하면 그 공간은 결국 유라시아대륙이 될 것이다.

현재 유라시아 공간에서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이른바 ‘러시아 남부벨트(Russian Southern Belt)’는 과거 지역 내외 국가들간 세력경쟁을 촉발시킨 ‘거대게임(Great Game)’을 재현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패권쟁탈이 발화되고 있는 전략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자원 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운송로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의 국가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21세기 유라시아지역 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 지역으로의 세력팽창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서서히 침식해 들어가고 있고, 이에 맞서 사실상 CIS 통합의 맹주(盟主)라 할 수 있는 러시아는 수성(守成)의 구도로 유라시아 공간에서 ‘배타적 영향력 복원’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3,400km의 국경을 접한 중국이 군사안보적 관점과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유라시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유라시아판(版)과 원거리에 위치한 일본조차 ‘신(新)실크로드외교’ 노선에 입각하여 중앙아시아 진

출전략을 본격화함으로써 신거대게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¹²⁸⁾

유라시아판(版)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각축은 비단 ‘러시아 남부벨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낙후된 시베리아·극동지역을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부로 급부상한 아태지역 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열망을 분출시키고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이 점차 활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역경제의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내륙 접경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교역부문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동북3성을 중심으로 노후한 산업기반을 재건하는 전략과 연계해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²⁹⁾ 미국, 그리고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고도로 특화된 교역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전략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7년 6월 일본의 아베 총리는 러시아측에 총 8개 분야에 걸쳐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극동·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 러·일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통신, 교통, 환경 분야를 최우선 분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처럼 동북아의 행위자들이 자국의 지경학적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그에 따라 유라시아판(版)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한다면 한·러 경제관계의 지전략적(地戰略的) 이해관계도 유라시아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내세워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유라시아통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들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역내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

128) 신범식(2006), pp. 102~149.

129) Bardal 외(2006), pp. 21~40; Kucheryavenko(2007).

망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모색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한·러 경제관계는 양자관계 그 자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우회로이자 교두보라는 인식 속에서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러시아와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에 착수해야 한다.

2. 분야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

가. 시장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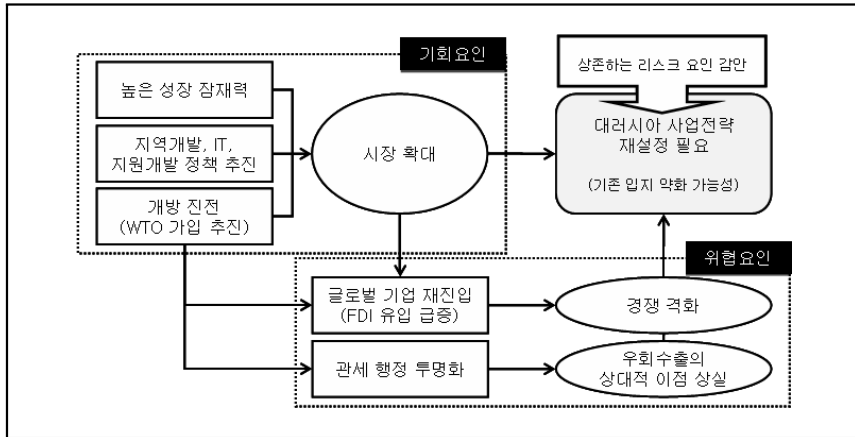
1) 공격적인 수성(守成) 전략과 현지 생산체제 구축

현재 러시아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체제전환의 대혼란을 극복하고 최대의 경제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역에서는 ‘성장과 도약’의 거대한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 시장은 오일머니를 겨냥한 한국의 대러수출이 급증하면서 ‘효자시장’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기업이 1998년 모라토리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지속함으로써 러시아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로 새로운 대러 통상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철수하거나 소극적인 경영형태를 보이던 서구와 일본 기업이 다시 공격적인 경영형태를 보이면서 이제 바야흐로 러시아시장은 쫓고 쫓기는 사활을 건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마

■ 그림 6-1. 러시아의 경영환경 평가 ■



자료: 오승구 외(2006), p. 15.

땅한 투자 요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규제 정비에 미흡했던 러시아측에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현실은 예전처럼 느긋하게 러시아에게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잠재력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례하여 위험요인이 많은 시장이고,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진국의 글로벌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마케팅력이 떨어지는 한국 기업은 공급자 중심의 러시아 시장환경에서 ‘모라토리엄’ 이후 절묘하게 형성된 소비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호혜적인 투자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러시아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시장 공간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이 점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경제제도, 법령 및 관행 등이 점차 투명화되면 불완전한 미개척 시장이라는 특징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 한국 기업이 선진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의 WTO 가입이 현실화되면 통관 투명화 정책으로 관세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우회수출로

의 상대적 이점도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 기업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저가공세와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고급기술 사이에 끼여 선점한 시장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임박한 파국’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위험요인이 병존하는 현 시점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위한 적기라는 판단하에 보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방 및 일본기업의 공격적인 현지생산체제에 맞추어 한국도 현지생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회피한다면 투자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결정에 의해 러시아로부터 ‘강제투자’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한국 기업의 현지생산체제 구축 등 대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협력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수많은 ‘위원회’가 경제협력의 주체인 민간기업에게 제공할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조급한 의사결정은 대러 투자의 실패 사례를 낳고,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각인시킬 뿐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제도, 법률, 규제가 모호하고 자주 바뀐다고, 그래서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불평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제도·법률·규제 등을 판독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에 있다.¹³⁰⁾ 투자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에서 리스크의 크기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될 수 있는가에 있다. 한·러 경제협력 17년이 지났지만 러시아의 제도·법률·규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130) “러시아의 제도환경은 나름대로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러시아로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러시아 진출에 실패한 기업들의 경우, 러시아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 부족과 정상적 절차와 법적 처리를 피하기 위한 편법 동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재호 (2006), p. 45.

고 있다. 때문에 기업에게 상세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러 투자정보센터’와 같은 기관을 한·러 양국 정부 지원으로 설립해야 한다.

이제 러시아에서 공격적인 수성(守成)의 시장 진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러시아의 물류체계가 매우 열악하고, 경제활동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 기업들을 위한 복합물류단지를 시장권역별로 건설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WTO 가입 이후 물류시장의 개방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도 준비해야 한다.

2) 지역별 차별화·다변화 전략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기업이 진출하여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러 진출은 다변화될 시점에 이르렀다. 대상을 기존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 상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다변화 전략을 추진 시 러시아는 지역별로 상당한 경제력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한 세심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¹³¹⁾

러시아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시베리아·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 러시아는 낙후된 시베리아·극동지역을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부로 급부상한 아태지역 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열망을 분출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국의 지경학적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21세기 한민족의 국운을 대륙으로 확장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교량적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양국의 이해관계의 접점을 확인한다고 할 때,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의 교두보이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은 한국의 대륙 진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다.

131) 이에 대해서는 김득갑(2007, pp. 468~470) 참고.

기본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투자 진출에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¹³²⁾ 우선 광활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작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극동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금, 다이아몬드, 목재, 수산물 등 천연자원 개발 및 가공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반면에 일반 소비재(공산품) 제조기반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일반 소비재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수입상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막상 현지 투자를 고민할 경우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아직까지도 외국인자본 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물론 최근 건설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도 도로, 철도 건설, 항만 개보수, 발전소 확장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자원개발형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자원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땅한 수송로가 확보되지 않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제도·규제 측면의 환경도 과거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관료주의의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러시아 전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이다.¹³³⁾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은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다. 극동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고, 주민의 소득수준이 모스크바를 제외한 기타 지역보다 높아 도소매 유통업체의 투자 진출 여지는 남아 있다. 물론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및 구매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선 러

132) 성원웅(2007), pp. 78~81 참고.

133) 기업조사기관인 Expert가 러시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극동지역은 법률체계의 불안정성, 행정 장애요인, 기업의 탈법성 정도 등에 의한 투자위험도가 북부 및 서부지역보다 1.5배 높게 나타났다. (Popov(2005), p. 17).

시아 전체의 경제성장 추세에 편승하여 극동지역에서도 견실한 경제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러시아 전체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득 증대와 소비의 팽창이 관측되고 있고, 대략 3~5년이 지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의 서부지역에서 시작된 경제호황의 ‘온기’가 극동지역에 미치게 될 것이다.¹³⁴⁾ 이 시점을 가정한다면 일본 및 서구 기업의 공격적 전략이 가시화되기 전에 기회선점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대한 자원 공급지이다. 극동지역은 한국과 근거리에 있고, 향후 통일 한반도를 내다볼 경우 극동의 연해주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 지역은 북·중, 북·러 접경지역을 경유하여 북한의 북서지역으로 진입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포석도 고려해야 한다.

3)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만일 한국이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로드맵을 실천해 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¹³⁵⁾을 체결해야 한다.

한·러 FTA 체결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이미 2004년 9월 20~23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때 FTA 체결에 대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한·러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실행 계획」에는 ‘교역체제의 상호 추가적인 자유화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¹³⁶⁾

134) 지방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제품 보급에 대략 3~5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보급률을 보면 모스크바(134%), 상트페테르부르크(119%), 볼가(75%), 시베리아(69%), 극동(67%)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오승구 외(2006), p. 18).

135)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36) “양측은 교역체제의 상호 추가적인 자유화의 가능성을 연구하면서 전반적인 통상, 투자, 경제 협력 증대 및 강화에 대한 준비를 위해 관계 부처, 경제·학술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 전문가그룹을 창설할 것이다. 상기 그룹은 러시아의 WTO 가입 후 즉시 작업을 시작한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실행계획」(「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совмест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러 간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고,¹³⁷⁾ 대러 수출에서 높은 관세율이 교역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러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부충격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숨쉴 수 있는 중간지대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ASEAN 등을 비롯해 한·러 FTA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한·러 FTA 체결이 단순히 교역구조의 보완성에 기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양국에 존재하는 ‘전략적인 보완성’을 현실화하는 도구로 해석하기도 한다. 2000년 이후 국가간 FTA가 단순한 관세철폐 협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국가간 시장통합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여 향후 한·러 FTA 체결도 기존의 FTA 협정처럼 상품관세율을 낮추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국간 긴밀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¹³⁸⁾

따라서 한·러 FTA의 방향도 이러한 내용을 담보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미 러시아와 인도는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2006년 2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 「한·러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실행계획」에서 밝힌 대로 ‘교역체제의 상호 추가적인 자유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러 양자경제동반자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동연구 예비협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러 BEPA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운영세칙(TOR)을 확정하고, 향후 공동연구그룹(JSG)을 발족할 예정

в област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37) KIER가 조사한 한국과 러시아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은 자동차, 정밀기기, 기계·전기·전자, 섬유, 플라스틱·고무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1차산업 및 원자재 가공업에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석유·석탄 등 광물성연료와 목재, 가구, 철강 등 원자재 가공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분야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여천(2007)).

138) 정여천(2007).

이다.¹³⁹⁾ 정부는 러시아의 WTO 가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러시아와의 CEPA 체결을 가정하여 협상과정에서 국가전략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하고, 향후 한·러 CEPA가 가져올 경제적·경제외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나. 투자확대

1)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 개발

한·러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많은 논자들은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동북아의 지역주의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어두운 기억과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서 러시아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본격적인 우호 협력을 추진하기에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공유해 왔다. 또한 최근 러시아에서조차 일부 논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만이 러시아에 위협을 주지 않고 중국, 일본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¹⁴⁰⁾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한·중·일 3국체제에서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오직 잠재력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푸틴 정부의 동북아통상정책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처럼 무원칙적으로 대외관계의 급격한 개선을 도모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러시아의 대내외적인 이익을 담보한다는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적극적인 관계발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일본의 집요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냉정과 열정을 오가는 ‘전략적 모호함’을 보여주는

139) 외교통상부(2007).

140) Сурин(2007).

반면, 중국과는 지정학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화하는 상반된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은 대러 통상관계에서 단일한 자세를 버리고, 러시아와의 이익 공유라는 대원칙이 견지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이를 지지·후원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 시점에서 TKR-TSR 연결 및 에너지 협력 분야 외에 가장 유망한 분야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가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현재 IT 시장의 최대 구매자임과 동시에 향후 IT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e-Russia’의 기치 아래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사업에 열의를 갖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시스템 통합 등 IT 수출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IT 강국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여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¹⁴¹⁾

러시아의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민간자본의 대러 투자 진출에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이 가장 전도유망한 투자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은 TKR-TSR 연결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긴밀한 교통협력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철도 외에도 도로, 공항, 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가 교통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실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이익 공유 지점은 상호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통, 에너지,

141) 차 실(2005), pp. 53~55.

IT는 분리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일한 경로를 따라 배치되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유라시아통합인프라’로 집약될 것이다.¹⁴²⁾

2) 남·북·러 3각경제협력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의 돌파구를 여는 진지한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국내 학계에서는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¹⁴³⁾ 한국정부는 재원조달 문제를 둘러싼 한·러 양국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이후 북핵 문제로 빚어진 북·미간의 첨예한 갈등과 한반도 위기 상황을 목도하면서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렇게 된 데는 한·미 동맹체제에 긴박되어 미국의 견제 가능성을 과도하게 의식했으며,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 쉽게 경도되었던 것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한·러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실익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러 3각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제때에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에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양국간 실질적 관계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를 한국의 국가전략 실현에 견인할 수 있는 유인 동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이미 ‘자본부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고, 더구나 중국,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이 러시아의 거대한 시장 공략과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목표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142)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파이프라인사업에서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철도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러시아철도공사(RZD)의 자회사인 ‘트랜스텔레콤’은 TSR 통신망 사업의 주체이며 이 회사가 TKR-TSR 연결사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143) 이재영(1999), pp. 87~113; 성원웅(2000), pp. 53~122; 신영재(2000), pp. 3~23; 장덕준(2003), pp. 293~322.

있어 한국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 이래 북한과 러시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상당 부분 복원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치·안보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의 실질협력 증진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교역규모는 양국간 잠재적 거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① 무역불균형 심화 ② 제한된 수출입 품목 ③ 극동지역에 치중된 무역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과거 소련 시기와 비교하여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서 5% 수준으로 감소한 현실은 북·러 경제협력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한다. 최근 수년 간 교역증가율은 연간 10~2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임업, 건설업, 농업, 광업 분야에서 북한 노동력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요소들이 북·러경제협력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대러 채무상환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경제협력의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러 간 경제협력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노동력 수출에 의존한 지방단위 협력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양국간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유효하면서도 긴박한 과제는 역시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가 중재자로서 갖는 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4차 북·러경제공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논의는 ‘남·북·러 3각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북·러 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북한의 대러 채무 약 80억 달러에 대한 조정문제가 해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¹⁴⁴⁾ 북·러 간 탕감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겠지만 어떻

144) 변화는 2006년 12월 17~22일 세르게이 스토크르크 러시아 재무차관과 김영길 북한 재무성 부상의 회담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대러 채무 상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서 러시아는 과거 북한에 대해 주장했던 ‘선 채무 상환, 후 경험 재개’의 원칙에서 물려나 총 부채의 80% 탕감을 제의하여 북한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다시 러시아는 모스크바의 「제4차 북·러경제공동위원회」에서 채무

게든 2007년 말까지 양측의 지도자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은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¹⁴⁵⁾

남·북·러 3각경제협력은 북한이 노동력 또는 건설자재 등을 제공하고, 남한과 러시아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북한이 에너지·경제난 해소, 미·일의 경제제재에 대한 돌파구 마련, 대중 의존도 대비 차원에서 북·러 간 경험 활성화와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 적극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며, 과거 기술, 설비,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로 남한만을 고려했으나 이제는 러시아도 소요자본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 북한내 경제적 이권 확보,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민간부문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상업적 타당성이 검토된 대상이라면 적극적인 해외투자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분명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남·북·러 3각경제협력’을 시작할 것인가? 이미 양자간 협력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소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며, 남·북·러 3국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측이 제안한 대로 러시아 극동의 탄광개발 및 벌목 분야에 남북이 공동진출하여 생산된 석탄과 목재를 투자한 몫에 따라 분배하거나,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 북한이 노동력, 유리 등 건설자재를 제공하고, 한국의 건설업체가 공동투자자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구소련 지원하에 건설된 북한의 정유(승리화학)·제철(김책제철) 등 기간 산업시설의 개건·현대화 사업, 동평양·평양·북창 등 3개 화력발전소의 개건·현대화 사업, 블라디보스토크-청진 간 대북 송전사업,

의 90% 수준대의 탕감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전액 탕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5) 러시아의 입장에서 대북 차관 탕감은 실리를 취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북한이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한국의 대러 차관 탕감과 함께 상계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나진-핫산 철도현대화사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에너지협력¹⁴⁶⁾

현재 한·러 에너지 협력은 석유, 가스, 전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탐사·개발 사업, 도입 사업, 수송인프라 건설 사업, 석유·가스 가공 및 정제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한·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구도가 부재한 가운데 각기 참여주체별로 분리되어 논의·계획·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논의 및 계획에 투입한 노력에 비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사업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에너지 자원’이란 경제성 평가를 기초로 국내외 관련기업들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니다. 러시아에게 ‘에너지 자원’이란 이미 러시아의 강대국화를 실현하는 외교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유라시아공간에서 펼쳐지는 신거대게임에서 러시아의 지전략이 투사되는 ‘카드’가 되었다.¹⁴⁷⁾ 2003년부터 푸틴 정부는 국내 에너지기업에 대한 국가 간섭과 통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조정·통제하는, 한마디로 국가권력과의 일체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다면 한·러 에너지 협력의 잠재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과연 양국이 ‘에너지 협력’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을 상호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 협력’에서 협력의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논의는 에너지 자원 그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한·러 양국 관계의 위상과 성격 규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에너지 협력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포괄적 경제협력의 성격을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146) 아래의 내용은 이성규 외(2006)에 기초하고 있음.

147) 고재남(2006).

필요하다. 앞서 6장 2절에서 언급한 대로 양국 정부간 ‘전략적 투자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금까지의 행태 처럼 에너지 협력 사업도 개별 프로젝트 별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러시아측이 한국측의 투자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각종 사업(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과 하나의 통합된 package로 묶어서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자원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 지역으로부터 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호혜적 원칙 아래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협력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안정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증대하기 위해 자국의 석유·가스를 도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입각하여 하류부문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와 상·하류부문에 교차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석유·가스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향후 동북아지역을 연결하는 에너지수송망이 구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리고 러시아의 정책 변화로 동북아지역에도 러시아와 상·하류 부문에 대한 교차투자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러시아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신에 수송노선 선정, 가격 및 공급물량 확보, 매장지 개발 참여 등과 관련된 한국의 요구 조건을 러시아측에 제시하는 협상의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 한국의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과 로스네프트(Rosneft) 등 국영기업들과 기업 차원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내 개발권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에 외국기업이 주도해 왔던 사업권도 점차 러시아 국내 기업에게 넘여가고 있다. 점차 동시베리아·극동지역 대부분의 매장지에 대한 개발권과 수출권한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 등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의 국영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더 좁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간 협력의 단위에서 다양한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간 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신뢰가 축적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우선 낮은 단계의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사업부터 추진한 다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면 높은 단계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등의 단계로 심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러시아 측이 한국과의 투자협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에너지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일정, 에너지 자원 해외도입 전략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수준을 조정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 단계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은 연해주 등의 정유 화학단지와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사업이 될 것이다.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다면 연해주는 그 집결지가 될 것이다. 동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 공급된 대규모 원유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최종 소비지로 수출되려면 중간 물류기지로서 대규모 석유타미널과 접안시설 등이 연해주에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 지역에는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에 두 개의 소형 정유시설이 있을 뿐 크래커 등 대형 석유화학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단순한 원유 수출보다는 이를 가공, 처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고도화 정책 구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석유화학산업 단지 조성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협력 분야에서 기업간 전략적 협력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위험도가 높고 장기·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관련 기금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출

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개발과 관련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의 해외자원 탐사·개발·생산 등 선도적 투자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공기업들과 민간에너지기업이 보유한 에너지개발 예산, 전문 인력, 정보력 등으로는 서방의 메이저 기업이나 자금력을 가진 일본 기업, 중국, 인도의 국영기업 등과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¹⁴⁸⁾ 따라서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개발 관련 기업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국가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러시아의 극동과 동시베리아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착수된 에너지 협력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러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에너지를 외교안보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푸틴 정부의 경향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간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러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점유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하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단계에 있는 아시아의 각국은 실제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공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역내 국가와의 장기적인 에너지 협력을 도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다자간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동북아 역내 에너지 교역을 활성화하고 시장자유화를 추진하여 동북아 에너지공동시장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동북아에너지 협력협의체’와 같은 다자간 협력틀이 구축되어야 한다.¹⁴⁹⁾ 이 경우에 있어 EU의 정책은

148) 한국의 에너지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에너지 분야의 세계 50위, 59위 기업인 미 옥시덴탈사와 유노콜사는 각각 7,250명과 6,980명이고, 일본 전체의 에너지 전문 인력도 3,500명이나 되지만 한국은 고작 270명에 불과하다(오영일(2005) 참고).

149) UN ESCAP은 2006년 총회에서 역내 에너지 공급자 및 수요자간의 에너지 인프라 및 에너지 이슈의 조정 메카니즘 구축을 통해 역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거시적인 협력 틀로 ‘범아시아에너지시스템(TAES: Trans-Asian Energy System)’ 구축을 발의했다. 지난 2007년 8월 2~3일 한국에서 TAES 구축을 위한 착수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 회원국들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양자협상을 체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EU 차원의 다자간 협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단계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EU처럼 공동의 대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에너지 협력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약하지만 2005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설립된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의 위상을 역내 다자간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이 협의체에 중국과 일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내야 한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구도에서 중국과 일본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송 및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다각적인 투자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U의 에너지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히 공급자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양자협상에 몰두하고 다자간협력체 구도에는 참여 의지가 약한 러시아를 다자협력구도에 유인하는 데 있어 이들 국가들과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¹⁵⁰⁾

라. 철도협력

현재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TKR-TSR 연결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대화 방식 및 수준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 대륙철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동의와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대북 영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TKR-TSR 연결은 한·러 교통협력의 중대 현안이므로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한·러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TKR-TSR 연결에서 북한철도 통과노선 선정 및 북한철도 현대화 비용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150) 백 훈(2005), p. 131.

를 적극 활용하는 접근을 구사해 왔다. 한국은 정책의지를 관철하는 우회로(迂廻路)로 남·북·러 3자 회의체를 활용하고, 북한을 설득·회유·압박하는 역할은 러시아에게 부여해 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북, 대러 협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3자 협의 채널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¹⁵¹⁾ 그러나 이제 한·러 양자 및 남·북·러 3자 협력체제를 동시에 가동시켜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대북 압박·설득시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러 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장기간 러시아의 중개 역할에 의존하는 것도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확인하고, 입장의 균열지점을 찾아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다음 동북아 지역주의에 내재된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조를 TKR-TSR 연결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양자·삼자·다자간 회의체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¹⁵²⁾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구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를 비롯해 TCR 등 러시아를 우회하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의 활성화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대안노선들이 TSR의 위상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중 삼자 대화의 출현은 러시아로 하여금 대한반도 철도협력대화에서 지금까지 구축한 상대적인 우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151) 성원용(2005), p. 54.

152) TKR-TSR 연결사업에서 ‘철도’란 그저 단순한 물리적인 교통인프라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지역주의, 세계질서의 재편 등과 같은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정치의 횡단선’이며, 이 과정에서 국익을 실현하고 극대화하려는 국가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게임의 공간’이다. 단기간 내에 매우 상이한 관련 국가들의 철도운영 주체들을 일원화하고, 이해관계를 통일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바, 다양한 방식의 양자·삼자·다자간 회의체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TKR-TSR 연결사업에 뛰어들도록 유인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¹⁵³⁾

다음으로 대러 협상의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물류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TSR 운임이 해상운송 및 보스토치니항을 경유한 노선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운임 인하에 대한 러시아철도공사의 공식적인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러시아가 TSR 운임 인하와 관련해서 한국측이 요구하는 대로 10~30% 인하된 특별운임 조건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의 TSR 운임인상 조치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호된 비판을 받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다.¹⁵⁴⁾ 이러한 정책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거대한 오일달러의 유입으로 더 이상 외화수입을 위해 통과수송에 낮은 요율을 책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 외화유입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지 않는 한 TSR 운임이 과거의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사실 최근 러시아의 TSR 운임인상 조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운임 그 자체의 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결정한 시기에도 있었다. 대다수가 지적하듯이 해상운송 운임과의 가격경쟁구도에서 적기(timing)를 잘못 선택한 측면이 크다.¹⁵⁵⁾ 한 마디로 해상운송 운임이 인하하는 시기에 오히려 러시아는 TSR 운임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¹⁵⁶⁾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153) 성원용 외(2005), pp. 221~222.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달리 TKR과의 연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동북3성을 중심으로 경의선 연결 이후 TKR과의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표출하고 있으며, 국제운송로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구간 및 변경지역의 철도역에 대한 개선 및 확충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러, 남·북·중 삼자대화의 동시 가동은 중국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반도 철도협력대화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4) 2006년 1월 보스토치니항에서 부스롭스카야역까지 컨테이너 운임은 약 30% 인상되었으며 회수되는 공컨테이너의 운임은 7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통과물동량이 급감하자 2007년 2월 1일 러시아철도공사는 민간기업의 차량(rolling stock)을 이용한 컨테이너의 통과화물 운임을 20% 인하했다. 그러나 TSR을 통한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Merkusheva(2007), pp. 44~47.

155) Tsuji(2006).

156)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40피트 컨테이너의 해운운임이 2005년 2,100달러에서 2006년 중반에는 1,800달러로 인하되었다. 반면에 철도를 통한 운송은 약 2,000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

대러 협상전략은 러시아측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운임의 일방적인 인하 요구보다는 해상운임과 연동하여 TSR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율체제를 수립한다는 원칙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다.

TKR-TSR 연결사업을 환동해권 복합운송네트워크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러 3국 모두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TKR-TSR 연결을 위한 pilot project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착수가 곧바로 나진-개성 간 TKR-TSR 연결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⁵⁷⁾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건대 부산-나진-핫산-TSR로 연결되는 노선은 현재 부산-보스토치니-TSR로 연결되는 한·러 복합운송노선과 장기간에 걸쳐 경쟁구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러시아 교통부는 연해주 및 하바로프스크주에 위치한 극동지역 항만들이 이미 처리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항만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¹⁵⁸⁾ 현재 극동지역에는 낙후된 항만물류시설로 인한 객관적인 처리능력의 부족 외에도 복잡한 소유구조와 비효율적인 항만운영으로 상하역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¹⁵⁹⁾ 이에 RZD는 국제운송로의 발전을 위해 해운항만과 철도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극동항만은 항만·철도 복합운송체계의 효율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철도운임체계를 도입해도 항만 하역회사들이 상하역비 및 부대비용을 무분별하게 인상함에 따라 러시아교

모 화주들은 선사로부터 20%의 특별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도의 운임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Merkusheva(2007), p. 46.

157) 2006. 7. 23 북한의 김용삼 철도상과 러시아철도공사의 야쿠닌 사장은 면담 이후 의정서를 통해 “양국은 두만강-나진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나진-원산-세포-평산-개성을 잇는 한반도중단철도 재건에 합의한다”고 TKR-TSR 연결노선에 대해 밝혔다.

158) 「러시아 교통체계 발전(2010~2015)」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항만 개발에 742억 6,300만 루블(약 28억 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것은 전체 항만인프라 투자예산 중 42%에 해당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총 2,800억 루블의 민간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인터팩스, 2007. 9. 26. РЖД, Обзор СМИ, радио и ТВ (<http://press.rzd.ru>)에서 재인용.

159)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나호트카에서 개최된 해운회의에서 “컨테이너가 항만 지역에서 수주일이나 머물러있다는 것은 추악한 것이다”며 항만에 질서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터팩스, 2007. 9. 26. РЖД, Обзор СМИ, радио и ТВ (<http://press.rzd.ru>)에서 재인용.

통체계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 왔다.¹⁶⁰⁾ RZD의 극동항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최근 RZD의 독자적인 항만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RZD에게 나진항이란 극동지역 항만과의 경쟁 및 대체효과를 노린 중장기 포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동의 일부 항만관계자들은 부산-나진 노선의 활성화로 극동항만의 물동량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¹⁶¹⁾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TKR-TSR 연결을 위한 pilot project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환동해권 복합운송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가시화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환동해 항만·철도 복합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선도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각국은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항만개발 경쟁보다는 장기적으로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물류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적 분담’과 ‘특화된 경쟁’을 기반으로 교통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역내 교역의 확대와 물동량의 증가를 끌어내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¹⁶²⁾ 최근 한·중·일, 러 4국이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훈춘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정기 카페리항로 개설에 합의한 것은 환동해경제권의 발전 가능성과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¹⁶³⁾ 최근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보스토치니항, 자루비노항 등 적극적인 극동지역 항

160) Пресс-релизы ОАО РЖД(2007. 9. 20).

161) 러시아 극동지역은 오래전부터 TKR-TSR 연결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지역개발의 입장에서 TKR-TSR 연결노선이 극동지역을 경유할 경우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항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으로부터의 물동량 처리실적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최근 KOTI·FEMRI가 공동 주관한 Round Table 「Korea-Russia Prospects for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2007. 7. 26, Vladivostok)에서도 극동지역 항만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162)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원동욱 외(2006), pp. 152~166.

163) 2007년 7월 6일 속초에서 한, 중, 일, 러 4국은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훈춘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정기 카페리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총 3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출자회사가 설립되고, 각국이 51:16:16:17의 비율로 투자액을 분담할 예정이다. Mitsuhashi(2007).

만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관계자들의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환동해 항만·철도 복합운송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¹⁶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 항만도시와 철도거점도시 등을 연계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발전협의체 등을 주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단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외형적으로 KORAIL-RZD가 주도하는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과 컨테이너시범운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문제는 논의의 진전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에 있다. 상업적 타당성을 간과한 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함축한 정치안보적 측면에 몰입하여 경솔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일반 민간기업의 단순한 수익사업처럼 접근하는 자세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대러 협상에서 논의의 축을 ‘민간기업 주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만 둔다면 한국이 먼저 투자에 참여하라는 러시아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이러한 접근이 무작정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 오히려 투자와 관련한 대러 협상에서 공격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증대 및 기타 협상조건(운임 등)에서 러시아의 양보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TKR-TSR 연결사업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북핵문제’라는 변수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가정하여 시나리오별로 그에 상응하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북핵문제’의 미해결 상태에서라도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대러 철도협력에 착수해야 한다. 유럽 산업계는 이미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러시아 철도 설비 현대화에 240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제안했으며, 일본도 러시아철도 현대화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도 TKR과 연결되는 TSR이나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석유·가스 매장지와 연결되는 신설 철도노선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처럼 러시아철도

164) 한국이 극동지역의 항만 개발, 또는 복합물류단지 건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한국의 부산, 광양 등의 항만개발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공사의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러시아산 천연자원이나 특수기기 등의 물자로 변제받는 방식의 투자협력이 가능하다. 대러 철도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한국은 일차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신뢰’와 ‘에너지’를 얻고, 결국에는 향후 완성될 TKR-TSR 연결노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이후 북한의 교통인프라 현대화는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철도 현대화와 관련해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협력기구에 의한 대북지원과 Project Financing에 기초한 국제컨소시엄 구성 등이 가장 현실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검토되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협력을 구체화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만일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P/F 방식의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재원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 추진 전담주체의 합리적 설립 및 운영 방안, ② 선도투자는 정부출자 형식으로 부담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③ 민간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재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유인책, ④ 정부의 사업계획 및 비전을 홍보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 민간참여 유도 대응책 등의 조치들이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TKR-TSR 연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처가 현안 중심으로 개별적 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일부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정부, 국책연구소 및 학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련국들의 철도현황, 교통·물류발전전략, 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기본입장과 대응전략, 사업 추진에 미치는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 과학기술협력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는 기존의 미·일 위주의 기술협력을 탈피하여 과학기술 도입선을 다각화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유출 통제에 따른 기술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다. 즉, 러시아의 연구개발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러시아가 보유한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한국은 만 17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기존의 한·러 과학기술협력 성과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2000년 이후 러시아 산업기술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전략 및 그에 합당한 정책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러 과학기술협력은 주로 과학자유치(인력교류)와 공동기술개발(주로 위탁개발)이라는 단기적 목적에 치중했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기술혁신화보다는 정부 지원을 이용한 비용절감의 측면이 매우 강했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과도기적 상황을 활용한 이러한 정책 방향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 있다.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접근시각 차이,¹⁶⁵⁾ 산업현장에서 조기 상용화가 곤란한 러시아 기술의 기본적 성격, 그리고 연구개발·설계·생산 등이 분산된 러시아 연구기관의 특성 등의 한계도 상존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경계 및 통제 강화, 물가상승에 따른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단기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조차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러시아 산업기술정책은 ‘기술보호주의’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¹⁶⁶⁾ 한·러 과학기술협력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165) 한국은 국내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생산기술 현대화 및 한국측의 기술이전 등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술 내용에 있어 한국은 도입기술 및 이를 이용한 생산품이 품질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 보유 여부를 중시하는 반면, 러시아측은 단순히 제품개발 자체만을 중시하고 가격경쟁력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로 인해 최종적인 합의 도출이 어렵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방향과 실천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러 과학기술협력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라는 기본원칙을 공유하면서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방향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인력교류와 공동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전략목표도 러시아의 정책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지금에 있어서는 ‘차별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인력교류의 관심영역을 확산하기보다는 ‘고도화된’ 기술과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 R&D 인력을 확보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한·러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단기적 전략목표도 러시아의 ‘대국굴기(大國崛起)’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전략목표, 즉 장기적인 협력 기반과 상호호혜적인 다차원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과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 기업과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축적한 인력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 기존의 인력교류 및 공동기술개발 사업들은 한국에서의 운영주체가 각기 다르고 주로 일회적인 프로젝트별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접촉 및 협력 창구가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제는 단기적인 일회성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입된 연구인력들을 조직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운영주체별로 실행된 접촉 및 협력 창구를 ‘공공재’로 전환하고, 더불어 러시아와 공동개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을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화·네트워크화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러

166)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아직은 확고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정책을 변화시키고 투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연방 붕괴 이후 과학기술기반의 약화가 곧바로 회복될 수 없으며, 2000년 이후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어도 그것이 탄력을 받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용원(2005a), p. 45.

과학기술협력의 제도화와 이를 운영할 조직체계화가 필요하다. 과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하에 구축된 과학기술공위원회의 활동은 제도화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며, 몇몇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협력센터는 정보수집과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한·러 과학기술협력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기관이 소단위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난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¹⁶⁷⁾ 그리고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단기적 전략목표와 장기적 전략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창구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일한 한·러 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신뢰를 얻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¹⁶⁸⁾ 또한 이것은 자체적인 협력라인을 구축하고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국내 중소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러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해서 기술협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협력과정 그 자체를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고려한다면 호혜적 원칙 아래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방식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 즉 러시아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과 단순히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라인을 구축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한국이 원하는 기술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최근 러시아는 산업기술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연구기관들에게 목적지향적 R&D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¹⁶⁹⁾ 따라서 앞으로는 러시

167)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의 정부조직은 물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각종 시장개척단 및 해외진출사업이 독자적으로 한·러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한·러 과학기술협력 실태에 대한 통계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68) 러시아는 대표기관을 통한 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신력이 있는 단일한 접촉 및 협력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이전 및 분쟁해결에서의 통제력을 제고하려는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69) 여기서 말하는 ‘목적지향’이란 차후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혁신기술인가를 의미

아 정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개발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독립된 개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연구주체들간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과실을 양국이 나누어 가진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과학자 유치와 위탁개발에 치중된 협력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향후 양국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지식재산권 등 법률적 분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공유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협력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핵심연구기관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기관별, 지역별로 협력구조를 다면화·복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 산업기술정책의 정책방향 중 하나는 ‘탈중앙집중화(Decentralized)’로 집약되고 있는데, 과학도시, 테크노파크, ITC 및 TTC(Technology Transfer Center)와 같은 산·학·연 연계기관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고 목적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아카데미 소속 혹은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을 기업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러시아 R&D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 제약이 크기 때문에 공공 R&D 기관의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R&D 예산체계에 편성된 중앙의 연구기관들 외에도 목적지향적 R&D 프로그램과 국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아카데미를 필두로 한 다양한 연계조직 및 하부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외에도 대규모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¹⁷⁰⁾ 현재

한다.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개발 결과와 프로그램 실적에 따른 연방 혹은 지방단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170) 한·러 과학기술협력에서 시베리아·극동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는 첫째, 한국 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 민간의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베리아·극동지역은 인구가 작고 대규모 기술산업단지가 부재하며 자생적 시장성 등에 한계를 갖고 있어 해외기술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목적지향적 R&D 프로그램에서 시장경험이 풍부하고 상용화 기술이 발전된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시베리아·극동지역이 아직은 과학기술협력에서 ‘처녀지’에 불과하지만 향후 그 발전 잠재력에 주목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모하기 전에 기회를 선점하는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바. 기타

1) 한민족네트워크 구축과 고려인 활용¹⁷¹⁾

러시아의 고려인¹⁷²⁾은 21세기 ‘다국적 한민족공동체(多國籍 韓民族共同體)’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향후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과정,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인적 자산’이다.¹⁷³⁾

경제영역에서 ‘재외동포’의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¹⁷⁴⁾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인’은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한국의 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까지 진행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되었고, 러시아의 과학기술 역량이 모스크바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편견 속에서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둘째,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경우에도 설립된 총 6개의 연구센터 중 시베리아·극동지역에 위치한 연구센터는 1개에 불과했다. 한중만·성원웅(2001), pp. 180~181.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송용원(2005b), pp. 134~161.

171) 이하는 성원웅(2004), pp. 191~196의 내용을 축약·수정한 것임.

172) 현재 재외동포의 숫자를 6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흔히 ‘고려인’으로 지칭되는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는 약 50만 명에 달하고, 러시아에만 대략 1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소련 지역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약 23만 명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73) 최우길(2004), pp. 49~112.

174) 최우길, 위의 글, pp. 86~87.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¹⁷⁵⁾ 최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권에 정착했던 고려인들은 구 소련 붕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으로 인한 경제붕괴, 일부 국가들의 민족차별 및 정치불안 등을 이유로 러시아로 귀환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해주로 귀환하고 있다. 한국과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러 진출이 활성화된 연해주 지역에 이처럼 한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려인’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때,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이들 인적자원을 한·러 경제협력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비전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연해주 고려인의 미래는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매개자이자, 통일한국의 대륙문지기로서의 희망”¹⁷⁶⁾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잠재 역량을 개발하며, 이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려인은 우선 한국의 시장 확대와 현지 투자 진출에 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다. 고려인은 현지사정에 밝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대러 시장개척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인들의 언어소통의 장애, 정보 부족과 문화적 이질감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¹⁷⁷⁾ 또한 최근 러시아 고려인 사회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재력가와 중견기업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이들이 점차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재러 동포들과 한국 투자자와의 연대,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려인 기업가간의 연대, 고려인들의 모국투자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러 비즈니스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현지 진출하는 기업인들에게 역량이 있는 고려인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능

175) 한종만·성원용(2001), pp. 192~193.

176) 김종현(2004).

177) 실제로 현지에 투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은 상당한 교육수준을 받은 고려인들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도움 덕분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기업의 현지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을 담당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고려인(기업가)과 한국 투자가와의 성공적인 연결 사례 등을 DB로 구축하는 사업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고려인 사회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비단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달리 ‘분산의 광범위성’¹⁷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한민족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 사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재외동포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실태가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재외동포정책’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역에 특화된 ‘재러동포정책’¹⁷⁹⁾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연해주 고려인 자치구역 건설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러 외교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¹⁸⁰⁾ 사실상 국경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불필요한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고, 민족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치권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들이 조기에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현지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고려인들의 생존기반 강화, 한국 기업의 대러 진출 가속화, 러시아의 지역개발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대두만강개발사업(GTI)과 환동해경제협력

향후 두만강유역개발프로그램(TRADP)과 연계된 정부·민간프로젝트에서

178) 해외 한민족은 세계 173개국에 모두 630만 명이나 흩어져 살고 있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해외 한민족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 즉 미국(216만 명), 중국(215만 명), 일본(90만 명), CIS 러시아(50만 명) 등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들 지역에 집중되는 ‘분산적 집중’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해외 유대인 860만 명 중 74%는 미국에, 화교 5,500만 명 중 91%는 아시아에, 해외 일본인 73만 명 중 85%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하면 한민족의 ‘분산적 집중’은 네트워크 구축에서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임혁백(2007), p. 14.

179) 심헌용(2003), pp. 117~132.

180) 심의섭(2004), pp. 343~344.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1992년 UNDP의 지원하에 남·북·중·러·몽골이 참여한 TRADP는 동북아지역주의에 내재된 ‘경쟁적’ 구조 때문에 관련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도 및 경제활동을 일치시켜 나가고, 상호 연계된 인프라망을 건설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지역 차원의 통합적 협력보다는 역내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프로젝트별로 경쟁함에 따라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표 6-1. GTI 제9차 5개국 위원회 선정 「GTI 신규 프로젝트」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비용 / 재원조달
교통	① 동북아 페리 루트 국경 인프라	트로이차-속초-니이가타 간 정기항로 개설	5만 달러/민간협력투자
	② 자루비노항 현대화	자루비노항 컨테이너터미널 건설공사	8억 달러/민간협력투자
	③ 몽골-중국 간 철도 타당성 평가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철도 상세도안 마련	50만 달러/민간협력투자
	④ 훈춘-마하리노 철도운행 재개	GRRC와 NRC간 협정 체결 방안 등 마련	5만 달러/민간협력투자
	⑤ 중국-북한 국경의 중국 도로 · 항만 활용	국경간 수송촉진 협정 체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5만 달러/민간협력투자
에너지	⑥ GTI 에너지 역량 구축	· 에너지위원회 신설 · 에너지 교역을 저해하는 비물리적 장벽 축소	25만 달러/민간협력투자
관광	⑦ GTI 관광산업 역량 구축	· 관광위원회 구성 · GTI 관광가이드 제작 · 백두/장백산 다목적지 관광방안 마련	20만 달러/민간협력투자
투자	⑧ TRADP 회원국 관료 시장경제 교육	TRADP 회원국중 저개발 국가의 관료를 대상으로 시장경제 학습 기회제공	20만 달러/한국 및 관련국가
환경	⑨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	· GTR 월경간 환경영향평가(TEIA) · 동북아 환경기준 표준화	30만 달러/GEF와 회원국 정부
	⑩ 두만강 수자원 보호 타당성 평가	두만강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	5만 달러/Toshiba(일본)

자료: 재정경제부(2007).

노정되었다.

한편, TRADP 회원국들은 지난 2005년 9월 제8차 5개국 위원회에서 TRADP을 10년간 연장하고, 회원국의 Ownership을 강조하는 GTI(Great Tumen Initiative)체제로 전환기로 합의했다.¹⁸¹⁾ 그리고 2007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9차 5개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교통망 확충 및 환경보전 등 10개 프로젝트를 「GTI 신규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중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표 6-1 참고).

▮ 그림 6-2. 대두만강개발사업(GTI)의 지역적 범위 ▮



GTI는 과거 TRADP와 달리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의 틀을 형성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현대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GTI는 북·중, 북·러, 러·중 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 루트를 확보하는 경쟁구도에서 추진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민간자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새

181) UNDP GTI(2005).

로운 항만인프라 건설 및 항로 개설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동해권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물류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한·중·일·러 4국이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훈춘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정기 카페리항로 개설에 합의한 사실은 환동해경제권의 발전 가능성 및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보스 토치니항, 자루비노항 등 적극적인 극동지역 항만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러시아측도 한국의 부산, 광양 등 항만개발 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환동해경제권의 부상에 대비하여 GTI 틀 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동해안지역간 물류중심도시발전협의체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동해안지역 중 소항만의 규모를 확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3) 민·관 협력체제 구축

한·러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에서는 민간기업들이 경제활동의 주체이므로 이들이 양국 경제교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러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위험천만한 사고이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러 경제협력이 협소한 영역의 ‘경제·통상 관계’가 아니라 21세기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담보하는 국가전략의 실현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단기적인 비용 대비 편익만을 고려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목표를 실현한다는 전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최상위의 조정자적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단기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에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시아의 모든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대러 투자 진출을 주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험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제적 수익성 계산에 앞서 국민경제적 편익이 투자의사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현재 러시아에서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형식적·법률적인 측면에서 민간·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거버넌스(governance)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인사가 실질적으로 산업과 경제를 독점·주도해 나가고 있다. 핵심적인 러시아 기업조직들의 수장들은 모두 정부 조직 및 푸틴 인맥과 연결되어 있고, 이사회는 그의 정치권력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최근 푸틴 정부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민간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에너지, 자원 등 전략 분야에서 정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¹⁸²⁾ 이와 같은 푸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보건대, 향후 러시아는 사적소유와 국가관리를 적절히 결합한 1920년대 국가자본주의의 실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정부간 투자협력 사업은 물론이고 순수하게 양국의 민간기업 간 진행되는 투자협력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단계 직전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고, 투자보장 등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장치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중재와 조율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은 원론적으로 그 역할이 구별되어야하는 두 주체이지만, 성공적인 대러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상업적 이득과 국가전략적 이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력자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민간기업은 적극적인 대러 투자진출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대러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위상과 레버리지를 높여주고,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공략과 대러 투자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182) 푸틴의 정책 노선은 한마디로 국가우선주의(in the name of the state)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별한 조치’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얻어내는 ‘전략적 협력’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¹⁸³⁾

183) 중국의 상해해외연합투자주식유한회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관광단지 및 비즈니스단지와 주거지를 합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협약서의 이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협력 협약서’이다. 이 협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정부가 ‘전략적 협력’이라는 이익 공유 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7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본론에서 급변하는 러시아의 경제 및 통상환경을 검토하고, 지난 15년간의 한·러 무역 및 투자현황, 그리고 에너지 협력, 철도협력, 과학 기술협력 등 각 부문별로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들을 분석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장기 대러시아 통상목표와 기본 방향, 그리고 분야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한·러 경제관계 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재평가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시장진출을 현저히 확대하기 위한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통상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한·러 경제관계의 지전략적(地戰略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로부터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현재 러시아는 체제전환기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푸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과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라시아대륙의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맹주(盟主)로서 ‘대국굴기’(大國崛起)의 야심찬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온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국내 산업을 다각화하고, 석유·천연가스 산업과 더불어 IT, 석유화학, 조선, 나노 및 자동차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지역균형발전론’에 입각하여 에너지, 교통·물류 부문을 중심으로 낙후된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강자로 탈바꿈하고 있는 러시아는 조만간 가시화될 WTO 가입을 발판으로 시장경제 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 가입은 러시아 경제의 체질개선을 가져오고, 대외관계가 개선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후 예상되는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은 국내 기업의 대러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급변하는 러시아의 경제 및 통상환경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1998년 모라토리엄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이 굳힌 입지는 약화되고, 결국에는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선 러시아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한국의 대러 통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협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협력,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공 협력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며,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금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 및 통상협력 수준은 수교 당시에 양국이 기대했던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협력 분야는 교역의 증가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지역에서는 한국의 대러 투자 및 교역이 오히려 줄어

드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한·러 경제관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교역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러시아와의 호혜적인 투자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고유가를 기반으로 거대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러시아 시장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처럼 시장 선점의 기득권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해서 한·러 경제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우선 경제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미래가 밝다. 또한 푸틴 정부의 산업다각화 정책, 지역개발 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석유·가스 정제, 건설, 유통 등 신성장 산업이 시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잠재력이 있는 미성숙시장이라는 점도 한·러 경제 및 통상협력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산업구조가 아직까지 일반 소비재와 내구재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시장진출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향후 러시아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한국 기업이 선진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잠재력과 위험 요인이 병존하는 현 시점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진출의 호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의 방향을 해륙(海陸)국가로 전환한다면 러시아는 해양-대륙 복합화 전략 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TKR-TSR 연결로 구현될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 그리고 극동·동시베리아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구현될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road)’ 사업에서 한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동북아 구상이 한·중·일 3국체제에 갇힌 소지역주의를 넘어 ‘열린 동북아’로 나간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서로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협력 공간인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러·중·일 3자 관계가 중·일의 상호 견제로 난관에 빠져있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 또는 일본 중의 한 나라를 선택할 경우 러시아는 중, 일 중에서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은 중·일간 경쟁 구조에서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반도가 과도하게 이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고,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우회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내세워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유라시아 통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열리는 유라시아대륙의 지평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러시아와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러시아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로 새로운 대러시아 통상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확대의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 기업의 현지생산체제 구축 등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정보와 서비스제공을 전담하는 협력창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에서 공격적인 수성(守成)의 시장 진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 만일 양국의 이해관계의 접점을 확인한다고 할 때,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의 교두보이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은 한국의 대륙 진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로드맵을 실천해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FTA가 단순한 관세철폐 협정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국가간 시장통합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한다면, 향후 한·러 FTA 체결 협상도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국간 긴밀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CEPA 체결을 가정하여 협상과정에서 국가전략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하고, 향후 한·러 CEPA가 가져올 경제적, 경제외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확대의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이익 공유라는 대원칙이 견지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이를 지지·후원할 수 있는 사업전략으로는 TKR-TSR 연결 및 에너지 협력 분야 외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가 유망하다. 향후 한국 민간자본의 대러시아 투자진출에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도 전도유망한 투자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KR-TSR 연결사업 외에도 도로, 공항, 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도 투자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재자로서 러시아가 갖는 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아직 북·러 간 탕감의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양측의 지도자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탕감은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한·러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러 경제협력이 21세기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담보하는 국가 전략의 실현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 목표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협상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제적 수익성 계산에 앞서 국민경제적 편익이 투자의사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특히 최근 푸틴 정부가 에너지, 자원 등 전략 분야에서 정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면 양국의 민간기업 간에 진행되는 투자협력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단계 직전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고, 투자보장 등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장치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고재남. 2006. 「푸틴 정부 에너지 전략의 국제정치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_____. 2007. 「한·러 관계의 변화와 주요 이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최 「한·러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세미나」 발표문, 서울. (10월 4일)
- 고재호. 2006. 「러시아 극동지역의 진출여건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향」, 『수은해외경제』, 9월호, 한국수출입은행.
-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2005.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
- 권경복. 2007. 「러, 베네수엘라에 최신 잠수함 팔기로」, 『조선일보』, A16. (6월 16일)
- 권원순. 2001. 「한·러 운송협력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경제연구회」 발표문. (7월 11일)
- 김기훈. 2007. 「美 외교독주·동유럽 MD 움직임이 불안심리 자극」, 『조선일보』, A19. (5월 25일)
- 김득갑. 2007. 「한·러 경제협력 증진 방안」, 『황금시장 러시아를 잡아라 - 러시아 진출을 위한 현장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김종현. 2004. 「연해주 고려인의 역사」, 『민중평통』, 제389호.
- 김진현. 2007.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 - 해양화 성공으로 한인, 한민족의 정통성을 세우다」, 『철학과 현실』, 봄호.
- 까로프코, P. A. 2006.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 개발과 한-러 협력 전망」, 『월간 KIEP 세계경제』, 제9권 제8호, 통권9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라린, 빅토르. 2007. 「460만 이주노동자의 땅 러시아 극동지방」, 『자유공론』, 통권481호.
- 박상남·박정호·이종문·김선래. 2007. 『푸틴의 러시아: 권력과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백 훈. 2005a.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시장통합: 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13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 _____. 2005b. 「러시아의 교통체계와 TSR 활성화 전략」, 홍완석 엮음, 한울아카데미.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 성원웅. 2000. 「남·북한의 러시아간 3각 경험추진 방안」, 『정책연구』, 통권 134호, 국제

- 문제조사연구소.
- _____. 2004a.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략과 우선순위 - 산업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 _____. 2004b. 「한·러 經濟協力 活性化 方案」. 『경제정책연구』, 제6권, 3호(겨울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_____. 2005. 「TKR-TSR 연결과 한·러 교통협력의 과제」. 『교통』, 1월호. 한국교통연구원.
- _____. 2007. 「한국기업의 연해주 진출과 한·러 경제협력」. 해외한민족연구소 · 동북아 문화교류협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연해주 진출과 개발」 발표문. (6월 29일)
- 성원용 · 원동욱 · 임동민. 2005. 『대륙철도를 이용한 국제운송로 발전전략 비교 연구: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 송용원. 2005a. 「러시아 산업기술정책」. 한국산업기술재단.
- _____. 2005b.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과 활용방안」. 『시베리아 극동연구』, 창간호.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 신범식. 2000. 「한·러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 사회·문화관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11권, 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_____. 2005. 「유라시아 지역 협력체구상과 한반도」. 『평화통일연구』, 제15집.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_____. 2006.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세력 관계와 신거대 게임」.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파주: 한울.
- 신영재. 2000. 「남북한과 러시아간 삼각경제협력체제 구축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심의섭. 2004. 「장보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년 정기학술회의. 「한국경제발전과 장보고 전략의 재현」 발표 자료집. (10월 8일)
- 심현용. 2003. 「정부의 재러동포정책」. (사)한러시아협회 · (사)통일문화연구원 · 러시아자 연과학아카데미 공동 주최 제1차 한러정책포럼 「참여정부에서의 한·러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및 추진방향 - 한국과 러시아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모색」 발표문. 서울. (7월 30일)
- 심현정. 2007. 「2011년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 4백만 대에 이를 듯」. 『수은해외경제』, 4월호. 한국수출입은행.
- 알렉산드르 제빈. 2004. 「한·러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한겨레신문』. (9월 1일)

- 양문수 · 이남주. 2007. 「한반도경제 구상: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지음. 『한반도경제론』. 창비.
- 에드워드 사이드. 1999.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 오승구 · 김득갑 · Aleksandra Varova. 2006. 「러시아경제 호황과 시장전략」. 『CEO Information』, 제580호. 삼성경제연구소.
- 오영일. 2005. 「발전적 한러 관계를 위한 제안 -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세미나 자료. (10월 18일)
- 외교통상부. 2007a. 『보도자료』. (11월 1일)
- _____. 2007b. 「토요타 저가 모델 자동차 러시아에 진출 예정」. (2월 2일)
- 원동욱 · 성원용 · 안병민. 2006.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와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재정립』. 한국교통연구원.
- 유재형. 2006. 「외국인투자 에너지사업에 대한 압력행사 배경과 전망」. 『수은해외경제』, 10월호. 한국수출입은행.
- 윤명철. 2005. 『광개토대왕과 한고려의 꿈 - 고구려적 세계와 미래한국 비전』. 삼성경제연구소.
- 이대근. 2007. 「文明史的 觀點에서 본 韓國의 經濟發展 - 아직 海洋(海洋)문화권으로 남아야 한다」. 『철학과 현실』, 봄호.
- 이성규 · 류지철 · 이경완. 2006. 『러시아 에너지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 러시아 진출 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재영. 1999.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간 경제협력 방안」. 『국제지역연구』, 제3권, 4호 (겨울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이재영 외. 2006.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6-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 윤성학. 2005. 『21세기—왜 러시아인가?』. 한국무역협회.
- 임혁백. 2007.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발견과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 『국토』, 2월호 (통권 304호).
- 장덕준. 2003. 「동북아 경제협력과 러시아: 남북한-러시아 간 삼각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1호.
- 재정경제부. 2007. 「GTI 제9차 5개국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11월 16일)
- 정여천. 2007. 「한·러 FTA의 전망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주최 제2차 한-러 공동세미나 「러시아 극동

- 과 동북아 경제」 발표문. 서울. (6월 19일)
- 정여천 · 김석환. 2004. 『현대러시아 정치 · 경제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동주. 2005. 『신흥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 차 실. 2005. 「러시아 IT 산업의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향」. 『수은해외경제』, 5월호. 한국수출입은행.
- 최우길. 2004. 「東北亞 經濟中心 實現을 위한 在外同胞 活用方案」. 『경제정책연구』, 제6권, 2호(여름호).
- 한종만. 1999. 「러시아 극동지역 사할린 주에 관한 지역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제3집.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_____. 2001. 「러시아 시베리아 · 극동지역 인구 추이에 관한 분석」. 『한국시베리아학보』, 제3집. 한국시베리아학회.
- 한종만 · 성원용. 2001.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 극동지역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Bardal, Anna B. 외. 2006.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중일 3국과의 경제협력 비교분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고찰」. 『수은해외경제』, 12월호. 한국수출입은행.
- Buryy, A. 2006.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경제발전 계획과 한 · 러 협력 증진의 기회」. 외교 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극동 · 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과 한 · 러 협력」 세미나 발표문. (11월 22일)
- Guin, Anatoly and Sergey Facer. 2007. 「러시아 과학기술의 오늘」. EURASIA, 창간호. 한 · 러 산업기술협력센터.
- Kucheryavenko, Vladimir. 2007. 「접경지역의 러 · 중 협력 - 통합과정의 전망과 장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주최 제2차 한 · 러 공동 세미나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 경제」 발표문. 서울. (6월 19일)
- Popov, Vladimir E. 2005.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투자 동향 및 투자환경」. 『수은해외경제』, 3월호. 한국수출입은행.
- Tsuji, Hisako. 2006. “The Trans-Siberian Railway Route: Connecting East Asia and Europe by Rail.”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 (사)남북물류포럼 주최 「Northeast Asia Logistics 2006 - TAR Northern Corridor, TKR, 남북물류」 세미나 발표문. 서울. (5월 25일)

● 영문 자료

- Allen, Tim. 2006. "Gipfel EU-Russland, Handelsbilanzdefizit der EU25 mit Russland 2005 bei mehr als 50 Milliarden Euro, Russland drittgrößter Handelspartner der EU25." *Eurostat Pressemitteilung*, no. 68, no. 24. (Mai)
- Azulay, Erik and Allegra H. Azulay. 1995. *The Russian Far East*. New York: Hippecrene Books.
- Eurostat. 2007a. "EU-Russia Summit, A EU27 External Trade Deficit of Almost 70 bn Euro with Russia in 2006. Russia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of EU27." *Eurostat News Release*, no. 65. (May 15)
- . 2007b. "Euro Area External Trade Surplus 1.7 bn Euro, 15.0 bn Euro Deficit for EU27." *Eurostat-Indicators News Release*, no. 100. (July 18)
-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Rosstat). 2006. *Russia in Figures, Official Publication 2006*. Moscow: Rosstat.
- Fischer, Steven. 2007. *Financing Merger and Acquisition in Russia*. Moscow: Citigroup.
- IMD. 2006.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Kaplan J. V. 2004. "Managing Next generation IT Infrastructure." *Mckinsey Quarterly*. (Winter)
- Kusznir, Julia und Heiko Pleines. 2005. "Ausländische Investoren in der Erdölwirtschaft." Heiko Pleines und Hans-Henning Schröder Hrsg. *Russlands Energiewirtschaft und die Politik*. Bremen: Forschungsstelle Osteruropa an der Universität Bremen.
- Merkusheva, Victoria. 2007. "Does Transsib have a change?" *The RZD-Partner International*, no. 2. (June-August)
- Mitsubishi, Ikuo. 2007. "Towards Establishment of New Ferry Service Crossing Over the Japan Sea (Donhae)." Paper prepared for the 2007 KOTI Conference "Promoting Strategy of Multi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July 27, Vladivostok)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07. "Overseas Direct Investment by Countries or Regions."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6*.
- Park, Sa-Myung. 2006. "Beyond Northeast Asia Toward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on Regionalism." 『동남아시아연구』, 제16권, 2호.

- Romanova, Tatjana. 2007. "EU-Russian Relations in View of 2007: Search for a Concept of New Relations," in Peeter Vahtra and Elina Pelto eds,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the EU and Its Eastern Neighbours*, pp. 9-26. Turku, Finland: The Pan-European Institute: Turku, Finland.
-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07. "Value of Japan's Exports and Imports by Principal Country and Destination," *Japan Monthly Statistics*. (June 15)
- US Census Bureau. 2007. "News Releases: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US Cens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ew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 UNCTAD. 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 UNDP GTI. 2005. *Greater Tumen Initiative. Strategic Action Plan for the Period 2006-2015*. (September 2, Changchun)
- Vahtra, Peter and Kari Lihuto. 2006. "Expansions or Exodus? Trends and Development in Foreign Investment of Russia's Largest Enterprise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 1.
- Vassiliouk, Svetlana. 2001. "Comments Japan-Russia Contemporary Relations: Will the Impasse Ever End?" *International Affairs Review*, vol. 10, no. 1.
- World Economic Forum. 2007.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2007*. Geneva, Switzerland.
- Ševcova, Lilija. 2007. "Russlands Wille zur Weltmacht, Autokratie, Energie, Idologie." *Osteuropa*, vol. 57, no.4, pp. 33-52.

● 논문 자료

- Глазьев С. 2007. "О стратег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5.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1995.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1.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1.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 Жизнин С. Ж. 2006.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России," *Энергия*.

- ИМЭМО. 2007.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Прогноз до 2020 года*.
- Кондратьев В. 2007.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и: проблема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Год планеты: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безопасность. Выпуск 2006 года*. Москва: Наука.
- Котенов, В. В. 2007. "Российско-герм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Бизнес-путеводитель Германия-Россия. 5-е издание*. Berlin: Wegweiser.
- Кузнецов А. 2007.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йских прямых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МЭиМО*, no. 4.
- _____. 2006. "Два вектора экспансии российских ТНК - Евросоюз и СНГ." *МЭиМО*, no. 2.
- Кузязев К. 2007.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России в 2006 году: начал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4.
- Ли Чжэ Ен.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МЭиМО*, no. 9.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7. *Обзор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 2006a.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сред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2006-2008 годы)*.
-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 2006b. Сценарные услов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8 год и на период до 2010 года.
- Особен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2005.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Дынкина и В. Кондратьева. Москва: Наука.
-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пыт США. Ориентир на глобализацию. 2002. Под редакцией Э. В. Кириченко. Москва: Наука.
- РЖД, Обзор СМИ, радио и ТВ. <http://press.rzd.ru>에서 재인용.
- Россий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на перепутье. Что мешает нашим фирмам ста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 2007. Под редакцией Е. Г. Ясин

а. Москва: ГУ-ВШЭ.

Росстат. 2005.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И ЗА РУБЕЖ В 2005г.*

_____. 2006а.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05,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осква: Росстат.

_____. 2006б.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в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_____. 2007. *Объем росси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копленных за рубежом.* Москва: Росстат.

Пресс-релизы ОАО РЖД. 2007. 9. 20.

Смирнов В. 2006.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11.

Сурин В. 2005. “Корейский манифест,” *Золотой Лев*, no. 69-70. <http://www.zlev.ru>

.....

Executive Summary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Russia

Jae-Young Lee *et al.*

It has been 17 years since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normalized. Recently, economic cooperation has steadily developed in trade-investment cooperation fields, along with energy, railroad, science-technology and aerospace industries. According to 2005 data,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approximately US\$10 billion and Russia was the 12th largest importer of Korean goods and the 16th largest exporter to Korea. By the end of 2006, the accumulative amount of Korean investment toward Russia was \$371,560,000, and Russia is marked as the 28th largest recipient of Korean foreign investment.

For Korea, it should be noted that Russia has become a subject to the actively projected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strategies of Korea. If Korea expands its 21st national strategy orientation toward the Eurasian continent in order to optimize the Korean peninsula's opportunities, Russia is considered the key state playing a corridor role for realizing the 'ocean-continent combination strategy.' Along with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Russia also shows keen interests in developing the 'Iron Silkroad' and the 'Energy Silkroad,' connecting the Transkorean-Transsiberian project (TKR-TSR). The 'Energy Silkroad' is, specifically, planned to bridge the Northeast Asian energy networks, and Russia shares common strategic interests in these networks with Korea.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trategic values of Russia, Korea should prepare for key strategy schemes and practices in trade by sector toward Russia.

First, local productions are recommended, rather than exports, so that prices could be competitive. Also, Korean enterprises must enter the Russian market more actively. Particularly, in order to revitalize investment and establish a local production system by Korean companies, it should be urged to simplify complicated cooperation units that can take charge in investment information and relevant services. Meanwhile, building the transportation network for developing, producing, and distributing goods to the Russian local market should proceed in order to realize market penetration strategies. When the competition in the metropolitan markets such as Moscow has already reached its peak, Korean companies should differentiate and diversify their strategies by region. In this aspect, the Siberian and Far Eastern regions should be given priority. At the same time, a treaty for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with Russia should be accomplished as soon as possible if Korea expects to carry out the roadmap of the Great Economic Zone and an FTA. When noting that an FTA has been developed as a comprehensive national market integration agreement, the Korea-Russia FTA negotiations should be focused on fields of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and further optimized to promote closer industrial cooperation project.

Second, Korea seeks to develop a ‘strategic cooperation for investment project’ that maintains the principle of sharing common interests with Russia. In addition to the modernization of infrastructure concerning regional development and IT-related fields, the project of connecting the TKR-TSR lines and developing energy cooperation fields are the very proposals that Russia would support. Also, it is noted tha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such as roads, airports, and ports are meaningful markets for private investment. Furthermore,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when establishing a large-scale distribution complex in association with Russia and visualizing the results of an ‘Economic Cooperation Triangl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at the same time. Indeed, the Russian government has shown strong interest in the Economic Cooperation Triangle in order to develop its underdeveloped far-eastern region, assure economic interests in North Korea, and influence the Korean peninsula. Russia actively invests its accumulated capital into foreign markets without hesitation if the feasibility of

business is examined. Particularly, in a last few years, the possibility of an 'Economic Cooperation Triangl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is growing, since the approximately \$8 billion financial oblig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hich functioned as the key obstacle to their economic cooperation seems to have been solved.

Third, it is required to reinforce energy cooperation in more concrete ways. To achieve this goal,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elevated to strategic levels, rather than remaining at level of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Once the 'strategic cooperation in investment' is shap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particularly desirable to invest in businesses such as IT, shipbuilding, construction, plant industries, etc., in which Russia has great expectations for Korea's participation. Meanwhile, establish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to guarantee Korea's energy supply security with consumers of Russian energy, and preparing the policy to assure negotiation conditions in Korea's favor should be considered. Also, in the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for Russia, Japan can be considered as a partner seeking common goals and investment cooperation in order to secure Russian energy transportation and supply security, as well.

Fourth, to promote the TKR-TSR project, the levels of conversation should be diversified. In case of pressuring and persuading North Korea, Russia is the key state that South Korea could take advantage of. Thus, building Russia's confidence is one of most urgent tasks of Korea, while preventing excessive reliance on Russia's role in North Korea issues. Such an attitude might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South Korea's negotiation capability. To persuade Russia of Korea's position, the Second Railroad Operators Council of South & North Korea and Russia sh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Also, recognition of the Najin-Khasan Project between Korea and Russia as a pilot project connecting the TKR-TSR line and activation of the Combined Transportation Network of the East Sea Ring is needed. Here, Korea should reinforce the network of ports and railroads in the East Sea region, convincing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is win-win project. On the other hand, practical discussion of the creation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Conference for Key Distribution Centers, linked with port and railroad cities and actively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mid to long term is needed.

Fifth, scientific technology cooperation, sharing the basic principles of reciprocal cooperation, should proceed within the frame of systematically coordinated short- and long-term strategies. The short-term strategy focusing on the exchange of human powers and cooperative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formulated within the distinction and concentration principle. Rather than expanding quantitatively, it would be better to narrow the strategic fields in order to assure development of high-technology and experienced profess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taff. Great synergy is expected from connec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Along with networking with Russian experts who have had experience working in Korean companies and institutions, establishing an official cooperation would help to overcome the fragmentary situation of current Korea-Russia cooperation and, eventually, exert positive influences over Korea-Russia cooperation on science, both for short- and long-term strategies. For the long term strategy especially, we should proceed to develop various cooperation and business models that break from conventions.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existing relationships with key research centers, mainly located in Moscow and supported by the R&D budget of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it would be meaningful to strengthen the corresponding and lesser structures in other regions of Russia. Indeed, there are a number of goal-oriented scientific academies that are interested in technology cooperation, especially in Siberia and the Far East. In this vein, it is urgently recommended that we establish a scientific technology cooperation system with these regions, which have significant scientific technology potential.

Finally, Korea should make full use of the Korean-Russian resources living in Russia, who could play the bridging role between Korea and Russia in areas of economy and commerce. Linking Korean-Russians with Korean investors, stimulating solidarities between Korean and Korean-Russian'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inducing investments by Korean-Russian business people in Korea would consequently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Also, establishing a 'Korea-Russia Business Center (tentatively)' would help to recruit professional Korean-Russians to Korean

enterprises and make a database of successful cases of Korean and Korean-Russian cooperation.

In sum,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developing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When keeping an eye on the recent tendency of Putin's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role and position of energy resour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safety devices demanded by Korean companies facing obstacles and difficulties when starting businesses in Russia.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actively participate as an intermediary in negotiations to guarantee investment by Korean businesses in various private cooperation projects.

KIEP 발간자료목록 | 2006~2007. 12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 · 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 · 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 07-08 한 · 중 교역 특성과 한 · 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 07-09 한 · 중 금융 · 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
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 07-10 한 · 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
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 · 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교회채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웨어 통상 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16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 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제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	---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李載榮)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및 미시간대학교 방문학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ljy@kiep.go.kr)

저서 및 논문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저, 2006)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2007) 외

한종만(韓鍾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LMU) 경제학과 학·석·박사 취득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現, E-mail: jmhan@pcu.ac.kr)

저서 및 논문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연구: 지역주의와 지역통합』(2007)

「에너지를 통한 강대국 러시아의 복귀 가능성과 한계성」(2006) 외

성원용(成源鏞)

러시아 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現, E-mail: wysung@incheon.ac.kr)

저서 및 논문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공저, 2001)

『러시아 교통물류정보 조사』(공저, 2005) 외

이광우(李光雨)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現, E-mail: kwlee@lgeri.com)

저서 및 논문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공저, 2007)

연구자료 07-2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2008년 12월 20일 인쇄

2008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34-2 94320

978-89-322-2064-2(세트)

정가 10,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D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